



부 록

5.31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현황

정책토론회 큐시트

정책토론회 녹취록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5.31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개최 현황



주) · 약칭 : 열린우리당- (우), 한나라당- (한), 민주당- (민), 민주노동당- (노)
국민중심당- (국), 시민당- (시), 한미준- (미래), 희망사회당- (사), 무소속- (무)

I. 시·도지사선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서울특별시	대담토론회	5. 24.(수) 23:00	KBS, MBC	염재호(고려대교수)	강금실(우), 오세훈(한) 박주신(민), 김종철(노) 임종관(국)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MBC	강치원(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이귀선(시), 이태화(미래) 백승원(무)		비초청
부산광역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부산, 부산MBC	김영일(신라대교수)	오거돈(우), 허남식(한) 김석준(노)		
대구광역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대구, 대구MBC	박영석(대구MBC보도국장)	이재용(우), 김법일(한) 이연재(노), 박승국(국) 백승홍(무)		
인천광역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 MBC	염재호(고려대교수)	최기선(우), 안상수(한) 신경철(민), 김성진(노)		
광주광역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광주, 광주MBC	김기태(호남대교수)	조영택(우), 한영(한) 박광태(민), 오병윤(노)		
대전광역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대전, 대전MBC	이영애(단국대교수)	염홍철(우), 박성효(한) 최기복(민), 박준호(노) 남충희(국)		
	대담토론회	5. 24.(수) 14:00	KBS대전	최진혁(충남대교수)	고낙정(미래)		비초청
울산광역시	대담토론회	5. 28.(일) 08:05	울산MBC	신면주(변호사)	심규명(우), 박맹우(한) 노옥희(노)		
	대담토론회	5. 29.(월) 23:10	KBS울산	전성표(울산대교수)	심규명(우), 박맹우(한) 노옥희(노)		
경기도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MBC	염재호(고려대교수)	진대제(우), 김문수(한) 박정일(민), 김용환(노)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강원도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춘천, 춘천MBC, 원주MBC, 강릉MBC, 삼척MBC	김학성(강원대교수)	이창복(우), 김진선(한) 유재규(민), 유승규(국)		
충청북도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청주, KBS충주, 청주MBC, 충주MBC	유재풍(변호사)	한범덕(우), 정우택(한) 배창호(노), 조병세(국)		
충청남도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대전, 대전MBC	송인암(대전대교수)	오영교(우), 이완구(한) 이용길(노), 이명수(국)		
전라북도	대담토론회	5. 24.(수) 10: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김환주(우), 문용주(한) 정근환(민), 염경석(노)		
전라남도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광주, KBS목포, KBS순천,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류한호(광주대교수)	서법석(우), 박재순(한) 박준영(민), 박응두(노)		
경상북도	대담토론회	5. 24.(수) 23:00	KBS대구, 대구MBC, 포항MBC, 안동MBC	임오진(KBS대구보도팀장)	박명재(우), 김관용(한)		
경상남도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창원, 마산MBC, 진주MBC	정상윤(경남대교수)	김두관(우), 김태호(한) 문성현(노), 김재주(국)		
제주도	대담토론회	5. 23.(화) 18:55	KBS제주, 제주MBC	김부일(KBS제주심의위원)	진철훈(우), 현명관(한) 김태환(무)		
		5. 24.(수) 18:50	KBS제주, 제주MBC	김경호(제주대교수)	진철훈(우), 현명관(한) 김태환(무)		

II.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서울특별시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	김민전(경희대교수)	하종삼(우), 김진성(한) 이금라(한), 이수정(노) 이진희(국)		
부산광역시	대담토론회	5. 26.(금) 09:50	KBS부산, 부산MBC	김창룡(인제대교수)	하선규(우), 김주익(한) 김영희(노)	이정향(민)	
대구광역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대구, 대구MBC	박영석(대구MBC 보도국장)	김선애(우), 이경호(한) 정은정(노), 이명숙(국)		
인천광역시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	김민전(경희대교수)	이명숙(우), 김소란(한) 한은재(민), 이옥희(노)		
광주광역시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광주, 광주MBC	류한호(광주대교수)	이명자(우), 박정민(한) 조광형(민), 황차은(노) 이수양(사)		
대전광역시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KBS대전, 대전MBC	최진혁(충남대교수)	이정희(한), 김진화(노)	김인식(우) 권형래(국)	
울산광역시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울산	전성표(울산대교수)	이미영(우), 서정희(한) 이현승(노)		
경기도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KBS	김민전(경희대교수)	양보현(우), 손숙미(한) 김진웅(민), 송영주(노) 박정린(국)		
강원도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춘천, 춘천MBC, 원주MBC, 강릉MBC, 삼척MBC	김학성(강원대교수)	최경순(우), 지명옥(한) 최원자(노)		
충청북도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청주, KBS충주, 청주MBC, 충주MBC	최남식(청주MBC 아나운서)	최미애(우), 강태원(한) 홍정숙(노), 김미나(국)		
충청남도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대전, 대전MBC	권선필(목원대교수)	이명래(우), 이선자(한) 김혜영(노), 박정희(국)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전라북도	대담토론회	5. 23.(화) 10: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이영조(우), 국선희(민) 전준형(노)	한나라당	
전라남도	대담토론회	5. 26.(금) 14:00	광주KBS, 목포KBS, 순천KBS,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이민아(변호사)	국영애(우), 박해숙(민), 고송자(노)	한나라당	
경상북도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대구, 대구MBC, 포항MBC, 안동MBC	임오진(KBS대구 보도팀장)	장길화(한), 김숙향(노) 최해란(국)	민주당	
경상남도	대담토론회	5. 24.(수) 23:00	KBS창원, 마산MBC, 진주MBC	옥원호(경남대교수)	이은지(우), 임경숙(한) 김미영(노)		
제주도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제주, 제주MBC	김부일(KBS제주심의위원)	오옥만(우), 김순효(한) 주해성(민), 김혜자(노)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제주, 제주MBC	김경호(제주대교수)	오옥만(우), 김완근(한) 채관배(민), 서군택(노)		

III. 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담토론회	5. 28.(일) 11:00	☞한국케이블 TV중앙방송,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송준호(안양대교수)	김영종(우), 정홍진(민)	김충용(한)	
중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박명호(동국대교수)	전장하(우), 정동일(한) 최형신(민), 박복수(무) 유계택(무)		
용산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 TV용산방송	오미영(경원대교수)	성장현(민), 김종민(노) 김중완(무), 명영호(무)	정남길(우) 박장규(한)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성동구	대담토론회	5. 28.(일) 11:00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안동근(한양대학교수)	오성욱(우), 이호조(한정병채(민), 김성기(노)		
광진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큐릭스광진성동방송	조현권(변호사)	김태윤(우), 정송학(한) 김기동(민), 이종원(노) 김광해(국), 권혁모(무) 정국환(무)		
동대문구	대담토론회	5. 26.(금) 22:00	㈜동대문케이블방송	서경교(한국외대교수)	유준상(우), 홍사림(한) 유운영(민)		
중랑구	대담토론회	5. 28.(일) 11:00	㈜한국케이블TV중랑방송	윤종빈(명지대교수)	김준명(우), 문병권(한) 강병진(민)		
성북구	방송연설회	5. 28.(일) 11:00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이대희(광운대교수)	진영호(우), 서찬교(한) 조경복(민), 박창완(노)		
강북구	대담토론회 대담토론회	5. 28.(일) 20:00	㈜큐릭스	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장)	강영조(우), 김현풍(한) 신승호(민) 김정남(무)		비초청
도봉구	대담토론회	5. 28.(일) 22:10	㈜큐릭스	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장)	이동진(우), 심상대(민) 홍우철(노)	최선길(한)	
노원구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노원케이블종합방송	김현주(광운대교수)	서중화(우), 이노근(한) 김학주(민), 최창우(노) 정재복(시)	김양섭(국) 이기재(무)	비초청
은평구	방송연설회	5. 27.(토) 12:01	드림씨티방송(주)	이청수(전KBS해설위원)	고연호(우), 노계동(한) 송재영(민), 정두형(무)		
서대문구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6.(금) 11:00	㈜큐릭스서대문방송	김왕식(이화여대교수)	문석진(우), 현동훈(한) 이동겨(민), 이상훈(노) 고은석(무)		비초청
마포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주)	강치원(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김충현(우), 신영섭(한) 정형호(민), 홍승광(노) 박홍섭(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양천구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6.(금) 19:00	㈜씨제이케이블넷	김형준(국민대학교수)	유선목(우), 이훈구(한) 추재엽(무) 문영민(무)		비초청
강서구	대담토론회	5. 27.(토) 20:00	㈜강서방송	김광석(KBS연구위원)	이창섭(우), 김도현(한) 유영(무)		
구로구	대담토론회	5. 28.(일) 11:00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주)	장종기(성결대학교수)	남승우(우), 양대웅(한)		
금천구	대담토론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주)	현대원(시강대학교수)	최병순(우), 나이관(민) 최석희(노), 여병용(국)	한인수(한)	
영등포구	대담토론회	5. 26.(금) 10:00	CMB(주)한강케이블TV	이세진(프리랜서아나운서)	정경환(우), 김형수(한)		
동작구	방송연설회	5. 27.(토) 22:00	㈜디씨씨	김민기(숭실대학교수)	서승재(우), 김우중(한) 김기욱(민), 김익수(무) 윤여연(무)		
관악구	대담토론회	5. 26.(금) 22:00	㈜관악케이블TV방송	이세진(프리랜서아나운서)	진진형(우), 김희철(민)	김효겸(한)	
서초구	대담토론회	5. 27.(토) 16:00	㈜HCN서초방송	김왕식(이화여대교수)	서병찬(우), 정내현(민)	박성중(한)	
강남구	방송연설회	5. 26.(금) 22:00	㈜강남케이블TV	추보라(강남케이블TV아나운서)	이관국(우), 신윤철(무)	맹정주(한)	
송파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이현경(경인교대교수)	김영순(한), 김종호(민) 김현중(노), 민경엽(무)	이유태(무)	
강동구	방송연설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임주완(MBC ESPN캐스터)	손석기(우), 신동우(한)		
부산광역시							
중구	대담토론회	5. 22.(월) 09:45	부산MBC	안동진(부산MBC아나운서)	김은숙(한), 이인준(무)		
서구	대담토론회	5. 20.(토) 09:45	부산MBC	안동진(부산MBC아나운서)	박극제(한), 김영오(무)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동구	미개최					정원욱(한)	
영도구	대담토론회	5. 29.(월) 14:00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김희겸(우), 어윤태(한) 한영중(민)		비초청
	대담토론회	5. 29.(월) 15:00			김유덕(무), 이재인(무) 장세훈(무)		
부산진구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영재(우), 하계열(한) 민병렬(노)		
동래구	대담토론회	5. 28.(일) 08:05	부산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김은호(우), 최찬기(한) 이진복(무)		
남구	대담토론회	5. 25.(목) 22:15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박기욱(우), 이종철(한)		
북구	대담토론회	5. 24.(수) 14:0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전재수(우), 이성식(한)		
해운대구	방송연설회	5. 18.(목) 22:00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홍순현(우), 배덕광(한)		
기장군	방송연설회	5. 23.(화) 09:45	부산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손현경(우), 최현돌(한)		
사하구	방송연설회	5. 27.(토) 07:55	부산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이해수(우), 조정화(한)		
금정구	대담토론회	5. 24.(수) 09:45	부산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박춘길(우), 고봉복(한) 김문곤(무), 윤석천(무)		
강서구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구대연(우), 윤무현(민) 조명래(무)	강인길(한) 김원준(무)	
연제구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이창용(우), 이휘준(한)		
수영구	방송연설회	5. 21.(일) 11:40	부산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이남중(우), 박현욱(한)		
사상구	방송연설회	5. 23.(화) 14:00	KBS부산	김평래 (KBS부산 아나운서)	윤경태(우), 윤덕진(한) 이호승(무), 정대욱(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대구광역시							
중구	대담토론회	5. 24.(수) 11:0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정경부장)	김정태(우), 윤순영(한) 정재원(무)		
동구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대구MBC	이창선 (대구MBC 편집부장)	이승천(우), 이재만(한)		
서구	대담토론회	5. 26.(금) 11:0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정경부장)	윤진(한), 서중현(무)		
남구	대담토론회	5. 28.(일) 07:00	대구MBC	박영석 (대구MBC 보도국장)	임병현(한), 김현철(무) 이신학(무)		
북구	대담토론회	5. 27.(토) 10:55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정경부장)	이철우(우), 이종화(한)		
수성구	방송연설회	5. 25.(목) 22:00	KBS대구	임오진 (KBS대구 보도팀장)	김형렬(한), 이성수(무)		
달서구	대담토론회	5. 26.(금) 19:30	KBS대구	주경애 (KBS대구 기자)	정관규(우), 광대훈(한) 강신우(노)		
달성군	방송연설회	5. 26.(금) 14:00	대구MBC	이창선 (대구MBC 편집부장)	이종진(한), 김문오(무) 석창순(무), 양시영(무) 표명찬(무)		
인천광역시							
중구	대담토론회	5. 25.(목) 12:00	㈜티브로드 서해방송	성기철 (ICN인천방송 보도팀)	이상용(우), 박승숙(한) 김기성(민), 신형승(무)		
동구	대담토론회	5. 26.(금) 12:00	㈜티브로드 서해방송	성기철 (ICN인천방송 보도팀)	허인환(우), 이화용(한) 윤대영(민), 문성진(노)		
남구	대담토론회	5. 26.(금) 14:00	N I B 남인천방송	김동주 (남인천방송 아나운서)	박우섭(우), 이영수(한) 신영현(민), 정수영(노)		
연수구	대담토론회	5. 25.(목) 13:00	N I B 남인천방송	김동주 (남인천방송 아나운서)	안귀욱(우), 남무교(한) 박광래(민), 이혁재(노)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남동구	대담토론회	5. 24.(수) 12:00	㈜티브로드 남동방송	신종화(인천전문대교수)	박순환(우), 윤태진(한신명순(민), 배진교(노)		
부평구	대담토론회	5. 26.(금) 20:00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진영우(인천대교수)	노재철(우), 박윤배(한광영기(민), 한상욱(노)		
계양구	대담토론회	5. 26.(금) 22:00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정규석(한양대학원교수)	박형우(우), 이익진(한윤창호(민), 김종영(노)		
서구	대담토론회	5. 25.(목) 18:00	새롬방송사	이준한(인천대교수)	박균열(우), 이학재(한권중광(민), 이상구(노)		
강화군	방송연설회	5. 27.(토) 12:00	㈜티브로드 서해방송	성기철(ICN인천방송보도팀)	유병호(한), 최미란(노) 안덕수(무)	김윤영(무)	
옹진군	방송연설회	5. 29.(월) 11:50	영흥, 백령유선방송	성기철(ICN인천방송보도팀)	김필우(무)	김철호(우) 조윤길(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담토론회	5. 24.(수) 14:0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임택(우), 유태명(민) 양희창(무)		
서구	대담토론회	5. 24.(수) 10:00	KBS광주	김기태(호남대교수)	김종식(우), 전주언(민) 강기수(노), 신현구(무)		
남구	대담토론회	5. 28.(일) 07:10	광주MBC	김건우(광주MBC보도국장)	김화진(우), 안영신(한) 황일봉(민), 김창훈(노) 강도석(무)		
북구	대담토론회	5. 22.(월) 18:50	광주MBC	주정민(전남대교수)	이형석(우), 김천국(한) 송광윤(민), 오창규(노) 나정만(무)		
광산구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1.(일) 07:10	광주MBC	김건우(광주MBC보도국장)	이상갑(우), 전갑길(민) 이승남(노), 송병태(무) 김익주(무)		비초청
대전광역시							
동구	대담토론회	5. 30.(화) 13:00	TJB대전방송	송근명(변호사)	권득용(우), 이장우(한) 김정태(국), 박병호(무)		
중구	대담토론회	5. 26.(금) 17:40	TJB대전방송	이창기(대전대교수)	전중구(우), 이은권(한) 박용갑(국), 박태우(무) 이기호(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서구	대담토론회	5. 23.(화) 17:40	TJB대전방송	이창기(대전대교수)	김용분(우), 가기산(한) 김경시(국)		
유성구	대담토론회	5. 22.(월) 17:4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사무총장)	노중호(우), 진동규(한) 신헌관(노), 박종선(국)		
대덕구	대담토론회	5. 24.(수) 17:40	TJB대전방송	정승오(한남대교수)	박영순(우), 정용기(한) 송인진(국), 김창수(무)		
울산광역시							
중구	대담토론회	5. 23.(화) 18:50	울산MBC	신민주(변호사)	조용수(한), 이철수(무)		
남구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울산MBC	신민주(변호사)	임동호(우), 김두겸(한) 김진석(노)		
동구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KBS울산	전성표(울산대교수)	김원배(우), 박정주(한) 김중훈(노), 정철석(무)		
북구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울산	전성표(울산대교수)	강석구(한), 김진영(노) 이재경(무)		
울주군	대담토론회	5. 21.(일) 08:05	울산MBC	신민주(변호사)	박진구(우), 엄창섭(한) 김성득(무)		
경기도							
수원시	방송연설회	5. 24.(수) 22:00	㈜티브로드 수원방송	장성근(변호사)	염태영(우), 김용서(한) 이대희(민)		
성남시	대담토론회	5. 23.(화) 16:00	아름방송	정용석(아름방송기자)	이재명(우), 장영하(민) 김미희(노)	이대엽(한)	
의정부시	방송연설회	5. 29.(월) 10:00	우리방송	김환철(경민대교수)	박영하(우), 김문원(한)		
안양시	대담토론회	5. 25.(목) 16:00	㈜티브로드 ABC 방송	김양일(한국기자클럽교문)	신중대(한), 김규봉(민) 강현만(노)	이승민(우)	
부천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6:00	드림시티방송	정은길(드림시티방송아나운서)	방비석(우), 홍건표(한) 이혜원(노), 박상규(국) 김재광(무)		비초청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광명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3.(화) 20:00	한빛방송	김정기(한양대교수)	김경표(우), 이효선(한) 방호현(민), 이병렬(노) 김인겸(국)		비초청
					이연호(무)		
평택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2.(월) 10:00	㈜티브로드 기남방송	이원희(한경대교수)	유성(우), 송명호(한) 남정수(노), 이익재(국)		비초청
					이규찬(무), 차화열(무)		
동두천시	대담토론회	5. 25.(목) 22:00	우리방송	소성규(대진대교수)	오세창(우), 최용수(한) 노시범(무)		
양주시	대담토론회	5. 26.(금) 22:00	나라방송	이주형(변호사)	이홍규(우), 이법석(한) 윤광노(민), 임충빈(무)		
안산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2.(월) 22:00	한빛방송	김광욱(수원대교수)	부좌현(우), 박주원(한) 김동현(민), 이하연(노) 김봉구(국)		비초청
					손동걸(무), 박명훈(무)		
고양시	대담토론회	5. 27.(토) 16:00	㈜한국케이블 TV경기방송	최원익(변호사)	김유임(우), 강현석(한) 강태희(무)		
과천시	대담토론회	5. 27.(토) 16:00	㈜티브로드 A B C 방송	정종기(성결대교수)	김진숙(우)	여인국(한)	
의왕시	대담토론회	5. 24.(수) 16:00	㈜티브로드 A B C 방송	임경수(한세대교수)	이수영(우), 이형구(한) 김원봉(민), 신하철(국)		
구리시	대담토론회	5. 26.(금) 17: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이창현(국민대교수)	박영순(우), 박효영(민) 김용호(무)	지범석(한)	
남양주시	대담토론회 미개최	5. 25.(목) 21: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이창현(국민대교수)	이해일(우), 이석우(한) 김종범(민), 양홍관(노)		비초청
						서현석(무)	
오산시	방송연설회	5. 26.(금) 22:00	㈜티브로드 수원방송	이원희(한경대교수)	곽상욱(우), 이기하(한) 임명재(민), 신건호(국) 박신원(무), 이춘성(무) 조윤장(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화성시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티브로드 수원방송	박종수(수원대교수)	박광직(우), 박봉현(무)	최영근(한)	
시흥시	대담토론회	5. 24.(수) 15:00	한빛방송	김정기(한양대교수)	김윤식(우), 이연수(한) 이명운(민), 정종훈(무)		
군포시	대담토론회	5. 23.(화) 10:00	㈜티브로드 A B C 방송	정종기(성결대교수)	김윤주(우), 노재영(한) 임채영(민), 송재영(노) 이종근(국)		
하남시	방송연설회	5. 26.(금) 21: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신동진(위원)	김시화(민), 박우량(무)	유병직(우) 김황식(한) 이교범(무)	
파주시	방송연설회	5. 27.(토) 11:00	㈜한국케이블 TV경기방송	차유경(경기케이블 HC)	윤건(우), 유화선(한)	최수희(무)	
여주군	방송연설회	5. 24.(수) 18: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조승제(위원)	권재국(우), 이기수(한) 김효경(국), 윤승진(무) 임창선(무)		
이천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1.(일) 15:00	㈜티브로드 기남방송	홍경표(YMCA 사무총장)	이완우(우), 조병돈(한) 이세구(민), 이사현(무)		비초청
					박재한(무)		
용인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2.(월) 16:00	㈜티브로드 기남방송	오수환(변호사)	이우현(우), 서정식(한) 이정문(무)		비초청
					김현욱(무)		
안성시	대담토론회	5. 23.(화) 12:00	㈜티브로드 기남방송	이원희(한경대교수)	한영식(우), 이동희(한) 정장훈(무)		
김포시	대담토론회	5. 26.(금) 16:00	드림시티방송	정은길(드림시티 방송 아나운서)	유영록(우), 강경구(한) 김창질(민), 김동식(무)		
광주시	방송연설회	5. 25.(목) 17: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이공원(교차로저널 편집국장)	신동현(우), 이윤수(민) 손동원(무), 이우경(무)	조익동(한)	
포천시	방송연설회	5. 26.(금) 10:00	나라방송	이주형(변호사)	서장원(우), 박윤국(한) 홍찬기(무)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연천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0:00	나라방송	이주형 (변호사)	이윤구(우), 김규배(한)	강보원(무)	비초청
					최의순(무)		
양평군	방송연설회	5. 24.(수) 22: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김학모 (변호사)	유병덕(한), 김건호(무) 우정규(무), 한택수(무)		
가평군	방송연설회	5. 24.(수) 22:00	㈜한국케이블 TV경동방송	박용인 (위원장)	조영욱(한), 김태희(무) 이진용(무), 장봉익(무) 양재수(무), 유명서(무) 양관석(무)		
강원도							
춘천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춘천MBC	장노순 (강원대교수)	황석희(우), 이광준(한) 김종수(노), 유종수(무)		
원주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원주MBC	황병수 (원주대학장)	원창목(우), 김기열(한) 이용옥(민), 김광림(무)		
강릉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강릉MBC	윤경호 (강릉대교수)	정부교(우), 최명희(한) 김봉래(노), 선복기(무) 심재종(무)		
동해시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삼척MBC	신윤창 (강원대교수)	최경순(우), 김학기(한) 김진모(무), 오원일(무)		
삼척시	방송연설회	5. 29.(월) 13:50	삼척MBC	최재석 (삼척MBC 보도부장)	안호성(우), 김대수(한) 신상균(무), 이정훈(무)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강릉	곽재훈 (KBS강릉 기자)	김동욱(우), 박종기(한)		
태백시	미개최				김강산(무) 김용희(무) 나창덕(무) 장경덕(무) 정원교(무)	비초청	
정선군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삼척MBC	신윤창 (강원대교수)	신선웅(우), 유창식(한)		
속초시	대담토론회	5. 26.(금) 14:00	KBS강릉	이병연 (동우대교수)	황돈태(우), 채용생(한) 최용철(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고성군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강릉MBC	이병연 (동우대교수)	김성진(우), 함형구(한) 김원기(무)		
양양군	대담토론회	5. 29.(월) 14:00	강릉MBC	이병연 (동우대교수)	김남웅(우), 이진호(한) 정상철(무)		
인제군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춘천MBC	장노순 (강원대교수)	김장준(우), 박삼래(한)		
홍천군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춘천MBC	장노순 (강원대교수)	최기석(우), 노승철(한)		
횡성군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KBS원주	정종기 (성결대교수)	고석용(우), 한규호(한) 전인택(무)		
영월군	대담토론회	5. 26.(금) 14:10	KBS원주	정종기 (성결대교수)	엄민현(우), 박선규(한) 이상춘(민)		
평창군	대담토론회	5. 29.(월) 14:00	원주MBC	황병수 (원주대학장)	이석래(우), 권혁승(한) 박정렬(무), 이경진(무)		
화천군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춘천MBC	장노순 (강원대교수)	이현대(우), 정갑철(한) 장동화(노)		
양구군	대담토론회	5. 26.(금) 14:00	KBS춘천	김원동 (강원대교수)	최형지(우), 전창범(한) 박경섭(민), 김현택(무) 원종성(무)		
철원군	대담토론회	5. 29.(월) 14:00	KBS춘천	김원동 (강원대교수)	문경현(우), 정호조(한) 김용빈(노)		
충청북도							
청주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청주MBC	최남식 (청주MBC 아나운서)	오효진(우), 남상우(한)		
충주시	대담토론회	5. 24.(수) 23:00	충주MBC	신명선 (충주MBC 보도제작 국장)	권영관(우), 한창희(한) 최설경(무)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계천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충주MBC	신명선(충주MBC 보도 제작국장)	권기수(우), 엄태영(한)		
단양군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충주	한중성(KBS충주 아나운서)	이규천(우), 김동성(한) 이영희(국), 김천유(무) 박주진(무), 이완영(무)		
청원군	대담토론회	5. 29.(월) 22:00	KBS청주	유재풍(변호사)	변장섭(우), 김재욱(한) 박노철(국), 김병국(무)		
영동군	대담토론회	5. 26.(금) 17:20	청주MBC	최남식(청주MBC 아나운서)	손문주(한)	정구복(우)	
보은군	대담토론회	5. 21.(일) 13:50	CJB청주방송	김종기(CJB 아나운서)	이향대(우), 박종기(한) 김기준(국)		
옥천군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KBS청주	유재풍(변호사)	한용택(우), 안철호(한) 손만복(국), 이근성(무)		
음성군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KBS충주	한중성(KBS충주 아나운서)	이원배(우), 김학현(한) 박수광(무)		
진천군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청주MBC	최남식(청주MBC 아나운서)	유영훈(우), 김경희(한) 남명수(무)		
괴산군	대담토론회	5. 23.(화) 18:00	CJB청주방송	김종기(CJB 아나운서)	김문배(한), 임각수(무)		
증평군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청주	유재풍(변호사)	김영호(한), 연기복(무) 유명호(무)		

충청남도

천안시	대담토론회	5. 24.(수) 14:00	대전MBC	권경득(신문대교수)	구본영(우), 성무용(한) 양승연(무)	임형재(국)	
공주시	대담토론회	5. 29.(월) 17:4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남상관(우), 김선환(한) 이준원(국), 오영희(무)		
	방송연설회	5. 29.(월) 14:30			조은호(무)		비초청
보령시	방송연설회	5. 22.(월) 14:10	TJB대전방송	최준원(위원장)	이병준(우), 신준희(한) 이준우(국)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아산시	방송연설회	5. 23.(화) 07:20	티브로드 중부방송	박효석(중부방송 기자)	곽용구(우), 강희복(한) 김광만(국)		
서산시	방송연설회	5. 29.(월) 13:4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조규선(우), 조한구(한) 이복구(국), 김오경(무)		
태안군	방송연설회	5. 29.(월) 13:0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김세호(우), 명귀진(한) 진태구(국)		
금산군	방송연설회	5. 19.(금) 12:00	TJB대전방송	이윤환(건양대교수)	최영준(우), 유승열(한) 박동철(국), 강봉구(무) 김호섭(무), 박찬중(무)		
연기군	대담토론회	5. 22.(월) 07:20	티브로드 중부방송	오열근(단국대교수)	최준섭(우), 김준희(한) 이성원(민), 이기봉(국)		
	방송연설회	5. 25.(목) 12:15		박효석(중부방송 기자)	김부유(무), 성태규(무)	비초청	
논산시	방송연설회	5. 24.(수) 13:00	TJB대전방송	이윤환(건양대교수)	황명선(우), 박원래(한) 임성규(국), 이창원(무)		
계룡시	방송연설회	5. 19.(금) 18:0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기원(한), 최홍목(국)		
부여군	방송연설회	5. 23.(화) 13:00	TJB대전방송	김창규(한국전통문화학교교수)	김무환(한), 윤경여(국)		
서천군	방송연설회	5. 22.(월) 13:00	TJB대전방송	최준원(위원장)	나소열(우), 노박래(한) 전영환(국)		
홍성군	대담토론회	5. 25.(목) 17:40	TJB대전방송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두원(우), 이종건(한) 김석환(국)		
청양군	대담토론회	5. 26.(금) 13:00	TJB대전방송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이희경(한), 김시환(국)		
예산군	방송연설회	5. 25.(목) 13:00	TJB대전방송	이창호(공주대교수)	안세용(우), 최승우(한) 김영호(국), 이용면(무) 이준호(무)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당진군	방송연설회	5. 23.(화) 18:00	한국국제이불TV 충남방송	신기원(신성대교수)	민종기(우), 이덕연(한손창원(노), 이철환(국)		
전라북도							
전주시	대담토론회	5. 19.(금) 17:1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송하진(우), 진봉현(민) 김민아(노)		
군산시	방송연설회	5. 26.(금) 23:0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함운경(우), 한상오(한) 문동신(민), 전희남(노) 김덕환(미래), 권형신(우) 김귀동(우), 송용재(우) 조현식(우), 최관규(우) 황이택(우)		
익산시	대담토론회	5. 29.(월) 10: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이한수(우), 고현규(한) 허영근(민), 박경철(우)		
정읍시	대담토론회	5. 23.(화) 17:1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김생기(우), 이민형(민) 이효신(노), 강광(우) 허준호(우)		
남원시	대담토론회	5. 18.(목) 14:1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윤승호(우), 최중근(민) 김영권(우), 황의돈(우)		
김제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7:1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황호방(우), 최수(민) 이건설(우) 이흥규(우), 황성호(우)		비초청
완주군	대담토론회	5. 22.(월) 10: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최충일(우), 임정엽(민)		
진안군	대담토론회	5. 22.(월) 17:1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송영선(우), 김정길(민) 신중하(노), 박관삼(우)		
무주군	대담토론회	5. 24.(수) 17:10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윤완병(우), 강평수(민) 백광철(노), 감성로(미래) 김원수(우), 이경주(우) 홍낙표(우)		
장수군	대담토론회	5. 25.(목) 13: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최용득(우), 배한진(민) 장재영(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임실군	대담토론회	5. 28.(일) 08:05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강완목(우), 박영은(민) 김진억(우), 심민(우) 윤재봉(우)		
순창군	대담토론회	5. 19.(금) 10: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강인형(우), 임양호(우)		
고창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1.(일) 08:05	전주MBC	유기하(전주MBC보도국장)	정길진(우), 이강수(민) 정원환(우)		비초청
부안군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전주	신은식(우석대교수)	강수원(우), 이병학(민) 문창연(미래), 김경민(우), 김종규(우)		
전라남도							
목포시	대담토론회	5. 26.(금) 10:00	KBS목포	정기영(대불대교수)	김정민(우), 천성복(한) 정종득(민), 박기철(노)		
여수시	대담토론회	5. 23.(화) 11:00	여수MBC	복문수(전남대교수)	김강식(우), 김용우(한) 오현섭(민), 심정우(우)		
순천시	대담토론회	5. 25.(목) 13:00	KBS순천	김준선(순천대교수)	이은(우), 황선호(한) 노관규(민), 이수근(노)		
나주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6.(금) 10:5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신정훈(우) 김대화(우)	김대동(민)	비초청
광양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6.(금) 10:00	KBS순천	정병준(KBS순천기자)	서종식(우), 이성웅(민) 김정태(노) 박필순(우)		비초청
담양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18.(목) 22:1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최형식(우), 이정섭(민) 강대명(우)		비초청
장성군	대담토론회	5. 25.(목) 17:20	광주MBC	김진우(광주MBC보도국장)	고일갑(우), 이병직(민) 유두석(우)		
곡성군	대담토론회	5. 27.(토) 22:4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고현석(우), 허가하(민) 박정하(우), 조형래(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구례군	대담토론회	5. 23.(화) 10:00	KBS광주	주정민(전남대교수)	서기동(우), 전경태(민), 이몽룡(무)		
고흥군	대담토론회	5. 25.(목) 14:00	여수MBC	복문수(전남대교수)	진종근(우), 박병중(민)		
보성군	방송연설회	5. 26.(금) 14:00	KBS광주	신금식(위원)	정종해(민), 김종표(미래), 하승완(무)		
화순군	대담토론회	5. 22.(월) 10:0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이영남(무)	전형준(민)	
장흥군	대담토론회	5. 19.(금) 14:00	KBS광주	박대식(KBS광주아나운서)	김점중(우), 김성(민), 백광준(무)	김인규(무)	
강진군	방송연설회	5. 26.(금) 11:30	목포MBC	-	윤옥원(우), 황주홍(민)		
완도군	대담토론회	5. 19.(금) 00:10	목포MBC	고석규(목포대교수)	김종식(우), 홍종기(한)	박현호(민)	
해남군	대담토론회	5. 24.(수) 12:50	목포MBC	모지환(대불대교수)	박희현(민), 민화식(무)		
진도군	대담토론회	5. 26.(금) 12:50	목포MBC	박종두(목포대교수)	박연수(우), 김경부(민), 이동진(무)		
영암군	대담토론회	5. 23.(화) 12:50	목포MBC	김영태(목포대교수)	김일태(우), 장경택(민)		
무안군	대담토론회	5. 24.(수) 14:00	KBS목포	신순호(목포대교수)	서삼석(우), 이상욱(민)		
영광군	대담토론회	5. 19.(금) 10:00	KBS광주	장하경(광주대교수)	정기호(민), 강종만(무)		
함평군	대담토론회	5. 22.(월) 12:50	목포MBC	우성대(목포대교수)	안병호(민), 이석형(무)		
신안군	대담토론회	5. 24.(수) 10:00	KBS목포	김중익(목포경찰서사무국장)	김청수(민), 고길호(무)	김수용(우)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경상북도							
포항시	대담토론회	5. 23.(화) 14:00	KBS대구	주경애(KBS대구기자)	황기석(우), 박승호(한), 김병일(노), 김대성(무), 박기환(무)		
울릉군	대담토론회	5. 22.(월) 23:05	포항MBC	오영석(동국대교수)	이석준(우), 최수일(한), 정윤열(무)		
경주시	대담토론회	5. 25.(목) 22:55	포항MBC	오영석(동국대교수)	이상두(우), 백상승(한)		
김천시	대담토론회	5. 22.(월) 13:50	대구MBC	이창선(대구MBC편집부장)	박보생(한), 김경국(무), 전영수(무), 최대원(무)		
안동시	대담토론회	5. 29.(월) 14:10	KBS대구	주경애(KBS대구기자)	김명호(우), 김휘동(한), 김윤환(무)		
구미시	대담토론회	5. 22.(월) 14:00	KBS대구	주경애(KBS대구기자)	남유진(한), 최근성(노), 신수식(무), 채동익(무)		
영주시	대담토론회	5. 23.(화) 22:55	안동MBC	임병인(안동대교수)	김주영(한), 권영창(무), 최영섭(무)		
영천시	대담토론회	5. 21.(일) 07:00	대구MBC	박영석(대구MBC보도국장)	손이목(한), 이남희(무), 이태곤(무)		
상주시	대담토론회	5. 21.(일) 22:50	안동MBC	임병인(안동대교수)	이정백(한), 김태희(무), 민정기(무), 정송(무)		
	미개최					강영석(무)	비초청
문경시	대담토론회	5. 25.(목) 23:00	안동MBC	임병인(안동대교수)	신현국(한), 박인원(무)		
	방송연설회				함윤철(무)		비초청
예천군	대담토론회	5. 22.(월) 23:05	안동MBC	임병인(안동대교수)	김수남(한), 오창근(무)		
경산시	대담토론회	5. 24.(수) 12:50	대구MBC	이창선(대구MBC편집부장)	최병국(한), 서정환(무)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청도권	대담토론회	5. 23.(화) 11:00	대구MBC	김환열(대구MBC 정경부장)	이원동(한), 김하수(무)		
고령권	대담토론회	5. 20.(토) 10:55	대구MBC	김환열(대구MBC 정경부장)	김인탁(한), 이태근(무)		
성주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0:40	대구MBC	김환열(대구MBC 정경부장)	우인회(우), 이창우(한)		비초청
					오근화(무), 전수복(무) 최성곤(무)		
칠곡권	대담토론회	5. 22.(월) 11:00	대구MBC	김환열(대구MBC 정경부장)	배상도(한), 박창기(무) 장세호(무)		
군위권	방송연설회	5. 23.(화) 12:50	대구MBC	이창선(대구MBC 편집부장)	장 옥(한), 김휘찬(무) 박영언(무), 이명원(무)		
의성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7.(토) 22:50	안동MBC	임병인(안동대 교수)	김주수(한), 김복규(무) 최유철(무)		비초청
					전병오(무)		
청송권	대담토론회	5. 29.(월) 23:05	안동MBC	임병인(안동대 교수)	윤경희(한), 배대윤(무)		
영양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8.(일) 22:40	안동MBC	임병인(안동대 교수)	남정태(우), 권영택(한) 이희지(무), 이호근(무)		비초청
					오근목(무), 권경호(무), 김공박(무)		
영덕권	방송연설회	5. 23.(화) 11:00	포항MBC	전세용(포항MBC 아나운서)	김병목(한), 남희수(무) 박문태(무), 정라곤(무)		
봉화권	대담토론회	5. 20.(토) 22:55	안동MBC	임병인(안동대 교수)	김희문(한), 박현국(무) 임태항(무)		
울진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9.(월) 13:50	포항MBC	오영석(동국대 교수)	신 경(우), 김용수(한)		비초청
					임광원(무), 장정윤(무) 주승환(무)		

부 록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경상남도							
창원시	대담토론회	5. 18.(목) 22:1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 교수)	진광현(우), 박완수(한) 손석형(노)		
마산시	대담토론회	5. 22.(월) 17:20	마산MBC	정상윤(경남대 교수)	양운진(우), 황철곤(한) 이상기(국), 권영건(무)		
진주시	대담토론회	5. 23.(화) 17:20	진주MBC	유낙근(경상대 교수)	강주열(우), 정영석(한) 하정우(노)		
진해시	대담토론회 미개회	5. 23.(화) 17:20	마산MBC	전하성(경남대 교수)	이재복(한), 김용호(무) 이찬수(무)		비초청
					주정우(무)		
통영시	방송연설회	5. 23.(화) 15:20	KNN부산방송	이경찬(영산대 교수)	박정정(우), 진의장(한) 강부근(무), 김미희(무) 안휘준(무), 황종인(무)		
고성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4:10	KNN부산방송	이경찬(영산대 교수)	백두현(우), 이학렬(한) 계정훈(무), 최평효(무)		비초청
					하태호(무)		
사천시	대담토론회	5. 23.(화) 22:1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 교수)	김수영(한), 송도근(무) 정만규(무)		
김해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9.(월) 22:1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 교수)	이봉수(우), 김종간(한) 유신현(무), 유효이(무) 주정화(무)		비초청
밀양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4.(수) 17:20	마산MBC	정상윤(경남대 교수)	엄용수(우), 박태희(한) 김종상(무)		비초청
					이창연(무), 이태권(무)		
거제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7:20	마산MBC	전하성(경남대 교수)	변광용(우), 김한겸(한) 변성준(노), 배길승(무)		비초청
					윤성기(무), 황양득(무)	설계원(무)	
의령군	대담토론회	5. 26.(금) 23:0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 교수)	한우상(한), 박민웅(노) 김재용(무)		

5.31지방선거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참석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함안군	대담토론회	5. 19.(금) 22:0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학교수)	조영규(한), 진석규(무)		
창녕군	대담토론회	5. 19.(금) 12:00	KNN부산방송	이경찬(영산대학교수)	이수영(한), 장병길(노) 김윤현(무), 김종규(무)		
양산시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09:45	부산MBC	안동진(부산MBC 아나운서)	정병문(우), 윤장우(한) 오근섭(무), 손유섭(무)		
					김영태(무)		비초청
하동군	방송연설회	5. 24.(수) 17:20	진주MBC	유낙근(경상대학교수)	조유행(한)		
남해군	대담토론회	5. 22.(월) 17:20	진주MBC	유낙근(경상대학교수)	정현태(우), 하여계(한) 김용직(무)		
함양군	대담토론회	5. 22.(월) 22:10	KBS창원	옥원호(경남대학교수)	천사령(우), 이철우(한) 최은아(민)		
산청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5.(목) 17:20	진주MBC	유낙근(경상대학교수)	정막선(우), 이제근(한) 권철현(무)		
					박용범(무)		비초청
거창군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5. 26.(금) 17:20	마산MBC	정상윤(경남대학교수)	최용환(우), 강석진(한)		
					이상학(무)		비초청
합천군	방송연설회	5. 25.(목) 18:30	가야종합유선방송	안태훈(가야방송 아나운서)	김기태(우), 심의조(한) 이병기(무), 이병용(무) 이창규(무)		

정책토론회 큐시트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시 : 2006. 3. 25(토) 오전10:00~ (120분간) ○ 장소 : MBC A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타이틀	타이틀 : “5.31 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30초	10시 00분 00초	
2	MC 오픈닝	토론자 소개 : ① 김효석 ② 이방호 ③ 류근찬 ④ 이용대 ⑤ 강봉균	1분	10시 00분 30초	10초전 핏켓
3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2분	10시 01분 30초	
4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 사회자 Bridge 사회자(1분) 질문 ⇒ ① 김효석(1분) 답변 ② 이방호(1분) 답변 ③ 류근찬(1분) 답변 ④ 이용대(1분) 답변 ⑤ 강봉균(1분) 답변	6분	10시 03분 30초	10초전 핏켓
5	토론자 상호간 지정토론	<주제 :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 ☞ 사회자 Bridge 사회자(1분) 질문 ⇒ ① 이방호(1분) 답변 ② 류근찬(1분) 답변 ③ 이용대(1분) 답변 ④ 강봉균(1분) 답변 ⑤ 김효석(1분) 답변 ☞ 사회자 Bridge ① 이방호(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방호(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이방호(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방호(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② 류근찬(1분) 질문 ⇒ ○당 (1분) 답변 류근찬(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류근찬(1분) 질문 ⇒ ○당 (1분) 답변 류근찬(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③ 이용대(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용대(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이용대(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용대(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④ 강봉균(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강봉균(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강봉균(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강봉균(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⑤ 김효석(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김효석(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김효석(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김효석(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41분	10시 09분 30초	10초전 핏켓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6	사회자 개별질문	<주제 : 8.31 후속정책과 부동산 투기방지 방안> ☞ 사회자 Bridge 사회자(30초) 질문 ⇒ 류근찬(1분) 답변 사회자(30초) 보충질문 ⇒ 류근찬(1분) 보충답변 사회자(30초) 질문 ⇒ 이용대(1분) 답변 사회자(30초) 보충질문 ⇒ 이용대(1분) 보충답변 사회자(30초) 질문 ⇒ 강봉균(1분) 답변 사회자(30초) 보충질문 ⇒ 강봉균(1분) 보충답변 사회자(30초) 질문 ⇒ 김효석(1분) 답변 사회자(30초) 보충질문 ⇒ 김효석(1분) 보충답변 사회자(30초) 질문 ⇒ 이방호(1분) 답변 사회자(30초) 보충질문 ⇒ 이방호(1분) 보충답변	15분	10시 50분 30초	10초전 핏켓
7	토론자 상호간 지정토론	<주제 :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 사회자 Bridge 사회자(1분) 질문 ⇒ ① 이용대(1분) 답변 ② 강봉균(1분) 답변 ③ 김효석(1분) 답변 ④ 이방호(1분) 답변 ⑤ 류근찬(1분) 답변 ☞ 사회자 Bridge ① 이용대(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용대(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이용대(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용대(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② 강봉균(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강봉균(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강봉균(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강봉균(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③ 김효석(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김효석(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김효석(1분) 질문 ⇒ ○당 (1분) 답변 김효석(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④ 이방호(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방호(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이방호(1분) 질문 ⇒ ○당 (1분) 답변 이방호(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⑤ 류근찬(1분) 질문 ⇒ ○당 (1분) 답변 류근찬(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류근찬(1분) 질문 ⇒ ○당 (1분) 답변 류근찬(30초) 보충질문 ⇒ ○당 (1분) 보충답변	41분	11시 05분 30초	10초전 핏켓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강봉균→김효석→이방호→류근찬→이용대	5분	11시 46분 30초	10초전 핏켓
9		☞ 사회자 클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1분	11시 51분 30초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시 : 2006. 4. 15(토) 오전10:00~ (120분간) ○ 장소 : KBS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타이틀	타이틀 : “5.31 지방선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30초	10시 00분 00초	
2	MC 오픈닝	토론자 소개 : 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②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③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④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1분	10시 00분 30초	10초전 핏켓
3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2분	10시 01분 30초	
4	1형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각 정당의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 사회자 Bridge ⇒ ① 김한길 답변(1분) ② 이낙연 답변(1분) ③ 이재오 답변(1분) ④ 정진석 답변(1분) ⑤ 천영세 답변(1분)	5분 30초	10시 03분 30초	10초전 핏켓
5	2형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 ☞ 사회자 Bridge ① 이낙연 답변(1분) ⇒ ② 이재오 답변(1분) ⇒ ③ 정진석 답변(1분) ⇒ ④ 천영세 답변(1분) ⇒ ⑤ 김한길 답변(1분) ☞ 사회자 Bridge ① 이재오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김한길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천영세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② 정진석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이낙연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김한길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③ 천영세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이재오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이낙연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④ 김한길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정진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이재오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⑤ 이낙연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천영세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정진석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43분	10시 09분	10초전 핏켓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6	3형 사회자 개별질문	<주제 :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이재오 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이재오 보충답변(1분)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 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사회자 질문(30초) ⇒ 천영세 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사회자 질문(30초) ⇒ 김한길 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김한길 보충답변(1분) 사회자 질문(30초) ⇒ 이낙연 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이낙연 보충답변(1분)	15분	10시 52분	10초전 핏켓
7	4형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 - 재원분배,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 사회자 Bridge 사회자(30초) 질문 ⇒ ① 정진석 답변(1분) ② 천영세 답변(1분) ③ 김한길 답변(1분) ④ 이낙연 답변(1분) ⑤ 이재오 답변(1분) ☞ 사회자 Bridge ① 이재오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이낙연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김한길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② 정진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이재오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이낙연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30초) ③ 천영세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정진석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이재오 반론(1분) ⇒ 김한길 재반론(1분30초) ④ 김한길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천영세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정진석 반론(1분) ⇒ 이낙연 재반론(1분30초) ⑤ 이낙연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김한길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천영세 반론(1분) ⇒ 이재오 재반론(1분30초)	43분	11시 07분	10초전 핏켓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②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③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④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5분	11시 50분	10초전 핏켓
9		☞ 사회자 플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1분	11시 55분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시 : 2006. 5. 12(금) 오후10:00~ (120분간) ○ 장소 : MBC 스튜디오

번 이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타이틀	타이틀 : "5.31 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30초	10:00:00	
2	MC 오픈닝	토론자 소개 : 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②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③ 민주당 한화갑 대표 ④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⑤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1분	10:00:30	10초전 핏켓
3	주제 선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2분	10:01:30	
4	모두발언	① 박근혜 발언(1분) ② 문성현 발언(1분) ③ 한화갑 발언(1분) ④ 정동영 발언(1분) ⑤ 심대평 발언(1분)	5분	10:03:30	
5	사회자 공동질문 (개별 보충질문)	<주제 : 5.31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 사회자 Bridge ① 문성현 답변(1분 30초) ② 한화갑 답변(1분 30초) ③ 정동영 답변(1분 30초) ④ 심대평 답변(1분 30초) ⑤ 박근혜 답변(1분 30초) ☞ 사회자 Bridge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문성현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한화갑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정동영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심대평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박근혜 보충답변(1분 30초)	18분	10:08:30	10초전 핏켓
6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 ☞ 사회자 Bridge ① 한화갑 답변(1분 30초) ② 정동영 답변(1분 30초) ③ 심대평 답변(1분 30초) ④ 박근혜 답변(1분 30초) ⑤ 문성현 답변(1분 30초) ☞ 사회자 Bridge ① 한화갑 반론(1분) ⇒ 정동영 재반론(1분 30초) 한화갑 반론(1분) ⇒ 심대평 재반론(1분 30초) 한화갑 반론(1분) ⇒ 박근혜 재반론(1분 30초) 한화갑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30초) ② 정동영 반론(1분) ⇒ 심대평 재반론(1분 30초) 정동영 반론(1분) ⇒ 박근혜 재반론(1분 30초)	58분	10:26:30	10초전 핏켓

번 이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정동영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30초) 정동영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30초) ③ 심대평 반론(1분) ⇒ 박근혜 재반론(1분 30초) 심대평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30초) 심대평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30초) 심대평 반론(1분) ⇒ 정동영 재반론(1분 30초) ④ 박근혜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30초) 박근혜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30초) 박근혜 반론(1분) ⇒ 정동영 재반론(1분 30초) 박근혜 반론(1분) ⇒ 심대평 재반론(1분 30초) ⑤ 문성현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30초) 문성현 반론(1분) ⇒ 정동영 재반론(1분 30초) 문성현 반론(1분) ⇒ 심대평 재반론(1분 30초) 문성현 반론(1분) ⇒ 박근혜 재반론(1분 30초)			
7	국민 영상질문	<주제 : 국민 관심사> ☞ 사회자 Bridge 국민영상질문(30초) ⇒ 정동영 답변(1분 30초) 국민영상질문(30초) ⇒ 심대평 답변(1분 30초) 국민영상질문(30초) ⇒ 박근혜 답변(1분 30초) 국민영상질문(30초) ⇒ 문성현 답변(1분 30초) 국민영상질문(30초) ⇒ 한화갑 답변(1분 30초)	10분	11:24:30	10초전 핏켓
8	4형 사회자 개별질문 (개별 보충질문)	<주제 : 지방선거 후보공천 제도>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심대평 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심대평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질문(30초) ⇒ 박근혜 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박근혜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질문(30초) ⇒ 문성현 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문성현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질문(30초) ⇒ 한화갑 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한화갑 보충답변(1분 30초) 사회자 질문(30초) ⇒ 정동영 답변(1분 30초)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정동영 보충답변(1분 30초)	20분	11:34:30	10초전 핏켓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1분) ②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1분) ③ 민주당 한화갑 대표(1분) ④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1분) ⑤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1분)	5분	11:54:30	10초전 핏켓
10		☞ 사회자 클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30초	11:59:3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시 : 2006. 7. 19(수) 오전10:00~ (120분간) ○ 장소 : KBS TS-3 스튜디오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타이틀	타이틀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30초	10시 00분 00초	
2	MC 오픈닝	토론자 소개 : ①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 ②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③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④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1분	10시 00분 30초	10초전 핏켓
3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2분	10시 01분 30초	
4	1주제	<주제 : 수해대책> 사회자 공통질문1 (토론자 무순, 발언시간 1분-1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2 (토론자 무순, 발언시간 1분-1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3 (토론자 무순, 발언시간 1분-1분30초)	20분	10시 03분 30초	
5	2주제	<주제 8.31 정책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사회자 공통질문 ① 장상환 발언(1분 30초) ② 강봉균 발언(1분 30초) ③ 최인기 발언(1분 30초) ④ 전재희 발언(1분 30초) ☞사회자 Bridge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강봉균 답변(1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최인기 답변(1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전재희 답변(1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장상환 답변(1분 30초) ☞사회자 Bridge ① 전재희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장상환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강봉균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② 장상환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강봉균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최인기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39분	10시 23분 30초	10초전 핏켓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③ 강봉균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최인기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전재희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④ 최인기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전재희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장상환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6	3주제	<주제 당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사회자 공통질문 ① 전재희 발언(1분 30초) ② 장상환 발언(1분 30초) ③ 강봉균 발언(1분 30초) ④ 최인기 발언(1분 30초) ☞사회자 Bridge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장상환 답변(1분) 강봉균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최인기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전재희 반론(1분) ⇒ 장상환 재반론(1분)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강봉균 답변(1분) 최인기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전재희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장상환 반론(1분) ⇒ 강봉균 재반론(1분)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최인기 답변(1분) 전재희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장상환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강봉균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전재희 답변(1분) 장상환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강봉균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최인기 반론(1분) ⇒ 전재희 재반론(1분) *찬스발언권 각 토론자당 1회 (각 질문답변 1분)	45분	11시 02분 30초	10초전 핏켓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강봉균 맺음말(1분) ② 최인기 맺음말(1분) ③ 전재희 맺음말(1분) ④ 장상환 맺음말(1분)	4분	11시 47분 30초	10초전 핏켓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1분	11시 51분 30초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시 : 2006. 11. 24(금) 오후11:40~ (120분간) ○ 장소 : MBC F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타이틀	타이틀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30초	11시 40분 00초	
2	사회자 오프닝	☞사회자 OPENING 토론자 소개 : ①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 ②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③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④ 민주당 한화갑 대표 ⑤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최고위원	1분	11시 40분 30초	
3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2분	11시 41분 30초	
4	기조연설	☞사회자 Bridge ① 김근태 기조연설(1분) ② 문성현 기조연설(1분) ③ 강제섭 기조연설(1분) ④ 한화갑 기조연설(1분) ⑤ 신국환 기조연설(1분)	5분	11시43분 30초	10초전 핏켓
5	사회자 공통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집값 안정화 대책> ☞사회자 Bridge 및 공통질문 ① 문성현 답변(1분) ② 강제섭 답변(1분) ③ 한화갑 답변(1분) ④ 신국환 답변(1분) ⑤ 김근태 답변(1분)	5분 30초	11시 48분 30초	10초전 핏켓
		☞사회자 Bridge 강제섭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한화갑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신국환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김근태 반론(1분) ⇒ 문성현 재반론(1분) ☞사회자 Bridge 한화갑 반론(1분) ⇒ 강제섭 재반론(1분) 신국환 반론(1분) ⇒ 강제섭 재반론(1분) 김근태 반론(1분) ⇒ 강제섭 재반론(1분) 문성현 반론(1분) ⇒ 강제섭 재반론(1분)	40분	11시 54분	10초전 핏켓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5	사회자 공통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사회자 Bridge 신국환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김근태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문성현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강제섭 반론(1분) ⇒ 한화갑 재반론(1분) ☞사회자 Bridge 김근태 반론(1분) ⇒ 신국환 재반론(1분) 문성현 반론(1분) ⇒ 신국환 재반론(1분) 강제섭 반론(1분) ⇒ 신국환 재반론(1분) 한화갑 반론(1분) ⇒ 신국환 재반론(1분) ☞사회자 Bridge 문성현 반론(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강제섭 반론(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한화갑 반론(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신국환 반론(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40분	11시 54분	10초전 핏켓
6	사회자 공통질문후 개별보충질문	<주제 : 2007년 정부 예산안 쟁점> ☞사회자 Bridge 및 공통질문 ① 강제섭 답변(1분) ② 한화갑 답변(1분) ③ 신국환 답변(1분) ④ 김근태 답변(1분) ⑤ 문성현 답변(1분)	5분 30초	00시 34분	10초전 핏켓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강제섭 보충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한화갑 보충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신국환 보충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김근태 보충답변(1분) 사회자 보충질문(30초) ⇒ 문성현 보충답변(1분)	7분 30초	00시 39분 30초	10초전 핏켓
7	사회자 공통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복핵문제 해법> ☞사회자 Bridge 및 공통질문 ① 한화갑 답변(1분) ② 신국환 답변(1분) ③ 김근태 답변(1분) ④ 문성현 답변(1분) ⑤ 강제섭 답변(1분)	5분 30초	00시 47분 00초	10초전 핏켓

번 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사회자 Bridge 한화갑 보충질문(1분) ⇒ 신국환 보충답변(1분) 한화갑 보충질문(1분) ⇒ 김근태 보충답변(1분) 한화갑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 한화갑 보충질문(1분) ⇒ 강제섭 보충답변(1분) ⇨사회자 Bridge 신국환 보충질문(1분) ⇒ 김근태 보충답변(1분) 신국환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 신국환 보충질문(1분) ⇒ 강제섭 보충답변(1분) 신국환 보충질문(1분) ⇒ 한화갑 보충답변(1분) ⇨사회자 Bridge 김근태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 김근태 보충질문(1분) ⇒ 강제섭 보충답변(1분) 김근태 보충질문(1분) ⇒ 한화갑 보충답변(1분) 김근태 보충질문(1분) ⇒ 신국환 보충답변(1분) ⇨사회자 Bridge 문성현 보충질문(1분) ⇒ 강제섭 보충답변(1분) 문성현 보충질문(1분) ⇒ 한화갑 보충답변(1분) 문성현 보충질문(1분) ⇒ 신국환 보충답변(1분) 문성현 보충질문(1분) ⇒ 김근태 보충답변(1분) ⇨사회자 Bridge 강제섭 보충질문(1분) ⇒ 한화갑 보충답변(1분) 강제섭 보충질문(1분) ⇒ 신국환 보충답변(1분) 강제섭 보충질문(1분) ⇒ 김근태 보충답변(1분) 강제섭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	40분	00시 52분 30초	10초전 핏켓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신국환 맺음말(1분) ② 김근태 맺음말(1분) ③ 문성현 맺음말(1분) ④ 강제섭 맺음말(1분) ⑤ 한화갑 맺음말(1분)	5분	01시 32분 30초	10초전 핏켓
9		⇨ 사회자 클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1분	01시 37분 30초	

정책토론회 녹취록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이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제3항에 의거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합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을 초청하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들어보고 비교분석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정당을 대표하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입니다.
-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 **류근찬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입니다.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분석하고,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화조사를 실시

한 결과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0%로 경제 분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방향이 36.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세금경감 등 조세정책이 23.5%, 8.31 부동산 후속대책 등 부동산정책이 13.3% 순위였습니다. 노동 분야는 청년실업대책이 43.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방안이 24.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16.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토론회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당에서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당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지요.

- **김효석** : 지방자치 11년은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천기준은 우선 사람을 철저히 스크린해야겠다, 도덕성도 봐야겠다 또 지방의 토호세력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는 철저하게 주민생활 자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이라는 지 주민의 쾌적한 삶을 만들 수 있는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을 철저히 체크해서 성실한 사람을 뽑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의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방호** :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이 사회가 공직자들이 도덕적 기준을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도덕적 기준을 아주 높은 잣대를 가지고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스카우트해서 공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지방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진출함으로써 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시정이라든지 도정에 그리고 의회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방 사정에 밝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 **류근찬** : 류근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중심당은 창당된 지가 불과 두 달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후보를 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정당 공천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유능하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는 방법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중심당의 경우는 능력, 참신성, 도덕성, 리더십을 두루 갖춘 후보를 골라내는 작업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덕성 부분에 관련해서 전과 유·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탈세 여부, 병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하는 그런 문제까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이, 주민이 원하는 참 일꾼다운 후보를 고르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용대** : 저희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다른 정당들 같은 공천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비밀투표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전략공천이라든가 밀실공천 그런 병폐가 저희 당에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당은 한국 정당사 최초로 진성당원제도를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라면 누구나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고 당원들의 검증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뽑은 저희 당의 시·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비록 수는 적지만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에서 모두가 우수한 일등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입니다.
- **강봉균** :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이 교체되어야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5.31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상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구조를 혁파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첫째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일할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깨끗하고 유능하게 공직생활을 마친 장관급 인사 4명을 이미 후보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참여경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는 1순위 여성, 2순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자 상호간 지정토론시간입니다. 주제는

-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것인데 양극화의 원인과 진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지정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의 의견을 1분씩 들은 후에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방호** : 기본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구조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양극화 문제 또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는 대체로 봐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없는 분배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자연히 일자리가 적어지고 그리고 또 신 빈곤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께서 1분 동안 말씀해 주시지요.
- **류근찬** : 지금 양극화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국민중심당의 입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선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대단히 이 이슈가 정치적으로 오인이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는 20:80의 싸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20:80의 문제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세계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곧 머지않아서 2만 달러의 국가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80%의 빈곤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 문제는 적어도 20:80의 문제가 아니라 80대 국민 20대의 문제로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해서 선전하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대** : 사회 양극화 현상의 책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 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이

사회의 가진 자들, 재벌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옹호해 온 기성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재벌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일직선으로 계속 하락을 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대다수의 일하는 근로빈곤층,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저희는 현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서 찾고 있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강봉균** :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우리가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근로 계층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것이고 또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에 대응하고 또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김효석** : 각 당에서 양극화 원인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승자 독식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점도 있고 또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내수 침체가 양극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또 거기에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잘못된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졌고, 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 있어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은 혜택을 봤지만 내수기업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상호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토론자별로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1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30초, 보충답변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당을 지정해서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님, 어느 정당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방호** : 아무래도 집권당이니까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2004년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터널을 지나서 거의 밝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제가 거의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의료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2004년, 2005년 경제가 다 괜찮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들고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대결구도로 가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장 답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지금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양극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참여정부가 양극화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고달픈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세계시장에 가보면 반도체나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것은 세계 일류경쟁력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이런 분들은 내수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되고 또 수입품에 밀려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활동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자산 소유의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개방의 속도는 늦출 수가 없고 개방의 속도를 빨리 하면 양극화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방호** : 그런데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고 해서 복지에 예산에 계속해서 지출을 해서 약 56%가 복지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

긴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지예산이 5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 **강봉균** :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구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다소 다른 부분보다도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소득수준과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복지재정의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복지 비중을 늘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은 해 나가야 되고 개방을 하면 어려운 계층이 생기고 어려운 계층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문제도 고려하지 말고 성장 일변도로 가고 복지도 늘리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사회는 어느 쪽으로도 못 갑니다. 개방 쪽으로도 아마 발목이 잡혀서 더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회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정당을 지정해 주십시오.

○ **이방호** : 우리 민노당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주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은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그리고 큰 시장을 우리가 노리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 감세정책은 거의 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택시 LPG 면제를 해 준다든지, 특히 장애인들 차에 대해서 어떤 곳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거의 서민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열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모두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인데 지금 민노당에서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다.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을 좀더 자세히 보시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대** : 저희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장애인들 가운데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 불과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 부자들에 대한 증세, 부자들 세금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세금

은 줄이고 부자들의 세금은 늘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이윤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윤을 부자들이 독식하는 이런 구조가 여태 사회병폐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사회에 고르게 나누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배풀고 이런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증세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최종하게도 정 반대 입장에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해 주세요.

○ **이방호** :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감세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자율적인 그러한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세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우리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기업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 감세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용대** :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정책으로 가져가시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차별과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세금정책을 구체적으로 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차별들,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이 집중되어야 될 텐데 한나라당은 실제로 강남아파트 부자들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를 줄여준다거나 계속 그런 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한나라당이 차별정당이고 심지어 수구정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만난 김에 한나라당도 이제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눈길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께서 정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근찬** : 먼저 역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드시피 지금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문제가 상위 20%대 하위 80%의 대결구도로 가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의 소득 비중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입니다. 2005년도에는 39%라는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85년 49%, '99년에 40.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소득 계층의 일부가 중상위로 넘어와서 공고히 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위 20%의 통계는 17%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인데, 과연 이것을 20:80의 논리로 대결구도로 형성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0:20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20:80 이야기는 지금 소득세를 내는 우리 국민들을 놓고 볼 때 약 반 정도는 먼 세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 계층 중에서도 상위 20%가 세금을 80% 이상 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층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때 전체적으로 20:80의 구도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중산층대가 전체 국민들의 한 60%로 튼튼히 자리 잡는 그래서 우리 당이 바로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산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육성되느냐, 자꾸 빈곤층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대를 이루는 것이 임금소득자도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되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 30초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근찬** : 대상을 바꿀 수 있지요?

○ **사회자** :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충질문부터 하시고요.

○ **류근찬** :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나 여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르게 8:2, 80:20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필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항간의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정책이 좌파적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좌파 신자유주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좌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자율화시켜 나가는데 경쟁과 개방에서 낙오되는 계층들이 생기니까 이런 계층을 끌어안자는 뜻에서는 좌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미국과 FTA를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개방화 물결에 우린만 따로 문을 막고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이다 하는 뜻에는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경제를 자율화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낙오되는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절대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복지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논리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 정당을 지정해 주시는데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님!

○ **류근찬** :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을 보면 다른 정당과 일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극화를 공공부문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정책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효석** : 사회 그늘진 곳을 돌보는데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마치 가뭄의 소나기처럼 한 번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쓸 때는 괜찮지만 쓰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수조를 만들고 관개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NPO(비영리단체) 선진국일수록 이 NPO 활동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나 기부에 굉장히 저조한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몇 시간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GDP 규모의 2%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사회 공동체간 애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나 환경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 30초 내 해 주십시오.

○ **류근찬**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새해 벽두에 기업인들에게 우는 소리 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기억하시지요?

○ **김효석** : 예.

○ **류근찬** : 어떻습니까? 결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옆구리를 찔러서 비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까? 기업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효석** :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고용을 통해서 납세를 통해서 국민 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요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인 책임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에 접근해야지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공헌헌금을 내라, 옆구리를 찔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라 하는 것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 자체도 준조세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또 별로 큰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책임은 기업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중심의 경영을 한다든지 또 종업원에 대한 인제양성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한다든지, 환경 부분에 대한 기업이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잘 하는 기업들이 경영성과도 좋다. 그래서 보면 SRU 펀드 같은 것도 만듭니다.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인데 이런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성과도 좋더라,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께서 정당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이방호 의원께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한나라당을 ‘제벌정당’이라고 지적해서 아마 상당히 억울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회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을 제가 살펴봤을 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그랬었는데, 한 예를 들면 현재 삼성전자의 임원진들이 받는 연봉이 1인당 평균이 89억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월 110만원 정도이고 1년에 1,0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89억 7,0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기막힌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나라당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방호** : 한나라당이 제벌을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기업이 마음 놓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할 수 있어야 그것이 경제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차 역할을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생각이 들고, 삼성

의 임금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삼성의 임원진의 임금하고 중소기업의 임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1년에 15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15조원 이상 이익을 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회사의 임직원의 월급과 중소기업의 월급을 비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 **이용대** :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얼마 전 언론계 이사회에서 이방호 의원께서 기여입학제를 주장하신 것을 봤습니다. 기여입학제라면 부유층 자체가 돈만 내면 일류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실제 사회 양극화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방호** : 기여입학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의 재정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의 기여입학제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편당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숙사를 만들어서 학생들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여입학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이것은 입학정원 외에 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런 예는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학교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 대통령도 예일대학에 기여입학을 해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학교발전이라든지 학생복지에 쓰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좀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 정당 지정해 주십시오.
- **이용대** :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제벌 대기업과 외국 투기자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점에서 아까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대로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에서 좌파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민주노동당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리는 그런 평가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옹호하는 우리 민주노동당을 놔두고서 어떻게 제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열린우리당이 좌파정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

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는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진정으로 개별 대기업들과 외국 투기자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무역도 많이 자유화했지만 자본도 많이 자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포항제철, 국민은행 이런 데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방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에 투기성이라는 자본의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자본은 투기자본이다, 어떤 자본은 투기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가려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루는 정책은 그래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국제사회에서 역시 한국은 편향된 개방정책을 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탈세를 했든지 절차를 어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릴 생각입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하시지요. 30초입니다.

○ **이용대** : 말씀은 그럴 듯 하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가는데, 추가로 질문드리면 열린우리당의 조세정책을 보면 직접세를 인하고 간접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인하, 특별소비세 인하 이런 것들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간접세 인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민들의 소주값을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강봉균** : 우리가 소주세를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위스키 세금을 올리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세율을 낮추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종류의 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주는 정말로 서민들이 즐기는 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간접세와 직접세 논쟁은 사실 해묵은 논쟁입니다. 법인세 같은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싶어도 못 물린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토론하고 싶은 두 정당 대표 토론자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민주당의 김효석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 정치권은 그 책임공방을 하고 있다든지 또 지식층들은 그 처방을 놓고 서로 이념적인 논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당도 보면 왜 성장 중심으로 가면 해결이 되는데 왜 분배문제를 자꾸 곁들여서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양극화를 줄이려는 이런 노력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처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효석 의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석** : 물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은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극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하면 그 가치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고 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이것이 분배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분배된 배당과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것이 바로 생산이고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임금이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때문에 또 아웃소싱을 글로벌 아웃소싱 해외 중국에 동남아에 세우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먹히지 않는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봉균** : 중요한 것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중소기업 간에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제대로 맺어줄 것인지, 비정규직만 해도 중소기업에 대부분 비정규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줄어드는데 이 연결고리 만드는 것이 정부가 법을 만들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정책을 해서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생 협력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석** :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선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대부분의 부품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한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 그 부분도 앞으로 토론이 되겠지만 우리가 노동분배율을 높여나가자,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분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자리 문제도 지금까지 기업은 그저 사람을 해고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내자,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자. 최근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일자리 중심의 경영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도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야 되고, 정책도 다시 연결고리를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정당 지정해 주십시오.

○ **강봉균** : 한나라당이 이방호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달콤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이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재정이 전체적으로 복지를 줄일 단계인지 아니면 복지지출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지, 늘려야만 되지 않는지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을 돌보는 재정 소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예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정 소요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고 앞으로 어떻게 국가경영이 가능한지 한나라당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방호** :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은 분명히 감세정책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을 해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정부가 너무 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가 3년 동안 공무원 3만명을 지원해서 인건비가 4조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규모를 줄여서 씹씀이를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업도 10% 구조조정하는데 정부가 예산이 200조원입니다. 그래서 10%만 구조조정하더라도 20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 대중을 위하고 그리고 복지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쓰더라도 20조원 이내 같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감세정책을 주장해도 그 금액이 불과 9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9조원은 정부가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재정지출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봉균** : 정부가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덜 중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복지에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 **이방호** : 그렇습니다.

○ **강봉균** : 그런데 현실적인 처방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을 해 봤는데 한나라당이, 예를 들면 9조원을 깎자, 10조원을 깎자는데 깎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굉장히 막연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줄이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처방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줄일 수 있겠습니까?

○ **이방호** : 우리가 막연하게 9조원, 10조원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방비 같은 것도 소위 말해서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된다면 자주국방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비를 상당히 줄이면서 자주국방을 천천히 함으로 해서 지금 급하게 국방비 지출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각종 정부의 홍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위원회도 없애거나 축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정부가 공기급 같은 테라든지 기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가하면 10조원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이 토론하고 싶은 두 정당 토론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효석** : 저는 열린우리당하고 민노당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 의장님 오늘 대단히 바쁘십니다. 집권당이니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금년 들어 새해 벽두부터 양국화를 국가 정책 아젠다로 결국은 정부가 던졌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 가지 조세개혁, 재정개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열린우리당에서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또 심지어는 담당하는 과장을 보직 해임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란이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다, 정당이니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화두만 던져 놓고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정치논리에 밀려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봉균** : 조금 전에 한나라당의 이방호 의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국회에서 12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감세다, 그러면 나라살림을 조금 다시 들여다보면 많은 재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조정해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5월 말에 나옵니다. 그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들여다봐서 과연 전략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세금을 더 걸더라도 걸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금문제도 새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방만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우선정책입니다.
- **김효석** : 좋습니다.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국민정부 시절에 우리가 IMF 경제위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데 작년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이 보완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우리 당은 복지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적자를 대폭적으로 일거에 확대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기초생보자 지원하는 내용도 더 충실화하고 또 차상위계층을 골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것이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문제라는 것은 정권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장래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육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것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정당 질문해 주십시오.
- **김효석** : 민노당에게 묻겠습니다. 민노당은 양극화를 풀어가기 위해서 결국 소득을 통한 재분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법인세도 올리지, 소득세도 올리고, 또 간이과세제도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진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폐쇄경제 하에서는 그런 조세체

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방경제체제가 되면 아시다시피 무엇이 달라지나 하면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만 그런 세금을 올리게 되면 과거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민노당의 그런 정책,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해결해 보자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저희 당의 부유세 정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실사에 근거해야 됩니다. 저희 당의 부유세 정책을 제시했을 때 과세기준을 순자산 10억원 이상 소유자를 2002년에 그렇게 설정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순자산 10억원 이상 소유자가 실제로는 한국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2만명에서 5만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점도 안 되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전체 사회를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이었고, 이런 것이 국민경제 전반에 운영되는데 어떤 지장을 줄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오히려 막힌 숨통을 뚫어서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효석** : 부유세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득세도 올리자, 법인세도 올려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 '70년대에 가보니가 소득세가 70%였습니다. 굉장히 높으니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전부 근처에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웨덴에 있는 회사가 사람을 따라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를 봤던 말이에요. 그래서 민노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재분배 문제가 망가지기 전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용대** : 그 문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당에는 일반적인 소득세 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에 대한 세입공제라든가 세금감면 조치는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 **김효석** : 상위계층을 올리자는 이야기입니까?
- **이용대** :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순이익을 많이 올려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못 올려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은 특별적으로 감면해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 당이 무슨 세금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사회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외국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런 것을 더 올려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가 세금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회 소수층에 국한된 것이다, 소수 부자들에게 국한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지정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8.31 후속조치와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으로 각 정당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의 토지가격이 급등했고 특히 충청권은 가장 큰 수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도한 지역개발과 토지보상이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근찬** : 일부 그런 지적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가격 상승으로 충청지역이 수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행정복합중심도시가 들어서는 공주·연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편입되는 지역의 보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역에서는 당당아서 땅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역 안에서의 토지가격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결국은 토지가격을 상승했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 **사회자** : 보충 질문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토지보상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강력하게 건자,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 **류근찬** :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강력한 행정력이나 법제로 이 개발계획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이 만능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 **사회자** : 답변시간 다 안 쓰시겠습니까?

○ **류근찬** : 1분입니다? 줄이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모델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모델에 근거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토론을 하는데서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더러 부동산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병폐 중에 병폐인데 그것은 전국의 땅 부자 1%가 전국 국토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인 토지 독점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난 봉급생활자의 수입보다 10년간 놀고 먹으면서 살아온 땅 부자의 수입이 더 큰, 더 많은 그것이 바로 부동산문제의 현상적인 심각성인데,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현재 토지공개념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 세율이 1%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견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사회자** : 지금 토지공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저는 토지, 주택 문제가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주의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주의에 파탄이 나타난 사례가 바로 현 정부의 8.31대책인데 그러한 물량공급을 늘리고 세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아파트값은 여봐란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현실이 시장주의 파탄을 그대로 응변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민생복지 차원에서 일단 국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이것이 오래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토지 독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철저히 강화해서 이것이 민생 복지 차원에서 또 경제기업가들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오면 또 부동산가격이 뛰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

래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 **강봉균** : 사실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8.31대책과 관련된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은 발효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가야 발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재건축지역 대상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 싶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자꾸 재건축의 허가기준이랄지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뭔가 국가적인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익에 상당 부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합니다.
- **사회자** : 재건축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이 분양하고 있는 예를 들면 판교에 분양예정인 그런 중·소형아파트가 3억 5,000만원 정도에 이를 전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고, 또 투기꾼을 위한 판교개발이라는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분양가는 낮추되 이런 공공택지의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입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나 월세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판교는 벌써 분양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000만원 정도를 가져야만 분양받을 수 있는 계층은 아주 저소득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능력이 없는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도 거기다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판교의 분양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는가,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해서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판교만 옆에 있는 분양가격의 반 정도로 공급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작동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8.31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대책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석** : 참여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줄기는 아

마 2개월 것입니다. 2003년도에 10.29대책과 작년의 8.31대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0.29대책이 나왔을 때는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31대책 이후에는 전부 올라요. 아파트가격 외에도 전세가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은 8.31대책이 약효가 먹혀들고 있지 않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한 번 당해 봐라, 그러면 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8.31대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이미 안정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금 추가대책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 하셨지만 강북을 고급스럽게 개발해서 강남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효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작년 8.31대책 발표할 때 바로 저희가 성명이나 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성명은 결국 시장원리에 좀더 충실히 하겠다, 시장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강남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때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7월 26일 8.31 조치 발표 바로 하기 전에 강남의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라, 대신 재건축을 풀에 따라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한 것들은 환수를 하자, 일부 개발이익부담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늘리지 않으면 계속 재건축을 누르고 있으면 폭단적으로 잠재해 있어 단계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후속대책에 포함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또 박 승 총재가 이야기하는 강북의 뉴타운개발, 또 그런 부분의 공급도 꾸준히 동시에 아울러서 추진을 하는 것처럼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사실 야당으로서 정부는 비판하기 대단히 좋은 주제임에도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보유세나 양도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방호** :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한나라당이 미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참여정부에 의해 부동산정책, 아파트정책은 수요공급 면에서 우선 공급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강남아파트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환경을 가진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뉴타운을 만들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좋은 것을 많이 조성함으로써 인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분당이라든지 일산 같은 신도시를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공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당 같은 그러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 대책 일환으로 기존의 민간 분양방식과 공공임대주택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 즉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500~600만원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방호** : 그것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어느 후보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원리는 뭐나 하면 아파트 값이 제일 중요한 것이 땅값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뺀 건물값만 계산하면 이론적으로 그것이 반값이 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검증을 거쳐야 될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당으로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는 아파트의 원가공개, 그래서 공공개발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대한 원가공개를 해서 아파트의 거품이 빠진다고 보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토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또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자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입니다. 먼저 1분씩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먼저 1분 동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정부 여당에서는 비정규직 확대가 실업해소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보면 명백한 기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놓고서 장차 임시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파견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넣는 것이 어떻게 적절한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MF 이래 비정규직이 계속 확대되어 왔었지만 실업은 줄

어들이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IMF마저도 200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는 비정규직이 과다하게 많아서 경제 불안정이 초래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여라” 이런 권고를 오히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러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우선 청년실업 문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약 40만명 정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업률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실업률 4.1%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8.7%나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 이상 자녀들은 대학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겠느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일단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이 뜻을 같이 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김효석** : 청년실업은 정말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동력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시각 차가 워낙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은 3~4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차별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완전금지는 못 하더라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우리가 노동당의 유연성이라는 것도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3가지 원칙에 의해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올라갈 때마다 노조에서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4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이방호** :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 평균실업률보다도 청년실업률이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일자리를 약 25만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약 12만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이 청년실업이라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졸 졸업생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또 대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턴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류근찬** :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실업문제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지금 40만명의 청년실업자 가운데 61% 가량이 고졸 학력 이하의 청년실업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또 훈련 기회를 줘서 자활을 한다든지 취업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계류중인 관련법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입법 목표나 취지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유연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비정규직-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고용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법이 보완되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지정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부터 두 정당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 : 먼저 강봉균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많이 해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삼성공화국’이라고까지 지칭을 하는데 그것은 노동 관리들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도 기업주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요롱, 기륭전자, 세종병원 같은 데서 불법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고 않고 있고 그리고 이근희 회장 지난번 X파일 사건이 온 국민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켰는데 정부에서는 용두사미 무대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 진다는 점에 대해

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강봉균** : 지금 삼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삼성이 됐거나 어떤 대기업이 됐거나 법을 어기는 것은 법대로 다스려야 되고 또 반면에 사용자뿐이 아니고 노동조합도 불법파업을 하면서 우리가 노사제도를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민노당이 가장 앞장서야 될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2년 가까이 논의를 하면서 수렴하고 수렴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현실적으로 의문이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하십시오. 30초입니다.

○ **이용대** : 정부 여당의 정책을 보면 정부 여당은 이 사회 청년들을,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인생의 전망을 설계할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한 소모품 정도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전부 비정규직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최근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재벌의 밥그릇을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강봉균** : 비정규직의 문제가 재벌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벌기업에 매여 있는 하청기업들 이런 데가 비정규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지금 대기업 정규직의 62%밖에 보수를 못 받는 비정규직 보수를 올려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임금격차를 일거에 줄이려고 하면 사실은 한꺼번에 우리나라 전체 임금을 20%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또 대기업의 정규 노조를 가진 이런 노동단체에서는 정규직도 해마다 5%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때문에 현실성 있는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 **사회자** : 다음 정당을 지정해 주십시오.

○ **이용대** : 다음은 이만호 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원내 회기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서 비정규법안을 회기중에는 환노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최연희 의원 성추행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그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

을 보였는데 그 원내 경험 속에서 저희 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내 상황은 그렇더라도 국민에 대한 약속에서는 믿음을 주는 그런 정당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통계를 보면 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용은 늘지 않고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방호** : 아까 비정규직 법안처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이상 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법안처리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같이 서로 합의해서 환노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슨 성추행한 최 의원 관계로 해서 정책을 덮으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 이상 미룰 수 없냐면 그대로 현실적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후생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차별금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자체를 부정하는, 민노당 정책은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부정했을 경우에 임금폭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자** : 보충질문 30초 해 주십시오.

○ **이용대** : 우리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사회 전반의 비정상화되어가는 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전반의 경제구조가 안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실업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책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 쪽의 평가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이방호** :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비정규직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정규직은 차별이라든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민노당에 묻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노조가입률이 12% 됩니다. 12% 되는 그 노조원들은 사실 연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내지 8년 된 숙련공 연봉이 공장에 따라 다름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비정규직은 100만원, 150만원 안쪽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 줘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정규직 노동자는 절대로 보호하고 임금 올리려고 하면서 또 다시 비정규직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경제 현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민주노동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다른 당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로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다음에 연공서열식으로 계속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보수도 올려주고 또 해고도 시키지 말고 이룰 수 있는 사회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보수체계, 예를 들면 한 번 들어와서 일을 잘 하거나 잘못하거나 연공서열에 의해서 계속 정년까지 보수를 올려가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 됩니다. 그래야 정규직으로 채용을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수격차도 안 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 모순을 놔두고 다른 쪽에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답변해 주십시오.

○ **이용대** : 저는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이 현실 지표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어 가는데 그러자면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실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은 계속 빚더미에 올라갔고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봉 7,000, 8,0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런 분들도 일가에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가난하게만 살아왔는데 이제 돈 좀 벌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연봉 7,000, 8000만원을 문제 삼으면서 왜 한쪽의 사회 일가에 별로 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봉 80억원, 90억원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30초 보충질문하십시오.

- **강봉균** :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물론 세계시장으로 상품을 내보내는 중소기업들은 괜찮지만 좁은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매우 어렵습니다. 이 중소기업들한테 이 제는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어라. 그 다음에 보수도 좀더 올려라 이렇게 할 때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도산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중소기업하는 기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자리를 의존하는 근로자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이용대** : 근로자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책을 논의하는 데서 열린우리당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독점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한국경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노동자들 임금을 깎아서 질이 떨어지는 노동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런 것은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게 표현이 됐었고,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이 사회의 빵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재벌들이 가진 큰 덩어리의 빵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있지 그 빵은 그대로 두고서 어디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 **사회자** : 강봉균 의장, 다음 정당을 지정해 주십시오.
- **강봉균** : 민주당 김효석 의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 법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이 소위 기간제라고 해서 2년 조건으로 채용했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말고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줘라. 그 다음에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년 단위로 파견이다 하면 안 되니까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라, 불법파견 같은 것은 안 된다, 이런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 얼마나 시장에서 작동되는냐 하는 것에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 가지고만 우리 정치권이 싸울 일이 아닌데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민주당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효석** : 지금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기업에서 돌려쓰기를 하지 않겠느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쓰는 돌려쓰기를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과는 결국은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있는 차별금지를 얼마나 잘 시장에서 정착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만 작동하면 그렇

게 돌려쓰기를 할 인센티브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별금지조항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의 기본정신이 바로 차별시정제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시장에 작동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 **사회자** : 보충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균** : 아까 이용대 의장 말씀하신 중에서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그 내부에서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비정규직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하청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비정규적인 이유는 결국 하청단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효석** : 그 부분은 제가 민노당에 질문을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시정제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 차별금지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찾아라 하면 「남녀평등고용법」 일 것입니다. 거기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조항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도입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는 이유가 훨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이것은 직무분석이나 평가 없이도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면 차별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 김효석 의장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 **김효석** : 지금 강봉균 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민노당께 계속해서 물겠습니다. 민노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민노당이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데서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노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결국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는 일정합니다. 그 한도를 가지고 지금 정규직의 경우에는 노조가 되어 있어 보호막이 쳐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하라 하게 되면 실업이 늘어

난다, 고용을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들의 보호막을 대폭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이용대** : 늘 마음이 급해서 눈앞의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현실의 중장기 전망 속에서 가능한 대책을 못 보게 되는데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지금 당장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실과정 속에서 실현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보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노동계급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인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죄송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노동자들을 당연히 일해서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될 사람으로만 보지 이 사회 국민으로서 이 사회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데서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지점에서 봤을 때 당장은 비정규직 썩값의 노동자를 쓰는 것이 낫맞 같겠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경제가 망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나라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김효석** : 저도 우리 민주당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노동자를 누가 보호하는 것인가, 노조가 보호하니까? 정부가 보호하니까? 저는 일자리가 시장이 결국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같은 대기업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이 좋다, 금년에 우리가 임금을 동결하겠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정 부분 전환하라, 혹시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습니까?

○ **이용대** :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재벌 대기업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을 좋은 정책으로 선전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2002년에 「단체협약체결지침」에서 경총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각 기업들에게 “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여부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노동자한테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노동들끼리는 물론 상부상조하고 그렇게 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재벌 대기업들이 먼저 자기 주머니를 터는 성의

를 보여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정당 질문해 주시지요.

○ **김효석** : 말씀하시는 것이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정당이 국민중심당인 것 같습니다. 국민중심당은 현재 국회 내에 있는 원내 정당 가운데서 가장 원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일부는 차별금지 조항들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성격도 있지만 또 일부 조항들은 유연성에 문제가 되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차별시정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시행되면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중심당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법안 중에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류근찬** : 우선적으로 그동안 법망 밖에 방치되어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법망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양날의 칼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2년 사용 후에 정규직화 한다는 문제, 차별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인데, 대부분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차별을 해서 정규직의 85% 임금을 주기로 말하면 20조 9,000억원 정도가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화 하려면 약 9조 5,000억원 정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기업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 **사회자** : 보충답변시간에 이야기하시지요.

○ **김효석** : 이번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또는 차별 시정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이 분명하지 않은데 법이 처리된 뒤에 국민중심당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근본적인 대책, 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류근찬** : 앞서 중단했던 답변했던 말씀드립니다. 9조 5,000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기 때

문에 기업이 대단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 다시피 실업자에서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노동구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요, 다음에는 근로자들이 앞으로 노동운동이 지금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비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께서 두 정당을 지정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 **이방호** : 우선 민주노동당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동 기조가 기존 노동자들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친노동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역시 국가를 경영해 보니까 역시 지난친 노동자의 요구는 이것은 경제발전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셨는지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을 과보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근로자들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대** : 노동귀족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같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귀족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 노동귀족은 척결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 무엇을 노동귀족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저희와 두 당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조 일반이 노동귀족이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데는 실제로 보면 차별 대기업들이라고 보는데 두 당이 차별 대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GS칼텍스가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기업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지 자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인데 그 사실을 왜곡해서 자꾸 선전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방호** : 그리고 아까 삼성의 연봉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도 기업에 따라서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고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오늘의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월급을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의 발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인정해 주는 사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용대**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 경제가 미국 같이 되어서는 미국을 모델로 해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겉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사회적 생산 기반 자체가 해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양의 길을 가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로 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자면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일관된 하나의 경험이었는데 30년간 과정 속에서 지금 왜 민주노동당에 있는가, 바로 30년의 과정 속에서 정부들이 그 사이 무수한 정부들이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부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치를 하고 기득권을 과감하게 서민들과 나누는 조치를 했던 정책을 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책으로 30년간 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펴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 정당 지정해 주십시오.

○ **이방호** : 다음은 열린우리당 집권당이다 보니까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분배위주의 그리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또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태의 청년실업 내지 일반 실업문제 해결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든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민간 주도의 기업 활성화를 통한 그러한 실업문제 해결, 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강봉균** :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약 40만이에요. 그러면 40만 중에서 이 의장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대부분 공공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80%, 그러니까

약 24만명 정도는 역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를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위 민간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이것이 일자리창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 지적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좋은 일자리, 좀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 **이방호** :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돌아오시면 친기업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규제도 풀고 또 기업들이 기를 살려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시면 사실상 보면 전혀 친기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고 또 기업을 조른다 말이지요. 이런 정책이 국민들에게 일관성 없게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강봉균** : 그런데 대통령뿐이 아니고 우리도 외국을 가는데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들어와 보면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기업들은 뻗어가도록 뒷받침을 하지만 또 그런 개방화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 계층들을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개방은 안 할 수 없고 개방을 하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래서 “이 양극화의 무거운 짐을 지는 대통령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친기업이나, 반기업이나 이렇게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쪽을 다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께서 두 정당을 지정하시겠습니까.

○ **류근찬** : 한나라당, 민주당 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 지난 3월 임시국회 상임위 통과 전에 야 4당이 아마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더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4월 국회에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둘러서 환노위의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이신데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연성이 다 충분히 담보가 안 된 상태의 법안인데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모양의 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던 이유가 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이방호** : 정부 여당에서도 경제문제를 걱정하겠다는 앞으로 집권을 내다보니까 야당도 민생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수년 동안 논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라든지 또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집권당과 제1야당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비정규 차별금지가 들어가겠고, 또 그 대신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과 노동자의 절충형으로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민노당 그리고 전국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열린우리당에서도 4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4월 국회에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근찬** :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와 관련된 예컨대 법과 제도를 비정규직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금보다 유연성을 갖자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방호** :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의 경쟁성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외국인들이 기업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노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노동당이 지나친 친노정책을 써서 임금을 지나치게 올리고 또 파업도 해서 사실상 영국병이 들고 IMF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체정책이 들어섬으로 해서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자원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동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영국의 경제를 살렸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반드시 확보해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 외국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규제는 서로가 적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노동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근찬** : 이번에는 이용대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도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고용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들여다보면 경제,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노조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도 기득권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또 비

정규직은 나름대로 더 이상 안 된다는 논리가 민주노동당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소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용대** :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질문이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노동자들의 유리지갑 서민들의 추운 호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기 전에 재벌들의 큰 뽕 그리고 큰 호주머니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정규직이 마치 대단한 특권처럼 되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체의 이런 것이 노동자들 처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속에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보다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임금이 그 절반도 안 되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다고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뒤집으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1970년대, 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로 임금이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노동자들끼리 잘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류근찬** : 지금 사업주의 차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노조의 구성을 보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컨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것이 조합의 가입자격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비정규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이용대** : 그 점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공감이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서 대기업 노조에서 비정규직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하시는데 그 점이 어떤 명문화되어서 제한된 것은 실제로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해당 노조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또 많은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도 어쨌든 노조를 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를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의 정책이고 차별 대기업들의 노조 반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들께서 토론하실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토론내용에 대해서 1분씩 각 정당별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리가 오늘 경제 양극화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로 다른 진단, 다른 처방을 정치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지고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어서 양극화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책임이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정치권의 다툼이나 지식층의 이념논쟁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화합해야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 **김효석** : 민주당은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본 정당입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반드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일부 실망한 사람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보수성에서는 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는 오늘 이런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우리는 자부를 합니다. 저희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우리는 강한 정당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방호**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나치게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덕수 부총리를 한나라당에서 초청해서 지금 민생경제에 관한 모든 법안들을 우리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법이 통과 안 됴므로 해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서민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입장이 양당이 다르지만 서로 절충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보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부총리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좋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은 전체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국민들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 **류근찬** : 오늘 토론주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국민이 잘 살아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토론했습니다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20:80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마치 80을 정부 여당 편에 줄을 세우려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불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 국민중심당도 서둘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를 보다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신생정당이기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완속단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정책을 개발해서 5.31선거에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이용대** : 오늘 귀한 토론자리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우선 감사드리고 하지만 토론하는 심정은 사실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책임질 의사가 있는가,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저는 아직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한·미FTA 협상이 본격 추진될 텐데 그것이 체결되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제2 IMF 대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투기자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합병 M&A 등의 수단으로 한국기업의 알맹이들을 전부 빼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이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 제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고 이제는 제벌들이 진정으로 고등분담을 해야 될 때고 제벌들이 진짜 너무 비대해져버린 밥그릇을 이제는 국민들과 나눌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해서 오늘 나오신 정책위의장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각 정당 정책위의장들을 초청해서 제1차 공

직선거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방선거 전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자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를 초청해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각 정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입니다.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의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주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였고 전문가 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52.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권력구조개편 등 개헌문제가 20.7%, 정부 규모의 적정성 문제가 12.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정 분야는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방안이

3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방안이 25.0% 그리고 지역개발 정책수립 및 예산 집행 권한 문제가 16.4%로 그 다음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의 실천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이 매니페스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순 우리말로 용어를 선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에 기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매니페스토 실천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각 정당에서는 매니페스토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매니페스토 운동, 참공약 운동, 우리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막연한 구체적이지 않은 듣기 좋은 공약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체육시설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당이기에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재원과 실천시기까지 시간표를 작성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정책테이트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 각 정당이 모두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도 정책위 안에 매니페스토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산하에 매니페스토운동추진분부를 결성할 예정이고, 그 본부장에는 경제학박사 출신인 정책위의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분부가 중심이 되어서 후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검증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매니페스토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무슨 보라색 투피스나 스카프를 하고 나온다는 또 상대는 녹색 타이틀 매고 나온다는 하는 식으로 매니페스토 운동과는 배치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이 공약을 많이 합니다. 정당도 공약을 하고 개인도 공약을 하는데 저는 우선 우리 한나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2004년 총선 때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했는데 작년 6월에 대국민약속실천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의 공약 이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이 17대 총선에서 326개를 공약했는데 그 중에 완료된 것이 67개 21%, 추진중인 것이 158개 48%, 추진 예정이 101개 31%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라는 백서를 발간해서 지난 3월 24일에 ‘공약실천국민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에 관한 실천 정도를 백서를 발간해서 총 140개 중에 55개를 실천했고 현재 85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후보입니다.
- **정진석** : 정쟁선거하지 말고 정책선거하자는데 반대할 정당 없습니다. 저희 국민중심당 역시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5개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저희 당에 초빙해서 우리 전 간부 당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감성이미지,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또 한달반전에 이미 끝 모를 정략적 대결구도, 상호 비방한다든가 폭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선거 전 초입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데 결국 선거 양태가 주민 접촉형에서 미디어 의존형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에 의해서 매니페스토의 성패가 결판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친영세** : 매니페스토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참공약 선택 이전에 제대로 된 참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남 당비납부, 그 다음에 공천비리, 이렇게 얼룩진 이런 선거 풍토로 참공약 실현 어렵습니다. 거짓공약이나, 참공약 이전에 정당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번 대선 또 총선 이번에도 매니페스토식 공약집을 내놓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참정당으로서 참후보자 내세워서 참선거 제대로 된 선거 치르면서 참공약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섯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참공약을 선택하는 참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자간 상호 토론순서입니다. 주제는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동구역 개편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근본이 되는 그런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 간의 산업구조나 자치능력, 인적구성 그리고 경제활동의 여건 차이로 인해서 무려 지방자치가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정당께서는 이런 지방자치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각 정당의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건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 기대와 달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8개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지만 8개 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인구도 수도권은 4% 늘어났는데 비수도권은 0.9%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성도 있고 또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행자위 특위에서 이 문제를 차기 정부 이후로 넘겼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몇 개 시·군을 합쳐서 광역화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고 저희 당은 생각합니다. 24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6개의 광역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국가전략의 틀에 맞추어서 적당한 규모로 권역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 당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총선거와 대선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집권당이나 또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선거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 국토면적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조세수입의 75%, 금융거래 80%, 대기업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인데 재정분권을 실현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실효적인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논의구조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우선 없습니다. 여야, 특히 거대 양당 위주로 논의가 흐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의 돌을 드러내고 234개 시·군·구를 60개 내지 70개로 통·폐합하는 안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돌을 크게 가져가고 군소지역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후반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 국가균형발전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돈과 인구의 집중, 농촌간, 지금 농촌은 완전히 폐쇄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형할인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재래시장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직접적으로 균형발전과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까마는 지금처럼 중앙정치권 임의로 편의적으로 몇 십만씩 푹푹 잘라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김한길 원내대표이십니다.
- **김한길**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핵심적인 정책기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이것을 더 이상 외면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에 몰려 있던 17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정권 임기 내에 만들어 낼 것입니다. 수도권은 과밀집중화를 해소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은 혁신도시 건설로 각 지방의 자생력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별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답변하시고 한나라당의 이계오 대표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이계오** :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낙연** : 우선 현지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대구는 4.7%나 증가했고, 충남은 4.3%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3.7%, 울산 2.8% 증가했는데, 전남은 0.9% 줄었고, 광주 0.1%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가 줄었습니다. 인구 또한 광주는 1.5% 늘었습니다마는 전북은 3.9%가 줄었고, 전남은 무려 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서도 광주는 1.4%가 감소했습니다. KTX도 경북 KTX는 2010년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호남KTX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십시오.
- **김한길**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 행복도시건설, 또 하나는 176개에 이르는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남·광주지역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가게 됩니다. 광주는 한전과 다른 공공기관 2개를 비롯해서 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전남에는 모두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께서서는 광주·전남지역에 이전해 가게 되어 있는 17개의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지역의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이낙연** :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한전이 광주에 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낙후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디다. 오히려 각 지역에 나누어주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이전받아서 새롭게 구성될 혁신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경제개발효과를 파급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했습니다

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 그 주변지역을 인구나 경제력을 오히려 흡수해서 주변지역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역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보완으로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천영세** : 이 대표께서 지역의 낙후성, 불균형상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대적으로 호남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로 비율해서 혁신도시를 비롯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중앙재정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호남,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자칫 질문하면 그런 혁신 개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재정의 빈사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인지, 또 그런 중앙정부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낙연** : 아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깊숙한 고민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매칭 제도지요. 국가에서 몇 퍼센트를 도와주면 지방에서도 몇 퍼센트를 보태라 하는 매칭제도입니다마는 바로 매칭제도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것도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마저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복지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주는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8:1일 것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그 20%의 부담마저도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지방일수록 노인비율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고 돈이 적는데 복지비 부담, 가난한 분들에게 도와드려야 될 비용의 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다 돈을 뺏기면 다른 소득유발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제도를 재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매칭의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차등의 폭을 크게 해서 가난한 데는 과감히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 않교는 균형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국민중심당 정진

석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정진석** : 저는 다른 당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때 이야기하듯이 한나라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상생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분권사업 지방화 시대를 여는 지역균형사업의 초석이 되는 첫 단추인데 이러한 대역사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태도는 상당히 제동을 거는 발목을 잡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오 대표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오** :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기회에 제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나 지방분권을 위한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간의 권한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균형발전은 지방간의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다 보면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차이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정지역에 충남이든 광주·연기 등 거기에 새로운 큰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든지 과학도시를 건설하든지 하는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그러나 특정지역에 수도의 기능을 이전한다든지 수도분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오히려 수도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수도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수도의 기능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만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수도의 기능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지방에 특수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십시오.

○ **이낙연** : 작년에 중앙정부 행사부에서 재산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도 한나라당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서 스물세 분이 한나라당, 시의회 의원도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의 돈 많은 구에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재산세를 오히려 깎자는 주민들을 요구도 있었

지만 그 구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원상회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는 물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태도가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오** : 좋은 질문이신데 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한강이남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의 중구 이 정도는 자립도가 높고, 나머지 21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습니다. 거의 2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작은 구세로 시세로 꺾어서 시세에 그것을 모아서 다시 구로 배분하는 것을 아마 일부 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목 교환 여러 가지 법적검토가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서울 시정을 보면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각 자치구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가 돈을 모아서 구로 넘겨주지 말고 구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서울시가 갖지 말고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말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한나라당에서 환호하셨던 말이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설명을 하러 나갔다가 한나라당 의원님이 던진 서류봉투에 얼굴을 얻어맞는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오 대표님 말씀대로 행정중심도시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 **이재오** : 저는 특정지역에 하나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마는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여러 점이 같은 점이 많은데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수도분할에 관한 것을 추진하는 위원장이었고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저희 당의 위원장이었는데 그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수도의 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지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에 이름이 ‘행정복합도시’지만 사실상 거의 수도 행정의 기능이 3분의 2 정도가

옮겨가는데 그것은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에서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특정 지역에 특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지난달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충청권을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공약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를테면 호남고속철도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는 정동영 의장, 거기다가 청주에 가서 박근혜 대표께서는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행정복합중심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은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대권의 향배를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인 하나의 차원에서의 공약남발이라고 보는데, 중부권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무한경쟁적인 선거공약,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충청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정책, 공약, 이것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주역사 유치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바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국회 때부터 저희 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 단계부터 문제를 몰두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정부 쪽과 저희 당과에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지방 언론에는 광범위하게 보도까지 나서 또 제가 1월 3일에 공주·연기 신년회에 지역유지들한테도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 몇 달 지나서 또 정부 여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그것을 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국회에서 국내 대표들 간에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이룩해 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청와대 방문에서도 병역해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정책을 잘나적으로 줄속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기회드리겠습니다.

- **이재오** : 국민중심당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무슨 문화도시다, 여기는 무슨 과학도시다, 여기는 관광도시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는, 전국 땅 투기하는 부동산값만 올려놓는 그런 균형발전으로 무늬만 균형발전으로 변질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정치 선전으로 이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는데 국민중심당 입장에서, 특히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석** : 저는 현 정부의 분의지, 지역균형발전하려는 의지가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현 정부가 강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논의의 순서나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분권인데 그 분권의 핵심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자칫 정치적인 선전으로 그릴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지금 균특회계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0.5%에 불과해서 재정적인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전진미한 실효적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활로가 열리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금년 초였던가요. 국회 행정부 산하에 행정구역개편특위에서 나름의 시한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서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야말로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맹렬히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가 복지, 노사, 환경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역화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중심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진석** :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진행

- **김한길** : 국가균형발전은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일부를 떼어다가 지방에 갖다 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밀집중 때문에 교통, 환경, 주택 등의 문제가 이제 한계에 다달아 있기 때문에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밀집중현상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폐화, 황폐화, 공동화 되어 가는 지방에 일부를 옮김으로써 균형있는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균형발전의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세** :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은 한마디로 돈을 공정하게 우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우선 모여야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균형발전은 주로 특정지역의 성장 위주에, 대기업 위주에, 첨단기업 위주에 거기다가

골프장, 카지노 이런 관광레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개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지역경제를 살려 가는 중소기업과 토착산업과 1차 산업, 그래서 우선 농어촌을 포함으로 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거기에 환경과 이런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지금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그런 경제의 기초, 구조들을 그대로 살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이재오 대표께 드린 질문과 유사할 수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당론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역시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도 반대했고, 또 지난해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2의 행정수도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그야말로 의지를 모아서 지역균형발전, 진정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그야말로 추동력을 잃어버릴 텐데, 지금도 현재 합헌 판결 이후에도 그러한 당론에 불변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세** : 불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찬성합니다. 그것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기 대전·둔산 정부청사를 그 자원과 시설을 재활용 리모델링해서 대전·둔산 행정특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입법부 그대로 두고 과천을 중심으로 한 과천청사에 경제부처 그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 여타의 제반부처는 대전·둔산에 있는 정부청사에 그대로 옮기도록 하자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현재 이렇게 제정이 고갈되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속에서의 과도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통일 이후에 미래를 내다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남한의 행정중심도시 대전·둔산, 북한의 행정중심 평양, 나머지 통일된 수도는 서울이든 개성이든 아니면 서울과 개성의 중간 입지를 정해서 통일된 수도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통일 중심적인 부분까지 바라 봤던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재오** : 민주노동당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점이 이것 하나입니다. 이 점 하나인데 그 점에 대해서 민노당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노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민노당이 의석을 내고 있는 지역이 울산, 창원 이런 노동자들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민노당이 의회 의석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천영세** :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물을 많이 지방에다가 이전한다는 부분, 또는 지방 중심적인 행정을 편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민주노동당의 주요지지 기반이 달라진다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 민주노동당이 일단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정당으로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창당 초기에 우선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도농, 농촌에도 이제는 거의 민주노동당이 지역위원회가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 휴전선 근처에서부터 전국 골고루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론 노동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기반을 닦아 가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계층 어떤 부문이든 뛰어넘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지를 확보해 가는 그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확실하게 굳건히 갖춰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가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지방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최소한 임기 중에는 수도권인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중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4.04%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0.9% 줄어서 전국적으로 1.4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공약,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중지시키겠다는 공약은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변화를 봐도 지역내 총생산 GRDP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에 52.3%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53.8%보다 오히려 1.5%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한길** : 우선은 인구문제 말씀드리지요. 2002년 대선 당시에 신행정수도 공약을 했을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께서는 “그렇게 되면 서울이 공동화된다. 서울이 텅텅 비게 되고 집값이 폭락한다”고 대차게 공격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표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낙연 원내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 해 봤자 인구 몇 십만 빠진다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해소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입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구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어서 앞으로는 수도권의 인구가 2,400만 정도에서 고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질문하신 소위 지방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십시오.

○ **천영세** : 참여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한·미FTA를 대단히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 위력이 지난 IMF의 기습 배에 해당되는 쓰나미 현상이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내수기업, 중소기업, 전통산업 퇴출, 소득구조의 양극화, 전면적인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FTA 추진과 국토균형발전 이 부분들은 서로 상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의 준비와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속에서 그러면 한·미FTA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 특히 농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김한길** :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FTA는 옳다, 혹은 그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협상조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FTA 추진될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제 농촌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 대기업들이 이익 보는 것 이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특정한 분야의 농민을 포함한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여러 차례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 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십시오.

○ **정진석** : 김 대표께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이후에 수도권 주민들 또 일부 정치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수도권발전대책을 또 내놓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자연보존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 공장신설을 허용한다든지, 공장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또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맞는 부합되는 정책의 발상인지 무늬만 지역균형발전이지 사실은 이것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지는 않은지, 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도대체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김한길** : 정진석 대표님 말씀에 사실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대단하게 풀어준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수도권의 불만이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선거 치르는가, 규제개혁 확실하게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함부로 발표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과밀 집중화로 인해서 과밀 집중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 온 것이고 이제는 엄청난 삼중 시중의 규제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과밀 집중화를 해서 내지는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는 일정 부분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차별하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구 과밀집중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이 정부 여당의 목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사회자** : 이상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한 상호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자의 개별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

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기본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들은 지역간·계층간·이념간 갈등을 우려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국민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 순서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각 정당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답변과 보충 답변시간은 모두 1분씩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축으로 계층, 이념, 세대, 지역갈등 등을 들고 있는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이재오** : 우선 갈등해소를 이야기하려면 갈등이 왜 생겼냐를 잠깐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3년 연속 미달한 유일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노무현 빈곤층이 720만명인데 전 국민의 약 15%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2002년 133조원에서 2005년 248조원으로 3년간에 86%가 증가해서 국민 1인당 509만원의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3.3%에서 2005년 3.8%입니다.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에 들어서서 지역, 계층, 이념갈등이 가장 심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책임은 현 정권에 있는 것이고 집권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갈등해소의 방법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그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영남 지역주의에 안주해서 그야말로 의원들의 웰빙만을 생각하는 웰빙정당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 그것은 흔히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정치공세이고 저희들이 한 나라의 제1야당인데 왜 갈등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갈등이 해소되려면 현 정부의 규모를 작은 정부로 줄이고 현 정부의 정세정책을 감세정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올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실업률을 낮게 만들고 정당한 일자리에서 얻어진 봉급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규모로 나라의 경제율을 바꾸어야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러한 갈등의 책임을 서로 전가함으로써 인해서 이 갈등을 정치선전 내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치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는 것이지요. 저희 한나라당도 이러한 갈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지만 그러나 저희 당은 갈등해소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부권 통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의 부활에 호소하는 그러한 논리는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 **정진석** : 중부권 통합론이라는 것이 저희 당의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자면 분권형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실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앙집권적인 구조 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저희 당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의 구조를 그야말로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정신에만 맞게끔 지방에서 일해 온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 지방의 정서, 지역의 정서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상향식으로 중앙에 여론을 올려 보내서 결정을 짓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중심당의 중앙당은 사실 매우 왜소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각 시·도 당은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작동하는 속도나 폭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집권이 상향향이 아닌 상향식의 정치구조로 쇠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념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방화, 분권화를 주요정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화와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중부지역만의 지방화, 분권화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진석** : 그렇지는 아닙니다. 흔히들 지역주의를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중심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충청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지역이 선거를 앞두고 거점지역이고 전략지역이라는 점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고 지금에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은 지역패권주의입니다. 영원한 패권주의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 충청권의 문제를 지역주의로 등식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저희 충청권에서 영·호남과 같이 70%, 80%, 90%의 표를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영·호남에 비해서는 충청지역이 지역적 편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에 이

르기까지 여러 갈등구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는 민주노동당은 너무 이념에만 치중해서 오히려 이런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 **천영세** : 일부 특권층, 기득권층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비취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많은 정당 가운데 또 하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창당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기본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이익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치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당했고 원내에 들어간 정당입니다. 논어에 부자가 안 되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불평등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반대, 자금 농어촌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이익을 정치권이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은 그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민주적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도 농성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인 갈등의 통합과 관리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천영세** : 바로 어제도 환노위에서 계약된 비정규직법안,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농성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일단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국회든 우리 사회든 절차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적인 민주주의, 진정하게 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어떤 억울함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고 의회활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경계선에서 저희들 민주노동당은 늘 고심하고 있고 그러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저희들도 존중해 나가되 그런 부분이 내용적인 실질적인 민주와 배치될 때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그런 길을 일정하게 앞으로도 한결같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갖은 계층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서민들의 지지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양극화의 의제도 바로 정치적

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한길** :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극화 해소, 부의 부반익빈 현상의 심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못 살게 될 때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잘 나가는 분들의 뒷다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더욱 잘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그러나 뒤에 처진 분들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서 그 간격을 좁히느냐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양극화의 의제를 내세우기 위해 정부 여당은 통계조차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토지보유현황이나 주택자가보유비율과 같은 통계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극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 **김한길** : 상당히 가혹한 지적을 하시네요. 우리는 국가기관에서 낸 통계들이 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의 통계가 있고 사실 어느 나라든 통계치에 대한 이론들은 학계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통계끼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니계수를 기준해 볼 때에도 가장 근본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지수만 보더라도 양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통합 말씀하시는데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다른 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빠뜨릴 수 없는 우리당의 특징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역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남지역을 그야말로 규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낙연** : 우선 민주당을 지역당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호남에만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분당이 남겨준 상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호남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호남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크게 확대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오 대표께서 빈곤층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전국 농가의 호당 연간 평균소득이 2,900만원인데 전국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가 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온 가족이 1년 동안 뺏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 2,900만원인데 그 중에 200만원 빼고 2,700만원은 빚 갚아야 될 돈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다음 시간을 쓰겠습니다.

- **사회자** :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역주의는 어쩔 수 없는 분당의 결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란듯이 당을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최근에 여러 가지 폭력사태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낙연** :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죄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천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전락공천이 아마도 가장 적은 정당이 민주당일 것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당원들에게 60%의 지분을 드린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논문을 보니까 “한국사회의 상위 10%는 한나라당이 대변하고 하위 20%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대변한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 가운데 70%는 적절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당과 하위 20%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증폭시키고 있는데 중간에 70%는 그 갈등을 격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대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 순서는 토론자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제는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재원분배나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지방분권화가 실현되어야 될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각 정당은 지방과 중앙의 권력 분산의 균형점이 어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중앙의 권력 중 어떤 것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양되었던 권력 중에 일부를 중앙에 회수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정진석** : 우선 무늬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정부 여당은 귀

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요. 또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데도 매우 인색한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정부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26,000명 정도의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번 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규제혁파 이야기하셨지만 공무원 수가 늘면 그만큼 규제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신에 부합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처리된 선거법 문제를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양당간에 밀실에서 합의한 선거법은 매우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 지방분권은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권한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분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소통령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청장, 지난 3기에 31.5% 세 사람 중에 1명의 단체장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호도세력들과 유착비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인사관행, 지방호도세력과의 유착비리,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극복 해소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이런 서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중앙 권력의 지방으로의 이양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에 방방곳곳 활개 치는 난개발, 그 다음에 빈사상태에 있는 지역경제, 이런 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번 5.31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것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풀뿌리민주주의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단체장의 20~30%가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집단에서 3~4명 중에 1명이 기소되거나 구속당하는 그런 집단은 없을 것이다,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는 과정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상당부분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권력에 대한 감시나 감독시스템, 권력을 스스로 제어하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에 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단체장들이 제왕적 지위를 누리면서 이러한 불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이낙연** :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힘주어서 내세웠던 정책방향이 바로 지방분권화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제 47개 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47개 중에 9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장 쉬운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지방분권은 좌초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든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일이 늘어난다는 등등의 이유로 오히려 신중양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이 점은 어쩌면 균형발전의 좌절감 못지않게 참여정부의 실패작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이재오** :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세계 선진국 추세도 집권에서 분권으로 나가는 것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입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입니다. 결국 지방분권이 되려면 돈과 사람과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돈과 사람과 권한이 전부 중앙으로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말로는 분권을 강조하고 그러니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이라든가 경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큰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중앙이 무엇을 가지고 허가나 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돌려주어야 분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섯 분의 답변에 이어서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답변하실 차례인데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이재오** : 국민중심당에서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역인 충청권, 중부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정당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민중심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방분권과 특정 지역의 이해를 혹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석** :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지금의 정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 그리고 처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충청지역 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라고 해서 자꾸 지역당이다,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데 대한민국 지역주의는 물론 병폐입니다. 그 병폐의 본질은 지역패권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한 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자문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영남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들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 당선되기 힘들다. 이런 지역패권주의가 여지없이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도 여지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권은 비교적 지역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어느 당에게도 50% 이상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충청권을 가지고 지역주의에 기대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치설계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저희 당은 이념투쟁, 날이 새면 싸움질에 몰두하는 현재의 정치판을 그야말로 개혁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문제를 가장 국정의 우선순위 과제에 놓기 위한 그러한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지역분권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영남지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단 1명 가지고 있지요. 한나라당은 호남지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 지역정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 정당들마저도 지역적으로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지나치게 섞여있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구도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마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제 도입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김원길 국회의장은 어쩌면 내각책임제를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3월 22일 고대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진석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진석** :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신의 의지, 창의성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국가가 통합해 가고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서 말씀하신 시스템의 개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아마도 핵심이 될 것이고,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큰 정책쟁점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중심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나 다름없습니다. All or nothing 아닙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투쟁을 기본적으로 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런 권력구조시스템 가지고는 이러한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감정을 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그야말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사회 광범위한 공론화의 틀을 마련해서 5월 31일 이후에 더욱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민중심당에서도 이러한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일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한길** : 지난 4년 동안 지방단체장들이 인·허가 비리, 인사 비리 등으로 상당 수 구속되거나 기속됐다는 문제점 말씀드렸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몇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단체장을 제어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대부분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하나 지방권력이 상당히 커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감사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진석** :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른바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한나라당은 중앙권력 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이러한 양분법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권력 전체를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지방권력 심판론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야심하게 11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공과를 엄밀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봐야지 지난 11년의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정치논리로서 정치 동원 구호로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평가하기식으로 악용되는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저는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지금 경제가 파탄 나고 민생이 고갈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지방권력에서 파생된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

제, 이 문제의 어려움이 지방권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까?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면 안 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에 주시지요.
- **정진석** : 제가 질문드릴 차례네요. 민주노동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송두리째 지방정부,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매도하고 또 선거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기초의원들에게까지 공천권을 주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천영세** : 우선 나누어서 지금 정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후자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그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당 민주화하면 이런 공천 잡음, 자리 뜯 주고 사기 이것 완전히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유권 당원이 모든 후보를 직접 선출합니다. 상황적으로 일체 잡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중앙에서 관여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없이 제도로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분이 시기적으로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의혹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북마전입니다. 이를 테면 강남구청장실이 행정자치부장관실보다도 3배가 많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2조원의 부채가 있는데 2,700여억원 들여서 시 청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예산낭비와 비행, 비리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감사원 기능을 지방의회 산하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선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격사회에 개혁을 내걸고 사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런 쪽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이제오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재오** : 천영세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어떤 때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지방권력이 부패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방권력이 부패해서 감사를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중앙 집권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지방권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가 부패하면 부패한 대로 사법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법에 따라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심판한다, 감사한다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중앙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영세** : 그 부분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감사원 감사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우선 이런 부분을 진작 했던지, 왜 그러나 하면 과도기적으로 아직 중앙의 권력이 완전히 지방분권화되는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하려면 시간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도감독, 일정하게 과도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때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방분권과 이런 중앙정부의 감사 기능하고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또 이후에 관행적으로 그것은 분리시켜서 지방자치의 이름에 위상에 걸맞도록 자체 감사와 자기 정화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사업들을 펼쳐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17대 국회에 민노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오셔서 국회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데 많은 자극을 주셨다든가 또 지자체에도 민노당이 부분은 적지만 진출하셔서 신선한 자극을 주고 계신 것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노당이 신선한 자극을 주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하는 실수를 민노당도 하면 그것에 대한 실망도 더욱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울산이었던가요. 민노당이 모처럼 배출한 지자체 책임자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노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천영세** : 울산에 기초단체장 2명이 민주노동당 출신이었습니다.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지금 재판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 향상과 공직 사회의 과감한 개혁을 내걸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구에 또는 ILO 국제노동기구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안들이 정부에 끊임없이 왔습니다마는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단결

권, 교섭권마저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이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인 민주노동당 출신인 울산북구청과 동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먼 훗날 또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이런 기초단체장의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의 결단, 이런 부분은 높이 사야 되고, 이후에 민주노동당은 계속해서 이런 기초로 방침으로서 이것은 가져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답변하고 바로 질문 차례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권 핵심은 역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나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내세운 나머지 물론 현 지방자치단체의 구태한 행정, 안일한 행정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기업의 경쟁논리, 기업의 경영논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다분히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런 데서 많은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과도한 기업 경영방식의 경쟁력을 그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 **김한길** :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토론하는데 참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여간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분이 계속 하시니까 제가 참 벅차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대하는 중앙정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기업논리로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십니다마는 아마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그 중간쯤에 열린우리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지방분권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 200여개를 지방으로 이미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지방분권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람도 바뀌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지방분권 지속발전형으로 가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사회통합의 문제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숙제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역당평인사를 실시하겠다. 지금 장·차관, 처장, 청장, 청와대 간부들 중에서 대전·충남 출신 인사가 있습니까? 1명도 없습니다. 국장시킬 사람, 차관시킬 사람이 충청권 인사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다시 충청권 지역주의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 관계를 놓고 영·호남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충청권에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역당평을 약속하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김한길** :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까라는 인사는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고유권한이고 열린우리당에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두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서 영·호남이 주체가 되면서 아마 중간에 끼인 충청도 분들이 인사에서 불이익 당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 초기에 DJP연합으로 인해서 정권이 탄생했을 때 아마 충청지역 분들이 정부 인사에 일정 부분 또 혜택을 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충청도를 방문했다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꼬아봤더니 확실히 충청도 분들이 적더라고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인사한다는 원칙을 청와대가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당평 인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청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청와대에 인사관계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당평도 중요하고 충청 분들이 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의사전달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 **이재오** :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장한 것은 저는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3년 동안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2배가 더 늘었고 장·차관 수도 27명이나 늘었고 전체 공무원수도 2만 2,000명이나 더 늘었는데 실제로는 중앙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지방분권이라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부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이라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

- 인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활용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 지방분권하면서 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역대정부가 하지 않은 일들을 이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하고 있고, 남이 안 하던 일을 하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이 일정 부분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을 위해서 7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크게 보면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시오.
- **사회자** : 이번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한길** : 지방분권의 속도가 빠르냐 느린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너무 빨리 이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논리도 있는가 하면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더 원칙적으로 지방분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낙연 원내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입법권과 과세권까지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소위 연방제적 지방분권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이낙연** : 연방제 수준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약속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의 진행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 정가 아니라 거의 중도 포기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47개 지방분권 과제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가장 쉬운 것 9개 뿐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미 지방분권화는 좌초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적 분권 말씀도 하셨는데 국세 중에 조세, 전화세, 양도소득세, 숙박음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지방세로 이양될 가치가 있는 이양되기에 적절한 세목이다 하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 됩니까마는 그 어느 것도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

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짧은 것 하나 민주당과 국민중심당하고 이번 지방선거 연합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국민들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나가는 것 아니냐, 정당정책도 많이 차이가 있고 당의 핵심 구성원들도 성향도 많이 다른데, 혹시 그에 대한 명분이나 그런 사유 같은 것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 **이낙연** :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이 본거지라고 할까요, 자신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 노선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노선 차이나 한나라당 노선 차이보다는 훨씬 좁은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노동당 빼놓고는 모두 다 정책노선에 좋게 말하면 다양성, 나쁘게 말하면 혼란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보다 높은, 좀더 발전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작은 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간에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정치를 걱정하는 시각도 비슷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방향성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천영세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전략적 제휴나 연대를 통해서 선거를 치를 계획을 마련한 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분권은 지방행정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 문화, 의료 등 핵심 클러스터가 완비되어서 새로운 자족규모의 도시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교육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교육개혁 교육개혁 합니다만 도시와 지방간의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많은 분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낙연 대표께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 수준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등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나타난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격차, 빈부격차의 확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더 큰 격차를 안겨줄 것 같은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격차보다도 심각한 것이 교육비의 상하격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수능점수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은 더 가난해야 된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공부까지 잘 해야 된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가 가난하지만 아들은 공부 잘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계층간에 이동이 생기고 있는데 점점 그런 이동가능성은 줄어들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참여정부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특히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조기유학이다, 또는 해외 유학의 증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내 대학 졸업만 가지고는 행세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유치원 때부터 유학을 보낸다, 아예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교육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상호토론의 마지막 순서인데 한나라당의 이제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이낙연** :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덕분에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변화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영남에 치우친 또는 호남에는 아주 전무한 이런 기형적인 정당 구조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바로 이런 기형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이라든가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곧 5.31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현상유지를 좋아하는 한나라당의 체질이라면 바로 그런 제안도 거부할 것만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 없다, 헌법 개정도 필요 없다, 정말로 이 문제도 계속 반대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재오**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에 자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서 그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든 간에 제1야당으

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희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법을 고친다든지 헌법을 고친다든지 법을 고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여러 가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31 이후에 선거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자면 논의에는 응하겠지만 저희 당의 기본입장은 내년 대선 이후에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고치려면 그때 그 정당이나 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선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음에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지금 무려 5.31 끝나면 내년 대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국의 혼란만 가져오지 않느냐, 또 각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요즘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하시기 힘드시지요. 공천 현금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중앙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권을 말하자면 이제 지방 도당이나 시당에 넘겨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방에 간 공천권이 잘못 행사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단 말이지요. 제가 신문 보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다시 공천권을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분권 문제도 똑같은 수 있습니다. 지방에 행정권과 재정권, 돈을 점점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사람을 바꿔서 지방분권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오 대표님은 당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문제 함께 놓고 볼 때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재오** : 지방분권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김한길 대표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전국 16개 시·도당에다가 공천권을 거의 100% 이양을 했습니다. 광역단체장만 중앙당이 갖고 있고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시·도 당으로 내려간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다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일 중에 분권인데 분권은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제도와 내용을 고쳐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나머지 대표께서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오늘 이 토론이 그래도 같이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누누이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권력 부패 비리가 심각하다,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바라보든가 아니면 무슨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데 지난번 4.15 총선 끝나고 양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이른바 정치협상에서 합의했습니다. 주민소환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 마련한다, 그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약속했는데 빈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미 4월 국회에 세 사람 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4월 국회 얼마 남진 않았습니까마는 한 번 주민소환제를 뒷받침하는 주민소환법 이번 법제화에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오** : 저희 당은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우리나라 정당이 서로 경쟁이 아주 극심하고 선거 때 정당 간에 있어서 대결이 치열한데 주민소환제가 자칫하면 떨어진 정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의원들을 그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환제를 꺼내면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는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으로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4월 국회에 그것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이었는데 오늘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이 참관약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린 토론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이었지만 또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도 드리며 마지막으로 다 못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부터 가겠습니다.

○ **천영세** :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칠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위한, 부자를 위한, 특권을 위한 그런 정치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런 편에는 안 설 것입니다. 일관되게 약자, 맘 흘려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 약자들 편에 늘 서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대 정당들의 의원들 단채장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정당 참후보 민주노동당 꼭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입니다.
- **김한길** :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우리 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를 추진하기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노당과 잘 협의해서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비리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결과 지방의석 몇 개, 단체장 몇 개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 선거혁명을 반드시 실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혁명, 많은 국민께서 지켜 보셨습니까라는 이것이 5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태선거로 후퇴되는 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 민주당은 그동안에 불안하지 않은 개혁,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의 부족 때문에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난하더라도 깨끗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31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국면에 민주당이 능동적인 역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있어야만 이 나라 정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계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계오**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지켜 온 정당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내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를 우리를 마음속으로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의 내부의 살을 도려내면서 정치의 변화와 정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뼈아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새로운 변화를 내부로부터 힘있게 수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5.31 선거에서 거듭 한나라당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 국민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입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과 반목,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책임에 대해서 매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좋은 양으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 새로운 선택 그 중심에 저희 국민중심당이 서겠습니다. 저희는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통합세력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면 제3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중심당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면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정당이 아닌 고단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당 기호 5번입니다. 국민중심당이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오늘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5.31 지방선거를 참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다섯 분을 모시고 함께 한 제2차 공식선거정책토론회를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는 5월 12일에는 다섯 당의 각 대표를 초청해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또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자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재호입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으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를 초청해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평가해 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차 토론회 시간으로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5개 정당 대표가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와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나오셨습니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나오셨습니다.
-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토론회에서는 61.1%가 지

방선거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이슈 1순위는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30.2%였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이 25.3%,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이 20.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의 전제와 조건, 한·미FTA, 제벌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의 필요성,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잠식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각 항목 모두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을 넘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론회 의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당 대표들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실지 간략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게 해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과반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또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권이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민주노동당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정치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 8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지역마다 일당 독식정치였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일당 독식정치 하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소금이 되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토론회들과 맞붙은 비리가 만연합니다.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개발행정을 복지행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복지행정으로 바꾸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800만명입니다. 한 해 자살자가 1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세금 올리고 공무원 늘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방과의 관계도 가장 나쁘고 남북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입니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부익부빈익빈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정치를 시작한 뒤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의장이 된 뒤 석 달 동안 부지런히 전국의 민생현장을 발로 다녔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기사식당, 실업계 고등학교, 달동네,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중소기업 현장, 봉제공장, 개성공단 격려보다는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여당으로 쟁겨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더 낮추고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더 진지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심대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심대평입니다. 5.31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정책선거 운운하면서 내용은 정쟁선거, 정략선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지방선거에서 실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고 하더니 엇그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되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대권을 향한 대권정치 종식해야 됩니다. 국민중심당이 지방의 민생정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시작하는 말씀 다 들었고,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5.31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을 대표하여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의 내용과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먼저 1분 30초씩 말씀해 주시는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을 ‘정책자료집’으로 제시했고, 또 10대 정책을 간추렸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를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많이 만납니다. “제발 이제 다리 좀 그만 놓고, 길 좀 그만 댕고, 집 좀 그만 짓고,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고 일 좀 하도록 해 달라” 이것이 제일 큼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또 노인 복지 문제 많이 듣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 많이 했습니다. 복지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중에서도 우리 맞벌이 시대 ‘안심보육’을 가장 중점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 저희들이 여쭙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가 같습니까?” 물어보면 썩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뽑아놨더니만 전부 자기 이권만 챙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계에 보면 4명 중 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결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민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의료문제 주민이 투표해야 됩니다. 예산문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입니다.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지방선거의 중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뭘니 뭘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합니다.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는데 비리와 효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질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후보들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은 이제 가지 사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든 중앙정부든 결국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문화혜택 이런 복지시설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말씀하시지요.

○ **정동영** : 지방자치 역사 11년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 많
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에서 집행하는데 지방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
에 세는 예산이 많습니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뽑힌 단체장 250명 가운데 80명
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물든 지방자치단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
이 이번 선거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깨끗해졌다고 자신합니다. 게이트 없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투명하게 만들
고 돈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해서 독감감사
관제도를 입법하겠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해서 이것은 역시 6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14명 가운데 건설위원회 7명이 건설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얼마나 해주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
니다. 바로 이렇게 지방정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5.31선거의 중요한 목
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심대평**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 힘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국가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자치였던 지방자치체도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지방정치를
소생시켜서 지방만 스스로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

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지역 간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상호 간의 갈등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지
역 정부 간에 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예측이 되
어서 실증된 지방정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
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일정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비어놓
고 법에 묶여 있어서 선거를 못 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면서 지방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말씀하시지요.

○ **박근혜** :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정치에 당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국민의 피부
에 와 닿는 그런 민생공약 그리고 생활공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크게 서민 살리기 7대
공약과 또 가정생활비 줄이기 5대 공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
드리면 요즘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놓
았습니다. 또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참
 큼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든가 해서 여러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성이라
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경우에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위협에 노출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휴대폰에 긴급호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인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 **문성현** :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에 60% 이상이 대부분 비정규직

입니다. 둘이 별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 대부분 “왜 맞벌이를 하나?”고 물어 보면 “혼자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아이를 낳은 경우에 아이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1개 하는데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당이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보육문제만큼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자체 복지제정 확충을 위해서 4개 개혁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3조 6,000억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3,600개 정도 되는데 1개 이상씩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것은 그 이상 길 타령, 다리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의 질 중에서도 교통·교육·의료·복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당에서나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삶의 질 하면 요즘 웰빙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 10조원 미만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육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노인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균연령이 2025년, 2030년대 되면 100세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 받고 일했던 그 기간보다 은퇴하고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는 것이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삶의 질 향상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 자녀교육, 육아, 이런 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깨끗하고 투명한 지자체 그리고 주민소환제, 독립감사관제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지방의 자율성 아까 심 대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까마는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요즈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지금은 사실 지나치게 약하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시·감독에 노출되어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만 해도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4분의 3이 독립감사관이 없습니다. 총무계장, 기획실장이 겸직하고 또 감사관이 있는 곳 4분의 1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가허가권이 3,800여건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지 못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칼집의 칼처럼 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청구권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지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데는 대단히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합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제는 중점을 집 짓고 다리 놓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삶의 질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좀더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감사관제도, 정보 공개청구권 이런 것들이 4기 지방자치 정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심 대표께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심대평**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에 전대제 도지사 후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에서 사법권 또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없는 이런 자치를 놓고 지방권력 운운하는 논란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독자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부 통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권한은 별로 주지 못하고 또 지방에 책임만 가중하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 부패라는 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IMF 경제위기나 또는 탄핵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정이, 우리나라의 안정이 지켜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지방자치 11년 동안의 공적을 국가 안정의 초석을 다진 그런 역할을 맡아했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 왔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고 또 세금부담도 줄여서 유류세 같은 것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복지예산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을 대주고 했을 때 복지예산을 어디에서 확충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재정부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고 할 때 지금 대학원까지 합해서 등록금액을 전부 합해 보면 한 10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을 빼면 8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조원 정도 부담을 덜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세금이나 재정 지출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의 씬씀이라든가 낭비 이런 것을 줄이면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무총리도 이런 것을 시인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5% 정도의 경성비 지출의 낭비가 있다, 그것만 다 합해도 11조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지금 21개지 산하기관도 35개나 늘고 또 공무원 숫자 늘고 이런 것을 전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씬씀이를 줄인다면 그런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자연 세수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자간 상호토론시간입니다. 주제는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입니다. 경제살리기는 지금 가장 큰 국정과제입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서 한·미FTA 체결이라든가 환율하락, 고유가, 실업, 제벌비리 등 최근 여러 가지 경제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당의 입장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한 그런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1분 30초간 들은 다음에 상호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먼저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유전 개발, 환율 조정 등으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면 승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환율문제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장기능에 맡기되 워낙 국제적 결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문제입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전업의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제벌비리입니다. 제벌비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벌이라고 남다른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제벌이라고 남다른 규제나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협상 방식이 아닙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큰 틀에서 국가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피부에 닿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사 안 되고 소득 줄고 아들딸 대학 나왔지만 취직 안 되고 또 과외비 고통이 여전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국가 부도가 난 IMF 사태 8년이 경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IMF를 맞은 나라 대개 그 고통이 10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의 터널의 끝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그리고 기업가간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이런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 첨단의료기기단지에 갔습니다. 원주는 군사도시입니다. 산업도시가 아닙니다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들어가면서 대학의 두뇌와 그리고 거기에 산업체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가 결합해서 여기에 R&D 자금을 넣고 대학의 인력이 결합해서 세계의 첨단의료기기사업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심대평** :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운전기사의 말씀이 “IMF 경기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서민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0일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순위는 38위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정부 부문은 47위로 급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 2002년 이후에 12단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2002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고 GDP 대비 4.8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YS 정부나 DJ 정부 때보다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을 막는 패트리엇 정책을 전개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박근혜** : 지금 세계경제는 30년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계속 저성장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민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하락에다가 고유가 또 최근에 이런 재벌의 비리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몰려들면서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권이 유지한 기조가 반시장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장을 무시하고 또 규제를 늘리고, 세금 올리고 중앙정부 키우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간섭 줄이고 또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 이것을 통해서 다

시 성장 엔진에 힘찬 시동을 걸고 그 성장을 통한 결실로 따뜻한 공동체, 그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년 동안 수출 중심 그리고 외국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수출 많이 해 봤자 경제발전이 그렇게 옛날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내수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출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미FTA 훨씬 더 준비 많이 하고 또 태세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진행되는 FTA는 저희 민주노동당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지를 성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복지가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복지가 파탄이 되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 **사회자** : 각 당의 입장을 잘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당의 질문하실 대표께서 나머지 4당의 대표들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해 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휴전회담을 할 때도 전행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날을 정해 놓고 회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담을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FTA 문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국익차원의 문제인데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니까? 더구나 미국의 형편에 맞춰 시

한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미국에 따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섭방식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

○ **정동영** : FTA 관련해서 3월 시한을 못 박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꼭 시한을 테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 시간 전에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부에 이른바 Fast Track, 빨리 할 수 있는 협상 트랙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FTA는 우리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안경테 산업이 있었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안경테는 프랑스나 이태리계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 기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 싹쓸이로 많이 팔다가 결국은 경쟁력을 못 갖고 안경테 산업은 쇠퇴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도전해서 경쟁해서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한국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익에 맞도록 협상할 것이고 또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줄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대표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부의 협상력을 돋구어주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심대평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에너지 관련 질의인데, 국민의 정부 때 LPG라든지 중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과부과를 안 했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고 여기에 대해서 휘발유를 100으로 보면 경유 75, LPG 60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 더 보태서 경유는 85, LPG도 50으로 이렇게 조정으로 경유차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고유가 시대에 개인

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유가과동 있을 때보다는 대응능력이 나 적응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유류세금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류세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유나 LPG의 세율을 높인단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세계 에너지 전선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또 전략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국민의 소비전략과 함께 병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한화갑** : 아까도 감세 이야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를 하니깐 당장 감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확대, 통일준비 등 재정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증세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노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증세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4%밖에 증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낮춘다면 적자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세금을 낮춰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7~8%, 9%대 성장일 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없이 세금감면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박 대표!

○ **박근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계속 추경을 했는데 과연 더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국민소득이 늘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경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때 계속 재정 지출을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가지고 뭐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돌면서 지금 다시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만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커 나가고, 민간에게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가치분 소득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가게 해야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노동당은 노조가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은 11.4%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22.7%, 비정규직은 2.4%입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과연 누가 노동자를 보호해 주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일자리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노동당은 결국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만개 이상이 중국으로 갔고 매년 5,000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개면 10명을 고용해도 30만명입니다. 결국 이것이 노사문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해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다 도망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노사문제 때문에 나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셨습니까?

○ **한화갑** :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문성현** : 그런데 노사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대기업의 하청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 자본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혜를 우리 중소기업에 주면 우리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창원에 있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 만납니다. 만나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IMF 그 혹독한 조건을 딛고 기업을 지켜 오시면서 그 분들의 경우에 저한테 노조 타령 안 합니다. “정말 외국인들에게 주는 저 땅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그 소득감면, 각종 세제감면 우리한테 주면 5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같이 후려치기 안 하고도 외국에 파는 부품 만들어 내서 잘 크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정말 노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화갑** :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외 병목현상 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심대평 대표께서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이유가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효과도 있고 또 1년에 30만~40만의 고용효과도 있고 교통비도 많이 절감되고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보면 오히려 행복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복도시페지 법률안을 내놓고 있던 말씀이지요. 우리 심 대표께서는 행복도시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한나라당과 같은 행복도시 페지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심대평**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안을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재미를 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수도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출발된 국가정책입니다. 이 국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켜 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만이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도 끝나도 우리 충청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충청인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이 말을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두당이 이 문제를 늘 선거 때만 들고 나와서 충청 주민들이 가슴 아파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기왕 행복도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박 대표께서는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70%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최근에 박 대표께서 대전에 가서서 행복도시폐지법안을 낸 의원들께 “이것을 철회하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뒤늦게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박 대표가 그런 말씀을 충청권에 가서만 말씀하셨고 중앙에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폐지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근혜** : 다 아시면서 자꾸 억지를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쪽 협상을 한 후에 여야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으로 토론이 당론으로는 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는 찬성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론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 폐지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소안에 따라서 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 이것은 합헌이다 결정이 났고, 또 토지보상도 벌써 80% 이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릴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또 확실히 당론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선거 때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이 충청도에 가서 이 폐지안을 한나라당 당론인 것 같이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럴수록 충청도민들이 들으실 때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폐지안을 낸 분한테 가서 “이것 이미 필요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충청도민들을 생각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 마나 마찬가지로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십시오.
- **정동영** :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 대표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날 양극화의 핵심이지요.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인데 많이 받아봐야 100만원, 110만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하고, 원인 가운데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강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기업은 잘 되는데 수출해서 번 돈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봉급 올리고 복지향상에는 투입이 되지만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기업,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다. 그리고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 사람들이 쓰는 식당이라든지 통근버스 같은 것은 비정규직이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노당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현** :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추리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냐, 그것을 여쭙 보시는 것입니까?
- **정동영** : 그렇습니다.
- **문성현** : 좋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 상당히 납니다. 저희를 계산으로는 100만원 가량 나고 또 저희를 계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깐 연간 100조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들, 저희들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조가 드는 돈을 노동자들 사이에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저희 수출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이 소득분배율보다도 자본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소득분배율을 조정해야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부유세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인한 그리고 고가 수익에 의한 세금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낳는 구조들을 먼저 손을 대고 그런 속에서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저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는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십시오.
- **정동영** : 처음에 감세 이야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커진다는 낙관론을 펴셨는데, 우리 한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실질적인 감세효과 90%는 최상위층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연두회전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른바 사회 안전망 복지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안전망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세금은 줄여야 되고 또 국가 채무는 많다고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면 여기에 접점이 없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부유층을 위한 혜택

로 감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한화갑** : 그것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9% 정도 되면 감세가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겨우 4%이고 금년에 5%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정되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감세는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 8·15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었어오, 전두환 정권 출범하면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때 유명한 것이 레이건이 취임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소위 Supply Side Economics, 그러니까 세이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에 기초해서 감세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이건도 적자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꼭 지속되어 오다가 클린턴 때 다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부시가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을 때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물어 있는 세수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적정선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세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께서 질문을 1분을 넘기시고 답변을 1분 30초를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제벌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벌비리는 편법상속과 승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제벌과 이익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관련 있는 그런 비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관련이 깊었던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최근에 정치자금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공천비리를 보니까 조그마한 권한이 생기자 비리가 터졌는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제벌과의 유착비리가 재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제벌비리는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됩니다. 횡령이라든가 분식회계, 배임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면 처음에 요란하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이런 것이 끊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엄격

하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또 세금을 깎는다든지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하게 되면 이런 비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꼭 정치권에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이것을 감추지 않고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 나갈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중에는 정말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갖게 되더라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실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가경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38위로 추락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61개국 중에 61위입니다. 풀썩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노사문제에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노사 경색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득도 늘리고 실업도 줄여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1석3조의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우선 스위스 로잔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 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자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위주에서 보면 노사관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그 기준을 보면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가법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규제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여쭙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노사분규는 비정규직 중심이고 이전의 '87년부터 해 왔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

는 것은 대부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그것이 안정되어 가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춰 가는데 있어서 지금 노사관계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십시오.

○ **심대평** : 아까 한 대표님께서도 노사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대표님께는 제가 세계가 지금 에너지전쟁 중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야당도 선거에만 올인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문제라든지 고유가문제, 실업문제, 한·미FTA 문제 등 모두 우리 경제의 약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원자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한 대표님께서도 환경문제와 연관해서 원자력 문제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원자력 문제는 소위 원자력 발전을 통칭하는 것이지요. 물론 의학에서의 암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은 거기에 종사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류에게 무해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석유자원 외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자연조건의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조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사고를 염려해서 그것을 기피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갖추어서 장치를 가지고 통솔하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고 결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핵폐기물 가지고 경주나 포항이나 영일, 군산까지 경쟁을 해서 결국 경주로 낙찰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넓혀 가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십시오.

○ **심대평** : FTA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성만을 앞세워서 타결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측근은 친미 또는 아주 순미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국내 대책과 국민 합의 도출절차를 결여한 이러한 한·미FTA 추진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또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면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동영** :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한·미 양국간에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적은 초안이 교환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6월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통한 FTA에 관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농업 분야지요. 취약 부분인데, 쌀 개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신중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한·미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 상품이 들어오는데 8% 관세가 없어지고 미국은 2% 수준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물건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방의 도전에 임해서 늘 극복해 온 저력을 생각할 때 한·미FTA가 한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이런 취약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또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또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순환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대전제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이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도 제대로 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재벌들의 독단적 성장, 이것은 이미 고용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첨단산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이 또한 고용증대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본들을 아직 외자의 신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 대부분 투기자본으로서 성장 동력으로 고용과 연결이 다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저는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하자, 국민복지에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성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과감하게 IMF의 그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을 살려서 그 중소기업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고 또 중소기업도 살고, 그래서 고용과 성장의 선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께서 좋은 일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찾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확인합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해서 체감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곤층이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IMF 경제위기 후유증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우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현재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단군 때 잘못이 있다고 단군 책임이라고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해결해야지요. 그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IMF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다 우리가 권권을 잡았는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IMF가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업적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최단시일내 극복한 대통령으로 남

을 수 있었던 것도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그런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해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미룬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금년에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세금 건어서 돈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큰 정부입니다.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32,000명 공무원이 늘어나긴 늘어났으니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 좌파정책 가지고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박근혜** :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연 7%의 경제성장 그리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후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3.9%,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 14% 이상을 자꾸 늘리고 17개 부처에서 87개의 사업을 벌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임금, 임시직 그런 것을 양산하는데 그쳤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 왜 이렇게 처음 약속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을 고치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7%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성장률은 전망하는 것이지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측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지요. 그러니까 당시는 배럴당 30\$ 시대였고 요즘은 70\$ 시대가 됐습니다. 유가가 2배 된 조건,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39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인계받았습니다. 카드대란인 것이지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실 7%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00\$짜리 경제, 작년의 GDP로 하면 1인당 16,000\$ 경제입니다마는 10,000\$ 이상 되는 그런 나라, OECD 국가들입니다. 마는 5% 성장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를 강조하시니까 올해는 5% 전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그룹의 국가 가운데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제일 건강하고 또 경제 체질도 나름대로 하나씩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아까 저희 한나라당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나 또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엄격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의 대기업 정책기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는 제벌의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벌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함께 무리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비자금을 엄격하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출자의 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 정서로 보면 아마 반대하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벌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경제를 더욱 규모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접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정책기능에서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한·미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권투경기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를 너무 잘못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급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을 선택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를 하려면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작전이 전체 되어 있지 못했다. 미국은 거의 완벽한 작전을 쓰고 9라운드까지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는 3라운드 준비도 못하고 링에 급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한·미FTA 문제가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링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도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불리하면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미FTA 문제는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책을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에서 쌀 협상을 비준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금년 2월까지 농림부, 농민대표, 국회가 3자 합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나왔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미FTA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익을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 기술이 축적된 데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가지고 덤벼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미FTA 한다고 하나가 준비해서 착수하고 이런 것은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있어서 힘으로 밀리는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권익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을 의심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다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 발견된 것은 다들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대표들께서 말씀하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조선소, 자동차회사에 취직해서 잘 먹고 산다. 그런데 우리 손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시켜도 취직이 안 된다. 또 취직 됐더라도 금방 나온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저는 아까 박 대표께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대한다고 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시기는 기업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12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책상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엇그제 아산에 있는 제철 계열이었습니까. 1,000명쯤 되고 5,000억원 매출하고 초임이 140만원쯤 줍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호텔 수준이었습니까. 대단히 복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고졸 여사원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다” 미스매치라고 아까 말씀한 대졸사원은 넘쳐 나는데 고졸사원을 구할 수 없는 현장, 그래서 같이 점심하면서 보니까 중국에서 온 근로자가 35명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 양성과 배분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5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정부는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리고 전국에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충실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십시오.

○ **문성현** : 미스매치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심대평 대표께서는 행정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율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는 나라 운영의 기본을 바꿔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미국에서 적자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런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뭐냐 하면 달러가 많으니 나가서 외국에서 땅을 사라. 그런데 외국 땅도 지금 버블이 금방 트일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속에서 이 환율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의 원인은 하나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서 현재 외환보유고가 아마 2,300~2,400억불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세계에서 3,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 외국인 주식자금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10%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투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외환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하루에 200억 달러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환율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달러환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화환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 달러환율만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유로환율과의 문제, 그리고 원화를 가지고 대외지불을 할 수 있는 외환체제의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십시오.

○ **문성현** : 주로 박 대표께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복지보다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박 대표께서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때 그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병원가기 쉽고 또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기 쉽고 또 젊어서 열심히 하고 늙어서 먹고 살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세금 얼마든지 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박 대표께서 이 복지 문제와 세금의 문제를 너무 감세 방향으로 찾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역사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복지는 세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되는 것이지 감세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소박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복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되는데 분배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다 똑같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이나 다 못 살자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되면 그 자체가 우선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복지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잃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양을 해야 되니까,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고 투자가 많이 되면 같은 퍼센티지로 세금을 걷어도 세

수가 훨씬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자** : 지금까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과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각 당 대표들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입장과 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 관심사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각 정당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받으신 대표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 30초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수 회사원** :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가 주요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29km의 철조망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근까지 투입된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집권당의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대추리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맞는 시위대 없어야 합니다. 매 맞는 경찰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과 군이 매 맞는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위문화에 대해서 국민적 성찰이 한 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스케줄보다 빠른 보상,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끈질긴 대화 노력을 해 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또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계획은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미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120년 동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가 있었던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평택에서 오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시다가 떠나시게 된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분들과 충분히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영상질문 보시겠습니까?

- **성해숙 주부** : 심대평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에서 많은 탈세와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진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 심 대표!
- **심대평** : 혹시 올해 3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데 생각나십니까? 세금 해방일입니다. 한 해 365일 가운데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자기가 쓰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평 과세와 탈루세액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율의 인하와 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더 매겨야 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조정 권한을 좀더 확대한다면 공평과세에 관해서 또 탈루세액의 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평한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무엇이든지 말아서 다 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지방이 중앙정부를 오히려 가르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세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시겠습니까?
- **고계형 농민**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민으로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농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께서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돌려 세운다거나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박근혜** : 지금 말씀하시는 농민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도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FTA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쌀 같은 것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쇠고기나 감자 같은 이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빈틈없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에 쫓겨서 줄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 환경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물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미 회사원** : 문성현 민노당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년 후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여성인데 지금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 1명당 1.08명 정도로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돌린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사회적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의 문제, 맞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의 문제를 지금은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보육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야기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따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끝으로 다섯 번째 영상질문 들겠습니다.

○ **김현철 회사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에 몰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 이후 3차 산업 서비스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이동을 통해서 머리로 돈 버는 시대입니다. 고등학생이 사장을 하고 컴퓨터 하나로 돈을 벌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을 연장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뇌로 돈벌이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결국 개인이 가택근무를 하게 되고 내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의 인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결국 우리가 두뇌로 푸는 방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도 실업자가 있지만 자발적 실업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내가 고르는데 원치 않은 일자리는 안 가서 실업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우선 현실 타개를 위해서 일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외에 파견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결국 큰 동량으로 길러서 써 먹는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후보공천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비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만약에 적절치 못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 1분 30초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깜짝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중심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신생정당이어서 ‘깜짝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래가 없이 지방행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행정전문가가 정당을 창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섰겠습니까? 중앙정치판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바꾸겠다고 하는 제 본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을 정치로 했습니다. 절대로 깜짝정당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뇌 끝에 한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측화를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올바르게 서서 중앙에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정당은 우리 기반인 충청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내면 저는 제3의 정치세력, 대결정치와 대권정치, 이념정치를 종속시킬 수 있는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유달리 여성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후보자 공천문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초의원까지 여성후보를 1번으로 내는 것을 당의 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여성후보를 할당해서 내는데 문제는 아주 좋은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창당된지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도로 2년 이상의 정치 교육기간을 두어서 우수한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성의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우수한 인재를 정치 일선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교육의 강화 그리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정치 지망생들이 실제로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PFA라고 하는 People First Academy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천과정은 초반부터 비리가 터져 나와서 해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 대표께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구시대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과거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의 혁명적인 공천 개혁을 해서 중앙당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공천권을 각 시·도에 전부 분권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드러나는 대로 척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 오고 있고 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행동이나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행착오 또 문제점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찾아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더 완벽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것이 한 번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많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된 추천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박근혜** : 그런 관여가 없이 공천심사위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결국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춰서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천을 할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참조해서 공천심사위에서 면접이라든가 또 경선,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후보 공천은 지나치게 이념적 요소만 강조해서 지역 실정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이 반주민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보들은 전혀 중앙에 승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농민은 농민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고 다들 같이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에 더불어 사는 우리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의 당의 성격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눔과 돌봄의 정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공천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게 자랑하고 싶은 공천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후보들을 중앙당이 아니라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뜻이 있어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비리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소환에 응하겠다, 자진해서 응하겠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나가면 근원적으로 공천 관련된 문제, 이후에 또 재직중에 생기는 비리,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저희 민주노동당처럼 진성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의 공천을 적극화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요구가 공천과정에 많이 작용을 했는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 **문성현** : 실질적으로 울산은 제외하고는 전부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초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득표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번 더 참여하고 또 뽑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 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 때 울산이 거의 당선권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승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사전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당이 노동조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농민, 서민 전반적인 또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보다는 전체적인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

- 고 또 공천과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저희 민주노동당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23%, 한나라당 5%, 열린우리당 2.5% 이것이 저희들은 정당 지지도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을 훼손하려는 여당의 음모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금품수수, 어쨌든 당비건 아니건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다른 경우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분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어섰던 그 체제 사람들이 당에 갓을 돈을 안 갚고 44억원을 지금까지 빚으로 남겨놓고 떠나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선 끝나고 돈이 남아서 외국여행까지 했는데 당에 갓을 돈을 안 갚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떨어졌고 빚에 쫓들리고 그것을 안 갚았다고 해서 차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갔느냐?” 이렇게 해서 특별 당비를 이야기해서 받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야 참 억울하고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그런 모양을 보여 준 것은 거듭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또 공천과정에서 상향식 접근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지배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제가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수공이 안 가고, 지금 어느 정당이고 후보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나,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도 있고, 전략공천도 있는 것이고, 당원들만의 여론조사도 있는 것이고, 국민경선제도

도 있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해 가면 시비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일체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이 사람 공천 주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대표도 아닙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이나 외부영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표명했던 공식적인 공천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런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단체장이 두 분밖에 없고 대부분 한나라당이거나 다른 야당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강세인 지역에는 대개 후보로 나서기를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집권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계안 후보가 있어서 강금실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선 그리고 전 기관 10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시장 뽑고 군수 뽑고 도지사 뽑고 도의원 뽑고 기초의원까지 뽑는 아주 뿌리 국민경선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한 그런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 의원은 전국 단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전면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즉 1인 지배정당 그리고 제왕적 총재의 문화 그리고 밀실에서 실세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의 길을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최근 언론사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공천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지지를 이야기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당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여질 때까지 저희들이 좀더 낮추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또 인물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주까지 16개 광역단체장 다 한 일이 있고 걸어온 길이 반듯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승리의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깨끗해진 데 이어서 지방을 투명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공연하게 시장은 3억원, 구청장은 3억원, 시장은 4억원 이런 식으로 낙천자들이 돈을 주고 매관매직했다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의 수치입니다. 열린우리당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5.31 선거가 끝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시장군수 당선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토론내용에 대해서 각 정당별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1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정치란 효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을 편안이 모시기 위해서 더욱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더욱 가다듬고 채워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맘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800명의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라는 자랑스러운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의 주는 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표입니다. 농민들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시대에 안심보육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한 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노동당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성원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것만 가지고 그리고 성장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저희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복지혁명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하도록 합시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1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 한 날입니다. 민주당을 지켜 봐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한국정당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민족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반목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토론 날카롭지만 그러나 불쌍사나운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당 대표가 TV토론 이렇게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우신 민생 현장에 5당 대표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정치불신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잘못된 것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정치개혁하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 하심 여전합니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심대평** :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켜 보셨습니까? 이번 5.31 선거를 통해서 국민중심당은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경제도 살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빙자한 코드정치, 무능정치, 무책임정치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은 안정과 발전을 회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중심당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 일꾼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을 국민을 위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빙자하거나 정치싸움 판을 일삼는 그런 정책을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5.31지방선거 투표일,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투표일이 중앙선관위 표어처럼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 주신 각 정당 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정책안들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아주 차분하게 토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5개 정당 대표 초청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에서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자 (신 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 울입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왔고, 또 각 정당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평가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상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그리고 열린우리당 강봉위 정책위의장이십니다.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 **사회자** :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이십니다.
-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최인기입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전제희 정책위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전제희입니다.
- **사회자** : 토론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의제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토론회 의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또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토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오늘 첫 번째 토론주제지요. 부동산 정책 및 세계 분야에서는 중과세 등 부동산 세계개편 문제를 37.4%가 중요했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 부동산 거품론 30.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문제 12.7%로 조사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28.9%가 교원평가제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고, 그 다음은 고교평준화 유지문제 21.7%, 2008학년도 대학입시문제 17.6%로 집계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선거방송

- 토론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수해문제지요. 먼저 각 정당의 재난대책 여쭙 보겠는데 우선 각 정당,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이 재난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복구대책을 갖고 있는지 네 분께 한 분씩 여쭙 보겠습니다. 먼저 장상환 민주노동당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상환** : 저희 민주노동당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심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제라고 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이 난개발을 했고 그리고 치수대책이 미비하고 그리고 사후에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방안 없이 미봉책으로 해 왔던 것이 반복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선 이번 수해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국민들한테 오늘 정당토론회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는 중부지방의 경우에 500mm를 넘는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민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끊긴 교통망, 통신망, 전기 이런 것을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라고는 하지만 평소예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절감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인기 의장!
- **최인기** : 이번 국민의 엄청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준 수해는 총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의 수자원관리와 수방대책에 큰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3일 전에 강력히 촉구했었고 정부가 어찌 신속히 선포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기 때문에 5당 대표가 모이는 국가 차원의 수해방지대책을 논의하자고 저희 당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년 수해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해예방 투자를 늘린다든지, 소하천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연차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근본대책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강

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제회 말씀해 주시지요.

○ **전제회** : 우선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 집도 있고 재산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것을 극복하는데 일치단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는데 오늘 정부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같은 것도 지금 선 지원 후 정산 제도로 신속하게 연달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제자리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수인성 전염병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재해가 해마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실설계로 인한 인제성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더욱 유감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인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복구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전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아까 장상환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인제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제나, 천제나 논란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인제도 반 있고 천제도 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댐 건설 문제’ 이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장께 여쭙 보겠는데, 댐 건설 문제 열린우리당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봉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댐 건설을 못 한 것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기상이변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리고 아까 전제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저께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댐 건설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홍수 조절 기능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댐 건설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에 영월댐이라든지 한탄강댐 이런 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과도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올 때 다른 대

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저는 최근에 수해가 이렇게 빈발하고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물이 많아지는데 강폭은 좁도록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을 충분히 높이 쌓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주시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3~5m 정도로 제방을 높이고, 상당히 강폭을 넓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군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상부에 지구 댐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파주시와 같은 그런 노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 두 분 한쪽은 댐 건설도 고려해 볼만 하고, 한쪽은 댐 건설이 아니라 난개발이 문제라는 입장이신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전제회** : 원칙적으로는 추가 댐 건설은 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불가결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댐 건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봉균 의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상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준설공사를 해서 강의 수심도 더 깊어 해 주고 폭도 넓혀 주고 독도 높여주고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하천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찬반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보다 기술공학적으로 또 모든 수량 같은 것도 계산해서 만들어 내면 서로 찬반이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 **최인기** : 우선 댐 건설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에 홍수조절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댐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댐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댐의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먼저 정부가 투자하는데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댐 신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번 수해의 특징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댐의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산, 계곡을 흐르는 소하

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난개발에 의해서 많은 토사와 흙이 산사태와 함께 매몰됨으로써 온 피해입니다. 대부분 수자원에 의한 재해피해는 소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약 35% 정도 되는 것이 평균 예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소하천에 대한 대책도, 재원지원도 하면서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수해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결국은 소하천, 치수문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치수 예산이 일본은 GNP 대비 0.4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0.07%, 그러니까 7분의 1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분의 1밖에 안 되는 치수 예산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이 치수예산 문제라는 것은 결국 티 안 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심 안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 **강봉균** : 치수 예산을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치수예산을 강조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뒷걸음질 밀리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고피해가 나고 난 뒤에 복구에 드는 돈, 그것보다 적은 돈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문제는 치수대책하는 것과 함께 저지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연년이 피해를 겪는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든 아니면 치수대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계가 났다고 하지만 농민들과 또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환경이 나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저는 정부에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복구가 아니고 정말 예방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사실 복구라면 전에 있었던 것을 복구하는 그 정도지 근본 예방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전제회 의장!
- **전제회** : 저는 최인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개수를 통한 우리 수재예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가 4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투입되어야 될 때 예산이

덜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꼭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방대책비가 87%이고 복구비가 13%인데, 우리는 예방대책비가 40%이고 복구비가 6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전에 미리 막는데 있어서는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토론회 직후에 저희들이 지금 바로 예산국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점에 같이 유의해서 각 당이 협력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보다 중점 투자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 **최인기** :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수해복구에 들어간 예산이 21조원입니다. 그런데 예방투자에 투입된 돈은 10조 5,000억원입니다. 딱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예방에 작은 돈으로 피해를 막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습수해가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수해지역과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해위험지구총람」을 만들어서 지도와 함께 국가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또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방투자계획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소하천에 대한 예방문제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본대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강봉균** :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지금 예산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안전관리 의식과 시스템도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일산 신도시를 끼고 있는 고양시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기술이나 방재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 지역에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 산을 너무 급경사로 깎고 거기다가 영성한 철망으로 덮어두는 이런 식의 안전 의식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제나, 천제나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까마는 안양천의 제방붕괴도 지하철공사가 뭔가 세심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인기** : 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가위기관리 경보가 16일에 10시 반에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날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보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할 수 있는 시

간을 주고 언론과 협력하고 자치단체에서 계도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63개 마을에 7,800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안전관리 전파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전체회 의장!

○ **전제회** : 저도 강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상당히 많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87%가 경사면이 쏟아져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도로가 물에 잠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폭 꺼지고 잘라지는 것은 공사 자체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자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조기에 대처시키고 조기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은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말씀하십시오.

○ **장상환**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 정치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데 집중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로를 건설할 때도 고속도로처럼 전혀 자연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런 것 말고 계곡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수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서 계곡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덮이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통행되도록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뭐든지 제해 전혀 피해 없이 하겠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지요.

○ **사회자** :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 **강봉균** : 짧게 지금 재난방송 전용채널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댐 건설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다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부동산정책 그리고 세계 분야”

인데 8.3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주택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반면에 시장이 왜곡되고 악화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 각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공통질문하겠습니다. 각 토론자 분들께서는 1분 30초 내에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상환 말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정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 8.31대책이고, 올해 3.30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속도로 유지되다가 조금 주춤 하긴 했습니다마는 상승이 그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과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그런 정책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시장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가장 먼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이 보유세는 크게 양도세하고 재산세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양도세의 경우에는 투기 소득이 발생한 것을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 이득 자체를 일단은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구 이상 소유하는 가구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1가구 2주택 원칙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투기적인 수요 자체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주택업체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다 보니까 공급가격이 높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균 말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별로 크게 내리지 않았지 않느냐, 또 지금 각종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주택건설도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3.30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단 정지가 됐고 또 일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가격이 최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소위 주택 투자, 투기, 아파트를 사두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식을 일단은 진정시키는 이 효과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당이기에 때문에 부

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면서 앞으로 거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공급이 불안한 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할까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지요.
- **최인기** : 참여정부가 3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정책은 금방 강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용어라고 한다면 저는 ‘부동산 참여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투기꾼을 쫓아가면서 전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99%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99%의 국민들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가격 면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정책을 참여정부 시작됐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이 금년까지 하면 52%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대로 이미 올라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분당 신도시의 44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채권 입찰 포함해서 8억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이었던 것이 1,8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많은 중산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또 하나의 실패를 했었고, 이렇게 값은 오르고 강남·북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는 이 정책은 분명히 국민에게 실망을 크게 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전제희 정책의장!
- **전제희** : 8.31대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첫째는 아까 의도한 것이 뭐냐 하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는 제대로 되게 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강남의 집값은 거의 급속도로 오르고 강북의 집값은 그대로 있거나 약간 올라서 집값이 강남하고 강북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양극화가 된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주거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집 없는 분들인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또 과표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과중해서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있던 자리가 떨어지는데 세 부담은 가중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까 여론조사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이 정책에 대해서 열린마음으로 대폭 수정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생각이 많이 조금씩은 다르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각 정당에 계신 정책위의장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에게 여쭙겠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 계속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31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 조세부담을 약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도 당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향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자면 1가구1주택에 대해서 중부세,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조세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봉균** : 사실 이 정부가 8.31대책 같은 것이 조세정책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서민들한테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데 일단 국민의 관심은 조세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강화한 조세정책이 6억원 이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혹은 1가구 3주택 이상자들에게 양도세율을 올린 것이 중요한 세제 강화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같은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도 강화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이 1가구 1주택에서 오래 살았다, 그런데 이런 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나 양도세가 많으면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재산세, 아까 최인기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국민들의 98%에 해당하는 이 분들은 재산세를 많이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6억원까지는 10% 이상 증가 안 되도록, 3억원까지는 5% 이상 증가 안 되도록
- **사회자** : 그 부분도 나중에 상호토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여쭙 보겠는데 주택시장이 규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가지 예로 경기실사지수, 이번 달에는 55.7%이었는데 지난달보다 17.4 포인트 급락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도 안정화시키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1분 30초 내 답변해 주십시오.
- **최인기** : 우선 요즘 건설경기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형 건축 허가면적이 금년 5월에 작년 대비해서 21%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주택부문의 건설물량도 작년보다 무려 49%가 줄었

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주택시장이 공급 측면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또 경기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으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초과이익환수제 또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재건축 시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시장 규제도 완화하면서 필요한 평수를 공급해 주고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또 수도권에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열한 곳의 새로운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강남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께 여쭙겠는데, 정부는 조세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공급확대를 주장하고 있지요?
- **전제회**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물론 공급확대라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투기를 발생시켜서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제회** : 이 자리에 계신 강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경제통이신데, 경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면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급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수요가 있을 때 그 공급을 적절히 해 주면 그것이 가격안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쓸 수 있는 정책이 주택값이 너무 오르면 주택대출금리를 좀 내려서 금리를 통해서 하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쓰고 있는 세제라고 하는 것은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만능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께 제가 여쭙 보겠는데, 아까도 보유세 문제 잠깐 말씀하셨었지요? 민주노동

당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외국 수준만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 **장상환** : 예.
- **사회자** :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유효보유세 유효비율이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하고 연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8.8배, 미국은 2.7배여서 1%의 세를 부과했을 때는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서 3.3배 높은 세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부분에서 이런 것도 고려하셨나요?
- **장상환** :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강화는 그런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공급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민간 위주로 공급확대가 이루어지는데 분양가가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서 실제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확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강조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싱가포르식으로 확대를 해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별적인 그런 거래를 막는다는지 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 면에 있어서도 사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세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지만 소유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다 보셨겠지만 각 정당 간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상호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토론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각 토론자들 질문해 주시는데 질문답변은 각 1분씩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이 최인기 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 **전제회** : 지금 장 소장님께서서는 공급을 하더라도 공공부문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간 경기 활성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인기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인기**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은 민간부문에선 주도해야 안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에서 제외된 것 부문에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수요를 억제해 왔던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위축된 이 시장을 수도권 중심으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강북의 뉴타운 건설계획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임대단지를 서울 근교, 특히 이번에 건교부가 발표했었던 강남 세곡동, 내곡동을 포함한 250만평의 대규모단지를 주택건설지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우리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께서 최인기 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재건축이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여서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그리고 대형 위주로 공급이 되어서 사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은 쫓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주거민을 위주로 한, 서민을 위주로 한 방향이 되어야 되고 투기가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 **최인기** :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시장이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형주택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또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부담금제, 용적률 제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화해 주면서 그 부분을 공공이 분량면적으로 팔아서 흡수해서 서민주택을 짓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오래 된 집을 좋게 고쳐서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낡았는데 이런 데를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예요. 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용적률을 쥐서 올릴 때 늘어나는 효과는 5~10%

- 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인기 의장 말씀하신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없다, 이것이 문제예요.
- **사회자** : 최인기 의장 발언하시지요.
- **최인기** : 지금 용적률을 210% 정도로 강화한 속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108% 정도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건설교통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주면 그보다는 저는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재산가치 올리려고 재건축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령을 바꿔서 안전진단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재건축단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제했던 내용의 완화가 된다면 저는 재건축시장은 곧바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투기를 견인하는 장치는 초과이익으로 환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께 질문을 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한나라당 전제회 의장님께서도 공급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민간건설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데 민간이 매입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싸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 분양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를 정부에서 강제적인 수용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 답변하시지요.
- **전제회** : 아까 최인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부문이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매입하던 공공이 매입하던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해서 각종 도시로 해서 전 국토를 투기장화로 만들어서 막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주택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공공부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이 그 정도 든다면 민간도 경우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저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구태여 구분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라지 이런 비정상적인 수요는 또 수요대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해 주는, 그러니까 어디에 전문적인 투기꾼이 가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할 때 선량한 주부들이 거기에 가세하지 않도록 하려면 뭘냐 하면 앞으로 좋은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근처럼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소위 조세정책 같은 금융정책 같은 수요조절이 필요해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 **전제회** : 저는 지금 강 의장님께서 수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정부가 8.31대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 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하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질문하시지요.
- **최인기** : 근본적으로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을 썼습니다. 세금으로 또 규제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임시방편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값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아가 투기수요 또 이런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한편의 조세정책과 또 다른 한편의 공급정책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공급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수요억제정책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값은 올려놓고 조세부담이 거래가 중단된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정책이 뒤따르도록 하는 면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회자** : 시간 다 됐습니다.
- **전제회** :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필요한데 민간이 들어가면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께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지금 장상환 소장께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지금 택지를 공급하는 기능과 집을 짓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택지공급 기능은 공공부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공사 같은데 공공기관에서만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업체들한테도 공급가격이나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장상환** : 저희들 생각하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고 일반 서민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주택개발증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보급률은 103% 인데 자가점유율은 5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자가보유율이 92%입니다.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공사가 발주를 하더라도 집은 건설업체가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업체는 건설과정에서 자기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확보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보유를 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강봉균** : 이렇게 바로는 못 물어보나요?
- **사회자** : 규정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 **강봉균** :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 **사회자** : 다음에는 최인기 정책위의장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자, 지금 그런 입장이시지요?
- **장상환** : 그렇습니다.
- **최인기** :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중한 부담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중국적으로 집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자기 재산 처분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강남 이런 곳은 정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도 전단만한 부자들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 특구처럼 만들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고 격차가 커지고 교육환경도 더 심하게 격차가 커질 뿐 아니라 생활상도 커지고 이렇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에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상환** : 그 점에 대해서 연료하신 분들 가운데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많은 분들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뉴욕에 중심가에 아주 고가의 주택을 연료한 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집을 처분해서 더 안락한 곳으로 옮겨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의 핵심 주거지역에는 역시 업무가 굉장히 바쁜 그런 소득이 높은 이런 분들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세금부담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또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전재희 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장 소장님께서서는 서민을 위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범주 속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료하셨든지 아니면 퇴직해서 연금이라든지 아주 고정 수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아까 뉴욕처럼 집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사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만약에 1%로 한다면 6억원의 주택이면 연간 얼마를 내야 됩니까?
- **장상환** : 600만원이지요.
- **전재희** : 600만원 내고, 거의 10억원이면 2,000만원 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집을 팔

- 고 이사를 가는데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삶의 질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세금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낮추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사실 그런 소득이 낮으면서 재산이 많은 분들의 숫자는 아주 적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면적을 줄이면 사실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으면서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보조비를 드린다는지 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희** : 저는 중부세를
- **사회자** : 아니요. 지금 규정상으로
- **전재희** : 잠깐만요. 말씀이 틀린 것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돼요. 규정 때문에 토론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 **사회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웬만하면 허락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근본적으로 세제 문제에 있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래세 부문에서 사실 그동안 5%였던 취득세, 등록세를 4%로 내리고 다시 2.5%로 내리고 2차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거래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거래세를 1% 수준으로 과감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자는데 저희 민주당도 동의하고 그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9년도에 1%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선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하는 것은 지금 기존 주택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2.5%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새로 집을 지어서 분양할 때 이때는 아직도 4.5%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4.5%짜리를 2.5%로 낮추고, 그래도 거래세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면 2.5% 자체도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기 의장께서는 옛날에 내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틀림없이 경기도지사나 전라남도지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1%까지 낮추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세수가 너무 확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전제회 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전제회** : 제가 잠시 멘트를 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낮추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냥 대책 없이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감소된 만큼 다른 세금으로 재정보전책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안에서 의견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수찬 부의장님 같은 분들은 지금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야 된다, 종부세도 좀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조세정책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 **강봉균**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표 자체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주택에 투자해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통념을 이 정부가 한번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손낼 수 없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에서 오래 산 사람들 낮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더니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내느냐 하면 한 10% 법니다. 3억원짜리를 13억원에 팔았으면 10억원에 대한 10%니까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집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인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당론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질문하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정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로 높는데 자가점유율이 54%에 불과하고 40 몇 퍼센트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취하려면 결국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집 없는 사람한테 옮기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신규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그런 방법 외에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 **강봉균** : 우선 정부는 소득이 적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으로 역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1만호 정도 지을 목표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가구를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개발해서 정부가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것보다는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미진하고 답답하신 부분이 있지요. 더 토론회 보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형평성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골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바로 고교평준화지요. 이 고교평준화제도 지난 30년 가량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고교평준화제도 유지를 놓고서 평등주의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특목고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평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각 토론자들에게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기본입장 어떠한 것이지요. 그리고 특목고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교육정책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제가 네 분 토론자들에게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발언제한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전제회** : 우리 한나라당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준화 기조는 유지하되, 획일적인 평균평준화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공·사립 자율형학교를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은 뭐냐 하면 특목고도 원래 평준화의 여파로 생겨서 예술, 체육 등 특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특목고가 생겼는데 이제는 특수 분야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수에 맞추어서 좀더 특목고

의 지정도 광범위하고 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선진화 3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율형공립학교육성법, 둘째는 교육정보공개및격차해소법, 셋째는 대학입시자율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층 경쟁력이 향상되고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발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저희들은 고교평준화정책은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은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논리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PISA 국제학력평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핀란드 같이 평준화를 하고 있는 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못 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외국어, 과학고 같은 것들은 결국 입시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향후 교육정책은 저희들은 역시 우리나라의 교육핵심문제는 대학 서열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학통합운영체제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일류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교육재정을 지금 현재 GDP 0.3%에서 OECD 1% 높여서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가든지 간에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리 같이 '7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를 한 것은 취지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같은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있지만 적어도 자녀들 교육기회만큼은 빈부간의 격차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 취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이 나라가 먹고 살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을 찾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시킬 것이냐, 학교간의 경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학교 안에서 서로 공부 잘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명문학교를 자꾸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과외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평준화의 틀을 살려가면서 학교 안에서 밖으로 결국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이 창의력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교원양성임용평가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우리 교육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최인기** :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수월성을 높이는 문제,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성 기회를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들이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일반화된 현상 속에서는 평준화정책이 아니면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해집니다. 따라서 평준화 틀은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든지 특수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화의 경쟁능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아주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학의 성격을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일류, 이류, 삼류대학이 아니라 대학별로는 특성에 따라서 대학을 자랑하고 프로 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 또 전문분야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하면 거기는 IT를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라고 되어 줌으로써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에 맞는 인재들이 거기를 목표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시간인데 이번 순서는 상호토론을 아가 부동산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정당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면 그 토론자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당 토론자에게 다른 정당 토론자들이 역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 토론과정에서 단 한 번의 추가질문 찬스가 있습니다. 역시 질문답변 1분씩입니다. 제가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원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공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이 교원평가제가 성공한 나라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저도 매학기마다 업적평가 그 다음에 강의평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받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 **장상환** : 그런데 교원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이나가 문제가 되는데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논문의 수라든지 질적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결국 우수한 대학에 얼마나 넣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서로 교육방법을 가지고 서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또 봉급하고 연결시켜서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되 그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자들에게서 질문해 주시지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 **강봉균** :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선생님들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은 평가하는데 선생님들은 “우리는 다 똑같다.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민노당 같은 데서도 조금 그것을 분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 답변하시지요.
- **장상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교원들이 방학 때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교사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금사제가 확대되는 방식이 적절하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 **최인기** : 교원평가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자기능력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보다 나은지를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아마 교사 사회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

- 평가제를 실시하되 지금 당장은 성과급제도하고 보수에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은 그 선생님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급과 연결시키는 제도로 참고를 할 수 있는 평가를 일정 정도 시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상환** : 저도 교원평가제도를 강제적인 일시적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여부는 아이들을 우수한 대학에 넣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에 종합적인 내용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원들의 평가를 이야기해야지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서 교사들이 정말 다양한 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 **전제회** : 저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측면에서 보면 또 반드시 도입되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께도 도입되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도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도 평가를 받고 또 교수님도 평가를 받고 학생들도 평가를 받는데 선생님들만 별도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정 학생을 가르치는 열의와 의욕이 충만하시다면 저는 평가를 지원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한다, 그리고 성과급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장상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교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진한 분들에게는 또 재교육 기회를 드린다는지 해서 교사들이 경쟁을 해서 봉급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한 분들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교사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께 묻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 있지요. 이것이 내신을 더 강화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물론 학부모형입니다만 실제로 내신 강화가 사교육 심화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그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신 조작 파문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학교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한 내신 적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 취지인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강봉균** :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좁은 통로에서 또 우수한 학생들은 일부 가르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위 공교육에서 질이 높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놓고 보면 어떤 학교든지 하여튼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 학교마다 차이가 다른데 어떻게 저 학교 1등과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학교 1등을 같이 놓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간의 격차를 누가 정할 것이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선배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최인기** : 근본적으로 내신성적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내신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지려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고등학교가 서열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려면 대학이 먼저 특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자질 있는 사람은 저 학교의 내신성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간 서열화가 되어 있지 학교간 서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되어야 내신성적을 올리는 것에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지역할당제 같은 것은 일류대학에서 전부 강행해야 되는데 특성화가 안 된 속에서 내신성적 올라가면 그것이 바람직한 인재가 양성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최인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간에 서열이 매겨져서 그것이 나중에 학교 마친 뒤에까지 신분에 영향을 주는 이것은 폐단이지요. 그

래서 그런 특정한 분야의 각각 1, 2, 3등 되는 대학들이 여러 개 분포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교육부나 이런 데만의 노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대학도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입시도 보면 내신만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성적, 수능성적, 논술고사 이런 것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뭔가 적응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회 순서입니다.
- **전체회** :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해서 모든 학교가 다 같고 내신 조작 같은 이런 일이 없다면 내신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분명 학교 간에 차이가 있고 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이 음악, 체육 골고루 다 가요. “그런데 왜 학원을 보내세요?” 이러면 내신성적을 잘 받으려면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을 3개, 4개, 5개를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고 계속 공교육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적에 매몰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강봉균** : 지금 다른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과외열풍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정부가 정책 잘 하면 없어질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남다른 하나의 우리 사회만 갖고 있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학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없애버리려든지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돈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보살피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제가 원래 이야기한 학교서열화는 측정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지금 고교평준화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공영혁신학교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립형 사립고가 일시 위주의 귀족사립학교라는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공히 혁신학교도 요즘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발상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영재교육 이런 것도 결국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학 서열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안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대

학에 가든지 그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질을 높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정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 교육당국의 방침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립형 사립학교가 전국에 6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학교 같아요. 광양이랄지 포항제철고등학교, 현대충무고등학교인데 포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자녀들을 70% 정도 가르치는 것 같고, 자립형 사립학교는 아직도 시범단계인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확대하지는 않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과를 조금 더 면밀히 측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 토론과정에서 한 번 찬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묻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민주당 최인기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 **장상환** : 방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제정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시다.

○ **강봉균** :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역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 예산규모가 늘어나야 될 텐데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 교육제정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습시다.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시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학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셨어요?

○ **최인기** : 예.

○ **사회자** : 보면 찬성이 46.1%, 반대가 40.3% 그래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시다.

○ **최인기** : 개정에 대해서입니까?

○ **사회자** : 개정요구에 대해서요.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된다가 찬성이 더 많아졌는데 이것이 작년 12월에는 반대여권이 더 많았습시다. 그래서 5.3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6개월 만에

찬성 우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국회에 임하셨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난해 연말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내년 3월까지 시행을 연기하자는 안을 6월 임시국회 말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시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사학법 중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만은 저희 민주당에서 4분의 1로 7명 중에서 하자는 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원의 승인 취소 건이라는지 또 친인척 학교장 임명권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개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바뀐 것은 아마 진보·보수 간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시다. 고맙습시다. 이제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지요. 먼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정택위의장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 **전체회** : 우리가 사학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그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학은 나름대로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특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이사라고 해서 그 이사추천권을 초·중등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만 갖고 그 다음에 대학평위원회가 갖는데, 이렇게 추천권을 딱 특정단체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정치장화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인기** : 저는 사립대학교 총장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두자고 했던 것은 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립자와 재단 이사회의 전횡과 관여를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비리를 유발할 수도 있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일부 사학에 불과하지만 투명한 학교운영, 비리 없는 학교운영 그리고 재단 책임자의 학교운영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방형 이사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임원을 승인 취소하는데 지금은 조금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현재 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처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상환 소장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제정을 대폭 확대해서 고등교육에 공적제정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립대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문제가 있는 대학에 제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인데, 임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자체 내에서 해결 못 하면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최인기** :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개정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개인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학교장의 잘못을 보고도 방조한 것도 들어있고 어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자율성을 저해하는 몇 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비 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아까 최인기 의장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이사제는 한 번 실행을 해 보자, 원래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전부 재단 이사장 주변 사람들만 가지고 이사회를 하지 말고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학부모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 번 넣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을 흐려 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 것인지, 전개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을 봐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걱정이예요. 한나라당이 그것 딱 집어서 그것 안 고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 **전제희** :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나라당도

개방형 이사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꼭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위원회만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사학의 투명성을 두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 감사 제도입니다. 그것을 학원이라든지 대학평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철저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한 것을 또 공개하고, 또 그것을 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예 임원 개정 요구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보완을 한다면 투명성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감사원이 4개월에 걸친 감사를 해서 비리는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을 밝혀내지 않고 이것을 자율성을 해치는 쪽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 물어보신 것입니까?
- **전제희**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질문이 2개가 나왔으니까요.
- **강봉균** :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순서상 최인기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 최인기 의장이
- **강봉균** :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 **최인기** :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는데, 다만 그 추천권을 ‘등’ 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수 평위원회 이외에 ‘등’의 범위가 어디냐?
- **강봉균** : ‘등’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 **최인기** : 그러니까 ‘등’으로 해 달라는데 앞으로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단과 이사진들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측면에서 개방형 이사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구성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설립자나 재단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제도도 제가 보니까 한나라당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모든 것이 국회에서 새롭게 토론이 한 번 되면서 입장을 정해

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강봉균 의장께서는 나중에 전제회 의장께 제가 여쭙 볼 테니까 그때 찬스를 쓰셔서 답변도 하시고
- **강봉균** : 진행이 되도록 진행하셔야지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구요. 작년 말부터 한나라당이 이 개방형 이사제를 안 고치면 국회활동을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말고 어디인지 하는 것이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제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금 독립적인 거리에 있는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추천받자는 것인지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것 찬스 쓰신 것으로 보고 전제회 의장께서 나중에 정리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께 질문하겠는데 지금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공립혁신학교인가?
- **전제회** : 공영혁신학교입니다.
- **사회자** : 단어가 복잡해서 설립계획을 가지고서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전제회** : 예.
- **사회자** :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교육시장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고교평준화제도를 대폭 수술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도시하고 농촌 간에 그리고 강북, 강남 간의 교육격차가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교육시장주의만 앞세워서 그러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렵다고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전제회** : 저는 우선은 우리 한나라당이 '교육시장주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해서 공립학교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스러운 요소는 있지만 일단 공립학

교에서도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공영혁신학교의 모델이 미국의 차트 스쿨인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에디슨스쿨입니다. 13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교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취학아동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디슨스쿨이 상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은 폭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기업적인 것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제회** :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과편성의 자율성을 두고 교장선생님과 교사의 모집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에서 우리 공립학교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자율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실험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달리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교육이 질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원도 공모해서 뽑아보고 학생들도 배경이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 뽑아보고 교과목도 선택해 보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실험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출신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종래 식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것 많이 공약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도록 권유할 용의가 없습니까?

- **사회자** :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재희** :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이것도 시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획일화된 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형평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질문하십시오.
- **최인기** :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주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비슷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 저는 결과적으로 재정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립과 사립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율형 사립학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차이는 재정자립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이 구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취지인가 해서 여쭙 봅니다.
- **전재희** : 저희들은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완전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개방형 자율학교와 우리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큰 흐름의 개념은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자립형 사립고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뭐냐?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지 않느냐, 교육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의 입학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씩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대학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대학한테 자율성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 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제가 한 분씩 여쭙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저희들은 교육 선진화 3법의 하나로 대학입시 자율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특화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대학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는 지금 자율이 있다는데 대학이 자율이 없다고 한다면 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 **사회자** : 다음에 민주당 최인기 의장!
- **최인기** : 저는 대학입시제도는 국립, 사립 대학교 총장을 다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신성적, 논술, 수능 이 세 가지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조합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현재 틀은 당분간 유지를 하더라도 대학별로 논술을 통해서 적절한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양을 검증해서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분야의 자율성은 저는 넓혀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특성화가 다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전반적인 자율선발권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장!
- **강봉균** : 대학들이 학생을 뽑는데 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느냐,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대학이 있는 것인데 선진국들도 대학자율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대학의 입시자율화를 하자는 것이 과거로 회귀하자고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면 대학 가기 위해서 다시 또 과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입시위주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한테 제량권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던 그것을 선의로 수용할 수 있는 대학들 스스로의 수용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환 민주노동당 소장 말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대학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입시를 대학자율화하고 그리고 시험을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과거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다시 파행화시키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테스트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율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수한 학생은 무조건 많이 받아들여서 하자는 이런 대학의 방침은 시기 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에 의한 공공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가 대학의 80%인데 이것의 비율을 낮추어서 공립으로 상당히 전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도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준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선진국 시스템이지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백년은 고사하고 지금 2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마 여기 정당에서 나와 계신 네 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시고 계신데 정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마무리 발언을 네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것이 1분 30초씩 각 분에게 드릴 테니까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오늘 정당별 정책토론회 주제였던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자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으로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심리를 바로 잡고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육평준화의 내실을 다지면서 국제 경쟁시대에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기능도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이랄지 어떤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에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우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사망 실종자를 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재활의지와 또 복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싼값에 좋은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 틀은 유지하는 방향에서 계속 국회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꼭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짚어질 우리의 동량을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바뀌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마는 교육정책의 실험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학부모의 기대 가능성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촉구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전제회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전제회** : 저도 다시 한번 엄청난 수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와 한나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싼값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 없는 사람의 전세 값 같은 것은 오르지 않아야 되고 시장도 제대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너무나 세금을 가지고 수요억제책을 쓰는데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이제는 야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들 저희들은 평준화의 틀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평준화의 단점을 비평준화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율의 폭을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의 폭을 넓혀 가면서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학교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평가해서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학의 자율을 위해서 사학법 개정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음에 장상환 소장님!

○ **장상환** : 부동산 문제는 역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1가구 1주택의 소유제한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급방식도 결국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역시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평준화 속에서 교육의 질을 올리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역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파행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대학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가 안 되고 또 학력간 임금격차가 심해서 결국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사람들이 자산가격에 급급하는 것은 결국 노후 보장도 이 자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회보장을 확충하는 것도 부동산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유력한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토론자 바쁜 시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1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자 (가톨릭대 법학부 박선영 교수)** :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박선영 교수입니다. 200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약 5주 후면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때입니다.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당원의 당비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액수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각 정당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해야 할 그러한 책무를 지게 되는데 오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또 KBS와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서로 비교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제 바로 오른쪽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끝으로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늦은 시간 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주철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게 될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산재해 있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두 번의 회의 끝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노동 분야에서 조사대상자의 36.9%가 오늘 토론회 첫 주제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은 한·미 FTA, 그리고 청년실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44.3%가 북한의 핵 문제 해법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지역균형발전 23.5%, 그 다음에 전직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기조연설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국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에서 정치인들 제발 싸움하지 마십시오. 단상 점거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처럼 5당 대표가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5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2,900건 이상의 법률안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중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 **사회자** :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밤도 늦었고 또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때 저희 5당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되고자 애를 썼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9명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큰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문제, 저희 민주노동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오늘 대표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그만 것이나마 시원하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계섭 대표최고위원이십니다.
- **강계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한나라당 강계섭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요구를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옛날 왕조시대부터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배불리 먹이는 것 외에는 옳은 정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불법파업으로 불바다가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전세 대란에 땅 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한화갑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규명하고 찾아내서 교정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되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가지고 국민한테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 아닙니까? 맹자도 말 했습니다. 국민이 집권자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할 때는 언제든지 갈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런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봉사라고 준 것이지만 국민을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국환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의 공동대표 신국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핵과 안보위기, 경제부진, 또 교육과 사회 갈등, 정치의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마음 상하심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국민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안정에 함께 노력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예산과 법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특히 선진국을 향한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정치의 새 틀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지금 기초연설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현 정부는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대책을 발표하면 잠시 집값이 추축하는 듯하다가 다시 폭등을 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값은 물론이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값이 점점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각 정당의 정책은 또 무엇인지,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이고,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 집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문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민주노동당은 제일 먼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집을 지어서 분양했지만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그래서 70만 채가 남아돌고 있지만 집 없는 사람이 10명 중의 4명입니다. 땅 장사, 집 장사하던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집이 아니라 돈입니다. 투기입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서 이제 투기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후 토론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 **사회자** : 오늘 한나라당은 집값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강재섭** : 우선 시장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집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복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시장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격을 하고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첫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급과 거래가 모두 위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자가 5번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소소한 것까지 다 합치면 30번도 넘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깐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폭탄에 의한 규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한화갑** :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잘못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데 결과 가지고 뻔할하다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공급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깐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강력 투기억제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이 되풀

- 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서 고층건물도 짓고, 그리고 용적률도 넓혀 주어서 어린 아이가 올 때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니까 그것을 주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 주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개발하고 용적을 높여주고 세제 내리고 이렇게 해 주변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자** : 지금 수요공급 원칙을 따라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국민중심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국환** : 저희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9번의 대책을 했지만 그것이 정책과 제도 면에서 근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3년에 처음 주택대책을 할 때 세계적인 금리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현상인데 투기로 보고 규제와 각종 정부 개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줄인 그 결과 주택의 폭등을 가져오고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을 아울러서 종합적인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방은 주택이 분양되지 않고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택은 시장에 맡겨서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를 적절히 늘리게 하고, 또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께서는 그동안 개인적인 의견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 여당 대표로서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것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다시 일어나서 분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 과열을 막아야 됩니다. 로또폭행 추첨처럼 청약이 과열되어서 최초 분양자에게 특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 다섯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의 대표께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골고루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대표께서는 반론과 함께 답변을 하시는 식의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를 상대로 한나라당의 강계섭 대표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계섭** : 제가 문 대표께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성현 대표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하신 발언 중에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집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주의 발상이 아닌지,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주택 토지공개념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적절한 대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성현** :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 골고루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실제로 투기의 목적으로 한 가구가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두 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 없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부유층 100명을 보면 1만 5,0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무려 40명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채가 넘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3채 이상 가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해서 3채 이상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신규 주택부터 청약 못 하게 하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부동산에 대한 이념적 접근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질문 준비하셨으면 문성현 대표께 하시면 됩니다.
- **한화갑** : 서민주택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주택문제 해결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 가지고 각 당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성현** : 양도소득세가 갖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주면 과다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 때문에 집을 부득이 팔아야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높여 놓으면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희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명확한 그런 측면들을 살펴서 첫 번째는 3채 이상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투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높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득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채 갖기 위해서 조금 집을 늘려가기 위해서 파는 것들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도 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높여 매기고 실수요자인 경우는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화갑** : 제가 반론할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조금 이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국환 대표최고위원께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 **신국환** : 민주노동당에서도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서민정책이다, 대단히 민생을 도탄에 빠지는 정책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또 분양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문제인데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중산층에 주로 할애하고 서민에 대해서 정책이 부진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 더 열심히 하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문성현**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의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집을 가질 소득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예 집을 가질 꿈조차 갖지 못한 이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경기부양과 완전히 떼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땅 장사를 중심으로 해 왔던 주택공사의 공급을 집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임대주택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김근태 의장도 말씀도 하셨지만 분양을 하되 싼값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가 공개되어야 되고 또 제도로서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라든지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금 김근태 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김근태 의장께서 문성현 대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 문성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찬반 두 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과 일부 제도언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또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세금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부세,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성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성현** :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부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억원으로 낮추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부세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할 것이고, 자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증부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6억원에서 명확하게 묶어두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것은 사후 약방문격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제에 국민들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저희 정치권이 뜻을 모아서 그것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공급을 하더라도 싸게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표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도 제기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강제집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먼저 포문을 여시면 되겠습니까.
- **한화갑** : 무슨 포문을 열까요? 한나라당에서는 세세면에 있어서 부자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나라당 주장이라고 해서 꼭 부자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과연 한나라당의 서민주택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제집** : 우선 저희들이 어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에 관한 법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앞으로 잘 통합을 하든지 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대지는 결국 그

- 대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거의 반값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세금 폭탄만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부계획과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환매조건부 분양 말씀을 다시 해주 셴는데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님 질문하시지요. 한나라당의 강제집 대표를 상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 **신국환** : 한나라당 강제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결과가 지금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사실은 이번 정부 정책의 가장 잘못이 지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의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인데 이 분들이 주택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강제집** : 신 대표님 말씀대로 결국 한나라당이 작년에도 정부가 8.31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부동산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대책안을 그 전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그때 한나라당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 반영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신 대표님 말씀대로 공급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강남 짝기, 한풀이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드리기만 하다가 산발적으로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강제집 대표최고위원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 **김근태** : 강제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한나라당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나 전제회 의장, 손학규 지사 이런 분들은 한나라당이 보좌 비호정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인지 묻고 싶고, 시중에는 이런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부동산 세금정책은 모두 폐기할 것이다, 공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동산 폭발할 것이다, 이런 수근거림이 있는데 이 자리

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정책은 변화시킬 것인지, 종부세나 양도세를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우선 무엇을 잘못 아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문제입니다. 그 종부세는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기로 일부 조세개혁특위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의원들은 이것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기를 지금 잘못된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열린우리당 정권이 이렇게 흔뜨려 놓았는데 한나라당이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 할 때 지금 당장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기준을 우리가 다시 9억원으로 바꾸자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다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자를 비교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겠느냐, 또 부동산 정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서도 한나라당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문성현** : 전반적으로 여당에 드리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은 꼭 한나라당에 맞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나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발 건에 대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계에서 58개에 달하는 자세한 내역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좋은 예지요. 다른 데보다도 시장이 그 권한을 발휘해서 다른 데보다 아파트값이 싹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서 지금 단체장들이 그 권한을 발휘해서 굳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잘 따지면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파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그 부분은 저와 문 대표님 생각이 똑같습니다. 천안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성무용 시장 말씀이지요?

○ **문성현** : 예.

○ **강재섭** : 그래서 성무용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 소속 성무용 시장이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해서 훌륭한 실적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격려하는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 대표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 비교적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성현** : 다른 태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를 상대로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요.

○ **신국환** : 한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데 세금 이야기를 하면 부자에 대한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OECD 30개 국가 중에 우리가 경제는 중하위인데 세금은 최상위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세금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대표는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번 국회에서 특히 부부합산제라든가 또 한도를 올린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가 많은데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여당에 건의를 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한화갑** : 뜻이 맞으면 우리가 하지 왜 여당에 건의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민을 위해서 9억원의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었다는데 우리가 매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비례해서 한도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재산이 서울에서 1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민이 6억원짜리 집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6억원짜리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느라고 빚내야 됩니다. 뼈듯이 마른했으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한계 가지고 세금으로 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하면서 바리다메식으로 더 많은 세금 걷혀 오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주공이 책임지고 하면 됩니다.

○ **사회자** : 신국환 대표께서 조금 전에 부부자산소득합산제를 제의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지요?

- **한화갑**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무지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김근태 당 의장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대표를 상대로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갑 대표께서는 중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인지, 또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인지 한나라당의 정책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한나라당 정책이 채택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우선 6억원에서 9억원은 제가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IMF 때도 어려웠지만 9억원 했어도 서민들이 집 사기가 지금보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공급도 없고 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정책의 모순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든지 비례해서 가야 정상인데 결국 이것이 역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참작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하고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면 같은 좋은 것이고 한나라당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똑같은 정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같고 다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민주당 정책이 얼마나 이득을 주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저는 시장에서 중부세를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어느 한도까지는 정해서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사회자** : 조금 전에 한화갑 대표께서 문성현 대표께 질문도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문성현 대표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면서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성현** : 의외로 민주당에서 공급정책 중심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화갑** : 그렇습니다.
- **문성현**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공급을 해도 정말 집 없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집을 지어 놓으면 집 있는 사람이 오히려 55%를 가져가고 집 없

는 사람은 45%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복합고층을 짓자, 그러면 서울을 보면 주로 재개발하는데 역시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공급을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싸게 지어야 된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들어간 공급정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필요한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값을 유지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은 우리나라 같으면 주택공사에서 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주택하면 변두리에도 지을 생각하는데 도심에 고층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출·퇴근하기 편리한 것 아닙니까? 출·퇴근이 멀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공사가 전담해서 짓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토지공사가 땅 장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 기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토지공사에서 서민을 위해서 대지 만들고 주택공사에서 짓고 그 외 개인은 비싼 집 지어서 비싸게 팔아 먹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그 한도를 정해서 세금으로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조금 전에 김근태 당 의장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무엇이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도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강재섭** : 그래서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한화갑 대표께서 전에 보면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논리에 따라 입안한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뺄질식으로 내놓았다, 이제 노 정권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믿어줄 사람이 없다,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투기적 가수요가 덧붙여져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국은 시장 기능유거의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전폭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저희 한나라당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한나라당 생각하는 방식이 민주당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러한 주택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썬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본원인을 제거해서 치유를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거죽 상처만 치유하려고 하니 병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분산되어서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을 주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정책 가지고는 좋은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강계섭** :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 최고위원을 상대로 질문들을 하시면 되는데 열린우리당부터 시작을 해 주시지요.
- **김근태** : 신국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정부에 전하겠습니다. 정책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5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잘 실현이 안 되고 오늘 토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토론자리를 통해서 토론과 더불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5당 대표회담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손학규 전 지사가 이에 호응을 해 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위해서 5당 대표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서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경제정책의 근본문제로 되어 있고 정책실패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정치권에서도 5당 대표회담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정부가 이를 받아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제라면 하십시오.
- **사회자** : 이어서 문성현 대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성현** : 우리는 큰 당이 아니라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 걱정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값, 집값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월세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세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전·월세 입주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인상을 5%로 제한하고, 또 10년간 계약갱신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아시지요?
- **신국환** : 예.
- **문성현** : 이것이 저는 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것 못지않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요즘 보면 꼭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도 정책 의미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중심당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국환** :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는 6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일이 규제를 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논의되도록 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단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 주택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중산층 주택에 지원이 됩니다. 이런 자금을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이런 정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강 대표님 질문하시지요.
- **강계섭** : 얼마 전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한다 하다가 안 한다 하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신 대표님께서는 담보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락가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오락가락을 하셨습니다. 특히 분양권이 공개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바뀌다가 얼마 전에 닷달없이 민간부뿐까지 분양원가를 마치 공개할 수 있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한국은행이 갑자기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 하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일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대출제한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 굉장히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서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수요 있는데 공급을 늘리고 시장기능에 더 맡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가공개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안 하는 것이 더 득이 많다.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여기에 대해서 한화갑 대표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한화갑** :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02년도 통계를 보면 정부에서는 100%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이 83.8%이고 경기도가 94.2%입니다. 그래서 100% 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수가 전체 국토의 1.8%입니다. 2%도 못 됩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고 불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또 공장이 들어서고 또 다른 레저시설이 들어설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이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처럼 고층화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제로 이것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 대표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층화할 수 있는 데는 고층화하고 수요가 있는데 따라서 그것을 맡겨야 되지 정부가 일일이 고층화를 해라, 저층화를 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경계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처럼 된 것이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규율하고 규제를 하고 또 수요도 규제를 하는 이런 문제가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문제를 수도권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기고 또 세금 문제도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 질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질문에 주시지요.

- **문성현** : 최근 정부가 하는 부동산정책을 보고 국민들의 경우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멀어도 한참 멍니다. 정말 계속 공급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하기로 한 후분양제라든지 원가공개의 농지문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근태 의장께 묻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총리가 누가 되느냐, 재정부 출신 관료가 부총리가 되면 '이제는 부동산 투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계속 재정부 출신을 부총리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장관도 재정부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말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기 부양적 차원에서 투기조장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우선 부동산 폭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부동산 폭동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처럼 장기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아들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도 경기 부양적 정책을 채택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공재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이 일부 계층에 국한된 공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제섭** : 한 번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우리 너무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정말 국민들 가슴에 분노와 불을 질러 놓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 진솔하게 하실 수 없는지, 그런 건의를 드릴 각오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만 왕창 올려놓고 결국은 전세대란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을 각 지방마다 떠벌리면서 결국 개발정책을 남발해서 집값 올리고 땅값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하실 각오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근태** : 강제섭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폭동,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

력을 했지만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스럽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대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토지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자금이 되어서 수도권으로 역으로 몰려들어서 투기요소로서 작용하는 것 인정합니다. 현물 등 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서도 질문할 것이 많으시지요

○ **한화갑** : 지금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저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내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국민보고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해서 50조원 이상의 돈이 풀렸습니다. 이것 어디로 갑니까? 그 돈 투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건설업이 국민소득에 기여한 것이 9.3%입니다. 자동차가 3.5%, IT가 7.7%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짓는데 2만개의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1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봐서도 건설업이, 집 짓는 일이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재입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이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정책을 취했고, 두 번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제안했고, 세 번째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정하게 온건하게 제한하겠다는, 이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심을 갖고 추진을 했지만 아직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발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신국환 대표 최고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김근태 의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수립할 때 주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너무 조잡하게 했다, 서둘러 했다, 단기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당에 적어도 각 당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대책을 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김 의장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도 검토해 주시지요.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김근태** : 오늘 혼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여당이기에 때문에 정책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신국환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재 같은 성격이런 측면이 역시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든 물론이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도 공공재 성격을 강화해서 주택 폭등을 막고 주택특위를 건설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각 정당 대표들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정책이 잘 개발이 되어서 국민들의 근심과 불안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어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심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하면서 예산은 6.4%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부분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하고 의료 분야, 그리고 국방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반론이 제기 되고 있고, 또 지금은 경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보는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강제섭** : 한마디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예산이다. 또 빚을 내서 생색을 내고 나눠먹기

식의 그런 예산이다, 또 미래와 성장을 무시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또 적자예산입니다. 말로는 20조원쯤 빛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5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분배 예산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노린 정권홍보비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미래와 성장에 대비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 분야는 1% 증가, 고등교육 분야는 4.9% 증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일회성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화갑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말할 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짜여진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팽창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 6.4% 늘었는데 내년 성장률을 6.6%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은 4.6% 그것도 이루어져 봐야 하는 것이니까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13조원이나 되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누적 되면 결국 국민에게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302조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소비성 예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장예산이 아니고 복지부분 지출이 너무 커서 10% 미만이라지만 결국 이것을 전부 합하면 1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SOC가 줄었고 FTA 체결에 대한 취약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지켜 주시고 적자예산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신국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강한 선진국, 또 한반도 평화의 통일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계속해서 적자로 가고 또 국제발행도 9조원 이상으로 발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302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총생산의 33.4%입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고, 내용 면에서 지적한 것이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복지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복지는 10.4% 증가한 61조 8,000억원, 그 이외 경제성장 0.9% 증가한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김근태 당 의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근태** : 좀 갑갑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4당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살필 것은 살피고 줄일 것은 줄이되 법정기한을 맞춰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쓸데는 많고 여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서민경제 지원해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도 지원해야 됩니다. 또 사회 양극화도 개선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복지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고심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문성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에서 복지가 많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예방접종주사를 무료로 하긴 했는데 그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뱃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복지예산은 대단히 융통성이 낮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명백하게 건설토건으로 많이 가 있는 건설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많습니. 선진국 수준인 15%로 줄여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용들을 과감하게 복지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아이들 보육비 문제 때문에 아이들 낳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그만 놓고 길 좀 그만 댕고 저희들은 안심 보육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입장입니다.
- **사회자** : 각 정당의 정부예산안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호토론을 하지 않고 사회자인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강계섭 대표 최고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강 대표께서는 지금 열린우리당의 내년도 예산이 지나치게 분배에 치중되어 있고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실성 예산이다, 그래서 아까 홍보예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통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비판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계섭** : 대선용 분배예산은 많고 결국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예산은 절대 부족하

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낭비성 예산은 좀 깎는 대신에 성장잠재력 확충하는데 주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보다는 결국 민간투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통해서 민간투자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중견기업을 2배 이상 늘리기에 지원을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데 예산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수해복구지역을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SOC 확장 이런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6.4% 증액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 실업문제, 경제 파탄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데 내년에는 더 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실업문제, 저희 대학생들도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 실업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화갑** :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청년실업예산이 90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인데 사회적 일자리는 113% 1조 4,000억원으로 6,700억원에서 113%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일자리는 줄어들니다. 결국 앞으로 20% 국민이 벌어서 80%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실업문제는 국민이나 정부나 앞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일하니까 일자리 뺀 것 아닙니까? 또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세계도 배우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서 널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사회자** : 규제완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과연 국민중심당의 정책이 무엇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차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어서 과연 정부예산안을 바라보는 국민중심당의 관점이 무엇이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저희당의 기본방향은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성

장과 복지 동반 성장을 하니까 복지도 잘 안 되고 성장이 안 되어서 결국 일자리 창출 안 되고 실업이 늘어서 청년실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둘도 성장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특히 교육을 혁신해서 인력을 세계 일류경쟁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교육이 잘 안 되어서 사회교육으로 되어서 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대표시니까 당정책의 등을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많이 협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파이 자체를 이제는 키워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많습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성장이나, 분배나 이렇게 양자택일식으로 물으면 어느 것 하나가 우선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상호 선순환하고 상호 뒷받침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가는 예산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또 교육이나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다리 놓고 도로 뚫고 이런 것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경기가 대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각 당이 제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세금을 깎자, 복지예산을 깎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조원 수십조원이 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성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경제성장과 분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는 늘 화두가 되겠지요.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배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방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방비를 증액해 놓은 것인데 환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국방비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이 질문은 저희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전쟁억지력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국방을 볼 때는 자꾸 무기로 남북간에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명백하게 평화구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 국민 여러분, 미국이 돌려준 것은 그만큼 국방이 안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앞으로 6·15시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국방비 무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남북평화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법에 관한 것인데 지난 10월 3일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실제로 10월 9일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UN안보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고 PSI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에 바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언제까지 포용정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협을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지속을 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간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국제정세하고 맞물려서 주변 국가들과는 어떻게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양각색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을 1분씩 들어오고 상호토론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화갑** :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해야 됩니다. 단, 이번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에 대해서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남북간의 비핵지대화를 켤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이면서도 우리 문제인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 문제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했다, 그

래서 한국 외교가 한걸음 업그레이드 됐다, 이것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신국환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신국환** : 결국 우리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강한 선진국이 되고 한반도 평화인데 그런 면에서 북핵은 반드시 이것이 제거되고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다, 우리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또 일본, 러시아도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발전과 또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직접 북과 대화하는 노력은 더 하고 또 경협을 비롯한 정책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요, 특히 UN안보리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지금 두 분께서 단호한 정부의 입장이 부족하지 않으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성공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성공한 방식대로 일괄타결해서 주고 받는 방식이 성공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기해야 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제재를 해소해야 되고 경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야말로 남북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개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미 FTA Made in Korea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서는 북한 핵 사태 이후에 바로 방북을 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또 다른 각도에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문성현** : 예,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갑갑한데 실제로 핵에 찬성이나, 반대나 지나가서 핵실험은 됐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서 6자 회담이 재개되고 있고 6자 회담에서 어떻게 풀릴 것인지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시점에서

북·미간에는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중요한 당사국인 우리 한국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설사 6자 회담이 아까 한화갑 대표께서는 역할을 하기 바랐는데 지금대로 가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에 대해서 할 말을 하려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문제에 이어서 그것보다 원초적으로 묶여 있는 인도적 지원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북에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인도적 조치도 안 하고 6자 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속히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 **강제섭** : 북한 핵이 우리 한반도에 얼마만큼 큰 재앙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 정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결국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의 흉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방법을 써서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제공조를 해야 되고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상호토론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대표 한 분이 나머지 대표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신국환 대표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한화갑** :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69년인가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해서 결국 동독하고 물꼬를 텄는데 통일은 반대 당이었던 보수당의 콜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콜 수당이 집권하고도 동독에 대한 정책은 동방정책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통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때 추진했던 햇볕정책 이러한 포용정책이 어떤 경우는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그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신국환 대표께서는 저희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국환** : 기본적으로 한 대표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상은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햇볕정책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햇볕정책이 아니고 포용으로 해서 그것이 대폭 확대되어

서 오히려 북핵을 유도한 그런 감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대북의 경제 협력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 또 그것이 국제공조를 같이 하는 차원에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바탕 위에서 철학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어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한테 질문을 하시지요.

○ **한화갑** : 아까도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안 만납니다. 취임하자 대북송금 특검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특검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 안 합니다.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칫국 먼저 마시고 정상회담, 정상회담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평화변영정책입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을 바꾸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변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속 까먹었습니다. 햇볕정책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대북관계를 계속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Initiative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해 갈 텐데 우리 정부가 어디다 발 밟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여당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태** :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인 것처럼 남북관계도 생물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정상회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화갑** :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 **김근태** : 그것이 제2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을 진전시켜서 우리가 북한의 정책당국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지만 인권문제도 있고 핵실험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한다든지, 또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이어서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문성현 대표께서 지난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지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우리 외교는 우방이고 대북관계고 전부 교착상태입니다. 북한으로부터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미국과 큰소리 쳤지만 고맙다는 이야기 못 들었고, 미국으로부터도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같이 안 갔다고 해서 불신을 받고 있고, 결국 남북문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민족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정 안 하는가, 미국하고 동맹 이야기할 때는 트집을 잡으면서 민족문제 이야기했을 때는 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들어줄 것 들어주고 협의할 것 협의 안 하고 그러는가, 북한에 가서 물어봤으면 그것 답변해 주세요.
- **문성현** : 그렇지 않아도 가기 전에 한 대표님 뵈고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니다. 저는 왜 현재 이 정부가 북으로부터도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나에 대해서는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견해에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특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대북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북측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실제로 샌드위치가 되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기본적으로 쪽 이어진 흐름들이 지금 남측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북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는 실제로 할 말이 없다는 관점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강계섭 대표 최고위원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우리가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북한의 안전과 핵을 맞바꾸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 대표께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과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게 압박정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햇볕정책이 퍼주어서 핵실험했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4년에 핵이 동결됐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핵무기 만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 때 그 시설에서 나중에 연료봉 처리해서 플루토늄 핵폭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98년부터 시작이니까 6년 전에 이미 북한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햇볕정책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강계섭** : 우선 한나라당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대표님 말씀 가운데는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잘못 느끼면 이미 만든 것을 기정사실화해 주자는 취지로 차치하면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화갑**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강계섭** :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이 결국은 채찍과 당근이 균형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화로 평화의지를 갖고 나왔을 때는 항상 국제관계에서 견제를 하든지 자기들이 외톨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평화 쪽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근 위주로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먼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국환** : 김근태 의장께서 혼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와 북한 관계에서 자주와 민족 공조를 우선시하지는 주장과 또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특히 한·미 공조 문제, 또 미국과의 대량살상무기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문제, 또 다른 나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당사국인니까 수범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국제협력하자, 국제공조하자 이런 것의 핵심은 아무래도 미국과 잘해 보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해서 럽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물러났고, 또 멀지 않아서 대북한 정책조정관이 취임하게 되면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 때가 했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시 대통령 입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교

류와 협력,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국환** : 문성현 대표 이전에 평양 다녀오셨는데 우리 남북간에 직접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극성이 없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데 비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제로 아까 한화갑 대표께서 북측이 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쭙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북도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제 역할을 못 찾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다시 확인하면 다들 포용정책, 포용정책 이야기하고 퍼주기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북의 문제는 북미관계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남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저는 퍼주기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고 저는 개입정책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남쪽이 남북관계에서 역할이 주어 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험의 문제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 래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점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국환** : 다음은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입장이고, 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6자 회담을 준비하는 그 이외에 정부가 소극적인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이것을 대응 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을 복돋아줄 그런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강재섭** : 국가 안보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지금 호치 부지 자꾸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초당적으로 우리 국가가 나서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6자 회담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UN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그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노상 불참하다가 또는 반대하다가 이번에 겨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진심이 아니고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PSI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적극성을 띠어서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UN의 이런 결의에도 동참하고, 또 이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북핵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의논하고 각오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 **신국환**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다마는 햇볕 정책하고 포용정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모든 정책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용정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용정책을 시행할 때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하고 함께 간다, 이 세 가지 전제 하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해서 이름은 근사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핵을 갖고 대만이 갖고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없애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교류협력을 하되 우리는 통일을 전제로 영도적인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아지는 통일입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많이 생겨서 남한 실업인이 경제활동하면 우리가 경제통일 아닙니까?
- **사회자** : 지금까지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 의장 혼자 포화받으시고 고생하셨지요. 이번에는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고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태** : 지난번에는 문성현 대표께서 북한 핵 실험한 직후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에 가서서 북한의 당국자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결가지는 언론에 보도됐는데 북한 당국자와 만나서 하신 이야기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아까 문성현 대표께서 '북한도 진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다면 6자 회담이 재개되는 가운데서 중국과 미국만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북한도 또 하나의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문 대표, 혹시 짐작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우선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됐는데 주요언론에서 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명백히 북핵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북측에 말하기가 쉽지 않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 장께서 걱정하지마라, 이것은 미국 협상용이고 또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지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남측을 향해서 겨냥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을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회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된다인데 저희들이 정상회담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냐, 해야 된다, 만나서 악수라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손 쓰면 간단합니다. 인도적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 풀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 대표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 **김근태** : 아까 강제집 대표께서 초당적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초당적 협의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을 막는 문제, 이것도 또한 함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직후에 한나라당 최고회의에서는 전면교류중단, 대북봉쇄, 전쟁불사 같은 초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제집** : 저희가 핵이 터졌으니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불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식의 늘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테 전쟁은 예를 들어 이윤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쟁불사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에틀리 같은 분이 수상을 영국에서 할 때 히틀러하고 2차 평화협정 맺고 왔다고 흔들었는데 결국 처칠 말처럼 전쟁에 대

비했어야 되는데 그 처질이 전쟁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미국 파트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은 대화정책을 선택했는데 부시는 봉쇄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런 환경의 차이는 인정이 되고, 또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아가 말씀하신 대로 함으로써 협력의 강도, 신뢰에 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차이를 강조하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셔야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 **한화갑** : 포용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의 용어상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해 놓고 평화변영정책으로 그렇게 바꾸어 쓴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취지인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쌓아놓았던 남북관계 환경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점점 훼손됐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포용정책은 결국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영토적인 통일을 말하는데 통일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북한에 개성공단이 여러 개 생겨서 한국 실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도 경제통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다만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 **김근태** : 신국환 대표님, 북한 핵 실험 직후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5당 대표회동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국환 대표께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용기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만약에 그때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됐다면 그것은 북한에도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결국 북한이 핵 실험 이후에 핵을 가지겠다는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때도 결국 UN 제재 결의가 안 되었던 때이고 UN 제재 결의를 봐서 우리 정부가 국제흐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어렵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제공조에 의해서 핵을 없애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앞으로의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응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정부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 질문하시고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 **문성현** :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저희들과 원하지 않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한 나라당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설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고 강경하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은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특히 그래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굳이 전신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7·4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핵과 관련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계속 한나라당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6·15 선언까지 된 이 시점에서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안보, 이런 것이 더 발전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도 국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고 뭔가 제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 되는데 아까 국지전 불사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국지전 불사, 이런 것은 한나라당이 전혀 한 적이 없고 자꾸 한나라당을 전쟁에 관계되는 것처럼 찍어 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 때도 물론 대화 다 했습니다. 대화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고 오히려 주면서도 눈치보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 정부의 간을 너무 키워 놓고 북한이 결국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회담도 할 가치도 없다고 아까 한화갑 대표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이 국가안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게 하고 온 정부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문성현** : 한화갑 대표님, 아까 남북관계를 잘 해 나가는 햇볕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일본 등 대외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까 중간선거 때문에 바뀌어서 다른데 그 이전에 네오콘(neocons)의 문제는 럽스펠드를 비롯한 미국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무조건 미국에서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에 대해 그렇듯이 미국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사표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설사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낙관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콘적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용기있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관계는 미국 가서는 친미고 국내에 와서는 반미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하고 협력 하에 남북문제를 추진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미국에서 승리하고 달라진 기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메사추세츠 출신의 존 케리하고 그 다음에 위스콘신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이 이라크에서 미국 철수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냈는데 아마 민주당이 다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철수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의회와는 확실히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현** :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님, 저도 아까 청와대 회동을 기억하는데 분명히 그때 다른 분도 다 그랬지만 신국환 대표께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에 고무되고 상당히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평양을 가보니까 실제로 개성공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국통일의 미래상까지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걸려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

금이야말로 저희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근태 의장님이 갔다 오셔서 불의의 사태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위촉되지 말고 정치권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또 월요일에 개성공단 갑니다. 가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국환** : 개성공단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뭐가 할 것은 아니다, 신중히 하자는 뜻이고 만약에 북이 굳이 핵을 포기 안 하고 자기주장대로 간다면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은 단계이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당장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북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현** : 김근태 의장님, 현재 남북관계에서 열린우리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어렵지만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북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몇 가지 서운한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풀어나가야 되느냐,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풀린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의장께서 인도적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바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서 정말 남북정상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평화정비 체제가 주는 의미가 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서로 할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태** : 지금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밥을 못 먹는다라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UN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5당 대표들이 합의하면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화가 복원되고 6자 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2차 정상회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께서 질문하신 차례인데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 **한화갑** : 좋은 질문해 주세요.
- **강제섭** :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후에 북한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났으니까 인도적 지원은 해 주자고 스스로 한나라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무슨 인도적 지원을 지금 당장 또 해 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자, 한 대표님 지금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는지, 또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에 과연 북한 핵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 6자 회담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겠는지 또 내년 대선용의 정치용 정상회담이 아닌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당의 입장에서는 대선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미국하고 관계에서 풀리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을 바꾼다면 어느 정파에 이롭고 손해나고 이것을 떠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조지아주대학 박한식 교수가 북한에 갔다 와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남한에 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통성은 북한에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까지 찾아와서 했지 않나, 이것도 자기네들이 우월을 말한 것이고 내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체사상이 자기네들 최고 사상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체사상은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체제유지한 주체사상이지 국민을 위한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그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 **강제섭** :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신 대표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초창기에는 암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은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니까 아는데 암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개구리도 가마에 넣어서 찬물부터 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보불감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국민

들의 안보의식을 오히려 마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가안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오히려 하고 있다, 그리고 혼선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께서 아까 초당적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우리 국가안보는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국방대학을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 하에서 안보를 어떻게 유지해 가고 또 경제발전을 하느냐 이 문제만 쪽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북핵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북핵의 실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키는 이런 대국민 홍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각 당에서도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재섭** : 고맙습니다. 김근태 의장께 정말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전쟁이 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씀인지, 또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서 소신을 선뜻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전부 외교안보 라인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대통령께 적절하지 못한 사람은 걸러 내라고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지, 꼭 밀리고 밀려서 사고내면 결국 건교부장관 같은 사람 드러내고 전효숙 사태 같은 것이 나는데 의장께서 과감하게 국가를 위해서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근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잔인하고 참혹한 내전의 현장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25사변은 명백하게 북한이 남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렇다면 6·25사변은 법률적으로 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소봉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말씀에 대해서 송민순, 이제정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텐데 마치 인사권이 한나라당한테 있는 것처럼 월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재섭** : 다음 민주노동당 문 대표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시기와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이 북한을 가신 것,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은 둘째 문제 치고 가신 사실, 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찾아 가신 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타이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과 때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시기를 어느 때 정도로 이양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성현** : 우선 저는 정말 시기가 절묘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평양 가고 그 날 6자회담 재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북이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저희들이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6자 회담이 열리는 데 북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기본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6자 회담에서 분명히 우리도 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체념이 있다면 우리 그것까지 고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시기는 맞았고 오히려 저는 그 시기에 한나라당이 나 열린우리당이 같이 가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전시작전권은 언제든 봐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더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국민증심당의 신국환 대표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국환** : 시청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 방송을 들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셨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택문제는 우리 경제의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순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근본을 바꾸어서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또 안정되고 수요도 순리대로 가고 서민주택도 잘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정당 한 정부가 이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뭉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야 되는데 뭉쳐서 정부와 여당을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 **김근태** :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서민경제를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 반드시 막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 미래 기초를 닦아놓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다시 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입니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이야기를 꼭 들으셔도 여전히 갑갑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표들끼리 이야기한 중에 공통분모는 찾아서 책임있게 원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부터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노인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8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누구든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저희 노동자들이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이런 테서부터 민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이십니다.

○ **강제섭** :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능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신사적으로 하는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열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모질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지역에 가면 뗏다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건씩 하고는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여권은 지금 뗏다방 식으로 정계 개편을 해서 또 새로 이름만 바꾸고 주부장만 바꾸어서 다시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 책임 지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 평가받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끝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 **한화갑** : 국민 여러분, 밤늦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그 소임을 맡고 좋은 정책과 높은 도덕률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늘 같이 여기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는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전체 모여 있는 그 의사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열심히 받들고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도 이루어내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 11위, 12위권이 됐는데 이제 남북문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만 정착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2시간 토론으로도 다소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당 대표들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리인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또 정책을 개발하신다면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대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간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저희 토론회를 지켜 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와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정당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 직 선 거 법

- 제82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

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부 칙

- 제 3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
 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
 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정 당 법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
 다)을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
 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
 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
 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 (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 (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설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②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③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 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05.8.4>)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 (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 (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8.4>
-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 ④토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3.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 4.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 5.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6.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 ②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 (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 ②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외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 (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회·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 (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 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 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 (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11호,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2006 선거방송토론 백서

2006년 12월 인쇄
2006년 12월 발행

발행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관
Tel : 02-3473-9947,8

판권
소유

인쇄 : 정우문화사

<비매품>

본 백서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